

2018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발간사

혁신(革新)의 혁(革)은 ‘고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한자의 바른 사용을 위해 집필한 설문해자라는 책에서 짐승의 가죽에서 그 털을 다듬어 없앤 것을 혁이라 하며, ‘고친다’는 뜻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라틴어의 ‘innovatio’에서 유래된 영어의 innovation은 새롭게 하는 것, 획기적인 것을 뜻합니다. 즉, 혁신은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슈페터(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이 혁신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혁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혁신에 대한 정의나 주장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긍정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혁신을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술혁신과 협업,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보다 나은 공공기관을 만들어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공기관 협업과제’를 도입했던 해에 공공기관의 협업은 낮은 이해도와 관심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단순협조와 정보제공, 시스템 공동구축 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공공기관 간 협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인 과제발굴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모여 중지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오랜 시간 축적한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고유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 끝에 개발된 기술은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굴하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있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를 고치고 새롭게 하여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선정된 25개 우수사례는 기술 ‘혁신’을 통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였고, ‘협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국민신뢰 회복에 기여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우수사례집에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 책자는 이러한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관들과 공유하여 혁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미 있는 혁신사례가 바르게 공유되고 확산되어 공공기관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강 승 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 영 재**

Contents

I 혁신

- 01. 청년과 함께 세계 앞으로(AFLO) - 청년 활용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
- 02. 공공기관 최초 ICT 지능형 스마트 보상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11
- 03.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적 물산업 지원체계 마련 [한국수자원공사](#) 21
- 04. 빅데이터와 협업의 만남, “E-Green” 혁신 프로젝트 [한국에너지공단](#) 31
- 05. 지속가능한 혁신을 꿈꾸다! 따뜻한 IoT 사회안전망 서비스 [한국전력공사](#) 39

I 협업

- 06. 국민연금 빅데이터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연금공단](#) 49
- 07. 창업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R&D+특허패키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9
- 08. 취업취약계층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으로 양성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가치 실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1
- 09. LNG냉열을 활용한 동북아 콜드체인 구축 [한국가스공사](#) 81
- 10. 주택임대차등록 활성화 지원으로 주거안정 개선 [한국감정원](#) 93
- 11.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3
- 12. 해외시장 진출지원 서비스를 데이터로 업그레이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7
- 13. 외국인 불법취업 근절하고, 내국인 일자리는 보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127
- 14. 석탄광산을 태양광광산으로 전환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력 도모 [한국지역난방공사](#) 137
- 15. 100만호 임대주택 기반 주거생활플랫폼 “내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147

Ⅰ 시민참여

- | | |
|--|-----|
| 16. 주민 주도형 “폐광지역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강원랜드 | 159 |
| 17. 시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관리로 사회적 갈등 해결 국립공원공단 | 169 |
| 18. 시민참여형 지역 생태자산 발굴 국립생태원 | 177 |
| 19. 건강보험, 시민과 함께 설계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193 |
| 20.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로 국민복지체감도 UPUP! 사회보장정보원 | 203 |
| 21. 시민, KOICA 민관협력사업 현장으로의 동행 한국국제협력단 | 213 |
| 22. 2018마을미술프로젝트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25 |
| 23.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안전보건 MOOC*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 대규모 사용자 대상의 온라인 공개수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33 |
| 24. 시민 참여 뉴스 제작 지원 - 뉴스 아이템 제안은 시민이, 취재·보도는 언론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 | 241 |
| 25.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열린 국·공유재산 개발 한국자산관리공사 | 251 |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01

청년과 함께 세계 앞으로!(AFLO) - 청년 활용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청년과 함께 세계 앞으로!(AFLO) - 청년 활용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추진배경

수출하고 싶은 업체,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혁신이 필요한 수출

- (혁신필요성) 우리 농식품 수출은 일부국가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어 수출 시장다변화 필요의 목소리 대두
* 우리 농식품 日·中·美 수출의존도는 50%에 달함
- (업체애로) 반면, 수출기업은 수출전담인력이 1~2명에 불과하여 다변화 시장개척 여력이 없으며,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 언어 장벽 존재
- (청년실업) 능력은 있지만 취업할 곳이 없는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

농식품 수출업체("구인년")	청년 계층("구직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을 위한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나, 업체(106개사 대상) 69%가 인력 및 노하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실업률 8.6%, 체감 실업률 21.7% 등 일자리 문제 심각(통계청)

- (의견수렴) 수출업체, 대학교, 유관기관 등 각 분야별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 체계화

추진내용

공사·기업·청년 상생트리로 혁신을 만든다

- (사업목적) 열정과 역량 있는 청년과 중소수출업체 간 매칭으로 수출업체 해외진출, 청년일자리,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동시 해소
- (사업개요) 청년해외개척단(AFLO)과 중소수출업체, 공공기관(aT)이 함께 신흥시장으로 진출하여, 시장다변화 및 해외개척 사업수행
 - 현지어 능력 및 경험을 가진 청년(100명)을 선발, 수출업체와 1:1 매칭·해외 파견(14개국)을 통하여 다변화 성과창출
 - 청년이 파견국가에서 매칭업체 주재원으로 활약하며 바이어와의 거래성사 등 역할 수행
 - 농식품 수출업체의 시장다변화 애로를 청년 인력 육성 및 업계 수월로 시장다변화와 일자리 창출 동시 해소



□ 청년해외개척단 주요 임무

- (현지시장조사) 시장다변화 최우선 국가 검역·통관 절차, 농식품 수입 주요 바이어, 유통망, 소비자 선호 등 상품 시장 진출 시장조사
- (현지 수출 네트워크 구성) 현지 바이어, 분야별 전문가, 기 진출 수출업체 및 기 진출 유관기관 등 수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 (신규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바이어 대상 자사 상품 취급을 위한 바이어 미팅 및 거래 업체 발굴
- (공동마케팅) 수출업체와 공동으로 연계 마케팅 실시
- (시장조사결과 공유) 현지 파견을 통하여 습득한 시장 개척 노하우를 수출업체와 공유

추진성과 시장개척, 기업애로해소, 청년일자리,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 주요 성과

- (수출증가) 수출시장 다변화로 수출증가 및 농가 소득증대
 - 최우선 전략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실적 333.4% 증가('17년 대비)
- (시장개척) 신규품목 발굴 및 입점 성공, 수출기업 판로 확대
- (청년일자리) 수료 후 매칭업체, 공공기관 재취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1기 취업률 100%, 2기 50% 등 해외담당, 무역 등 관력직종 취업률 약 70%
- (인재육성) 청년들에 직업체험 및 글로벌경험 부여, 농식품분야 관심도 ↑
 -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으로 본인 성과 체득, 단원 교육을 통한 수출노하우 전수

-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실제 사례
- 브라질 김○○-A수출업체, 신고배, 마른김, 배즙, 갯감 등 500천불 계약
 - 대만 박○○-B수출업체 들기름 신규 수출실적 80천불 달성
 - 대만 우○○-C수출업체, 미니양배추 신규수출 360천불 예정
 - 남아공 국○○-한국배영농조합, 신선배 계약추진 중(20ft 초도물량)
 - 폴란드 김○○-D수출업체, 고추가공품 계약추진 중(20ft 초도물량)
 - 카자흐 김○○-E유통업체, 알마티 고급 슈퍼마켓 Esentai Gourmet, Colibri Gastromarket 쌀국수, 음료, 과자, 김치 신규 입점
 - 카자흐 이○○-F유통업체, Ramstore, Interfood 입점 계약진행 중

향후계획 **新남·북방 전략 중심 사업 확대, 우수사례 전파**

- 新남·북방 등과 연계하여 확대추진. 혁신 우수사례 전파 및 일자리 창출 공감대 조성

● 청년과 함께 세계 앞으로(AFLO), 시장다변화 필요성 대두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출시장은 일·중·미 등 일부국가에 전체 수출량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과도한 편중현상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강대국들의 무역갈등, 일본의 반한감정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글로벌 이슈 앞에서는 수출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여러번 겪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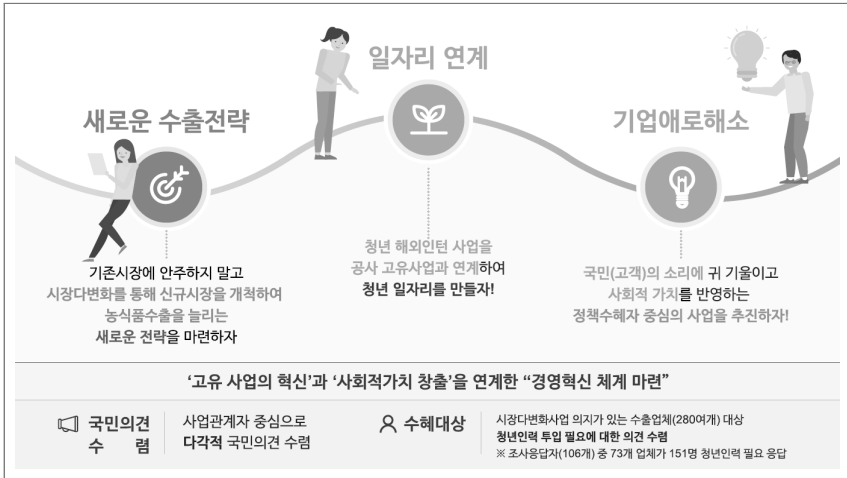
특히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인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급감 현상은 농식품 편중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주력시장 이외에 신남방, 신북방 등 미개척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수출영토 확장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 수출시장 다변화, 청년고용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중소기업들은 수출 전담인력의 부족과 해외 네트워크 부재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수출농업 육성과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aT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부응하기 위해 '청년이 곧 농업의 미래다'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aT는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고유사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사업방향 도출 과정



청년과 함께 세계 앞으로!(AFLO), 청년해외시장개척단(AFLO) 출범

그 방안의 첫 번째로 열정과 능력을 갖춘 국내에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신시장으로 파견, 주재원으로 활약하며 영세 수출업체들을 지원하는 ‘청년해외시장개척단(AFLO)’ 사업을 추진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AFLO(아프로,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 ○ (의미) ‘농식품 개척리더 조직’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의 신규시장을 청년이 앞에서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 	
--	--

매년 aT는 대내외의 수출환경을 분석하여 시장다변화 전략국으로 선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aT 직원과 청년개척단원들을 파견하여 현지 시장조사, 수출 유망품목 발굴, 한국농식품 홍보활동 등의 신규시장 개척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청년해외개척단원들과 국내 수출업체와의 1:1매칭을 통해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중 하나인 다변화 대상국의 언어장벽 해소, 중소기업들의 인력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청년활용 시장다변화 사업 주요내용

**청년해외개척단(AFLO)과 중소수출업체, 공공기관(aT)이 함께 신규시장으로 진출하여
시장다변화 및 해외개척 사업 수행**

aT 파일렛 요원 + 파일렛 사무소 중소수출업체(청년과 1:1매칭) 농식품청년 해외개척단(AFLO)

공공기관(aT) | 농식품수출 증가

시장다변화 사업 추진
예산 확보 / 시장개척 총괄지원
수출업체-청년 선발 / 사후관리 등

농식품 수출업체 | 해외진출

수출상품개발
신규수출제품 발굴 / 상품화, 현지화 /
경쟁력 확보 등

청년 개척단(AFLO) |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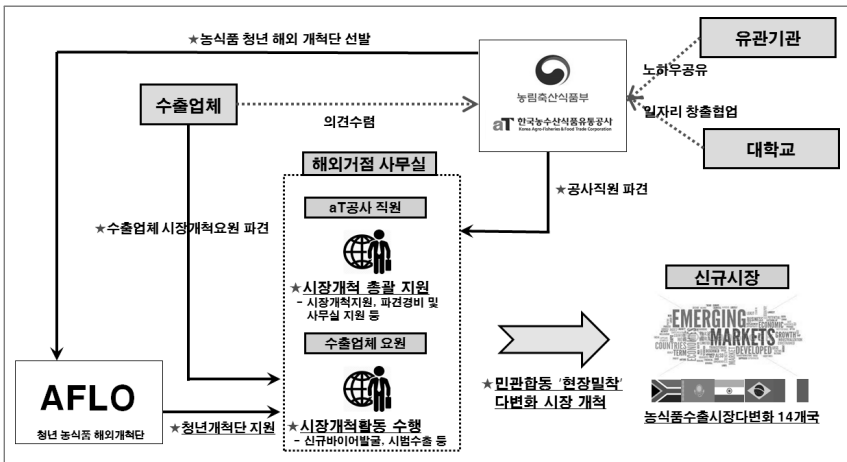
시장개척지원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상담,
시장개척 프로모션 등

**신규시장개척, 기업애로해소, 청년일자리!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공사·기업·청년 상생트리로 혁신을 만든다!**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Agri-Food Leader Organization

더불어 신시장개척 대상국가의 검역, 통관, 물류 정보를 비롯한 신유통채널 발굴 등에 청년해외개척단원들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지원 리포팅을 추진하였으며 현지 바이어, 유통업체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 우리 수출업체의 중장기 거래선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청년활용 시장다변화 사업 추진체계



청년과 수출업체가 함께하는 시장개척 성과

청년해외개척단원들의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 세일즈 로드쇼 참여와 바이어 매칭을 통해 대만 수입사를 적극 설득하여 한국산 양배추 약 12,000톤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러한 활발한 청년해외개척단원들의 노력으로 한국산 꼬꼬마 양배추가 대만의 대형유통매장(COSTCO)에서 진출하게 되었다.

이는 청년해외개척단원들의 노력과 aT의 시장다변화사업을 통해 대만 주요 대형유통매장인 코스트코에 한국산 양배추를 입점시킨 모범사례로서 이는 다른 신선품목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규모 수출물량의 신호탄이 되었다.

청년개척단(AFLO)의 시장개척 활동



또한 남미시장에 한국산 신선배와 신선감을 수출 공략하여 미개척시장으로 여겨졌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우리의 신선과실이 수출되는 성공 스토리들을 만들어 내는 등 이러한 작은 시작들이 미개척시장인 남미지역의 교두보가 되어 지금도 수많은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에 머물지 않고 청년해외개척단의 열정은 머나 먼 아프리카 대륙의 남아공까지 뻗어 나갔다. 남아공에 파견된 한 개척단 요원은 한국산 김치, 된장, 라면 등 우리 식료품 전반에 대한 바이어 미팅을 추진하면서 여러차례의 거절과 실패의 과정속에서 현지 시장에서의

셀링 포인트를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수출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남아공 현지 수입업체로부터 초도 수출물량으로 85천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청년개척단원 본인이 직접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업체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지금도 우리 한국 농식품의 수출 역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밖에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인도시장에 한국산 김치를 정식으로 통관시켜 인도인들에게 우리의 김치를 맛볼 수 있게 하였고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과실칩이 수출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모여져 2018년 한해 동안 청년해외시장개척단원들에 의한 농식품 수출액은 약 6백만불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주력 수출품목에 대비하여 그 비중은 크진 않지만 청년해외개척단원들이 열정과 땀으로 일구어낸 작고 소중한 성공들로서 그 과정에서 얻어낸 각종 노하우와 경험들은 앞으로 보다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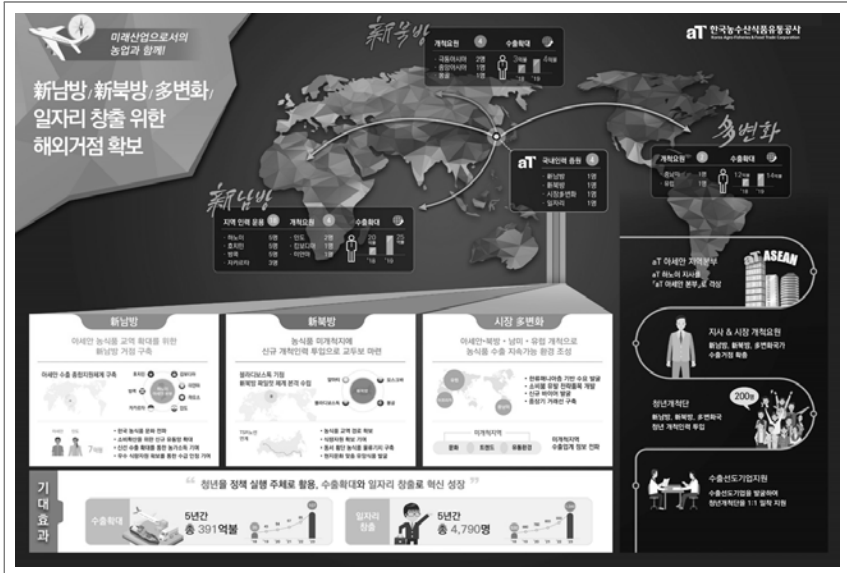
■ 청년해외개척단 한국농식품 홍보 및 수출성공 우수사례

구분	단원명(포상)	매칭업체	주요 활동내용
3기	남아공-김○ (개인_최우수)	(주)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전 업체 OJT교육 후 제품의 셀링 포인트를 파악 후 현지 바이어와 몇 차례의 미팅 주관 • 일반소비자 대상 품목에 대한 테스트 및 인터뷰 진행 후 매칭업체와 현지조사내용 공유 및 피드백 • 매칭업체의 수출상담회 현장 지원을 통해 현장 계약 85천\$ 등 달성 및 전년대비 194% 수출액 증가 등 성과 창출 * ('17년 남아공 수출실적) 68천불 → ('18년 현재) 247천불 ** (주요 수출품목) 라면, 김치, 된장, 비스킷 등 식료품 전반 • 청년개척단은 매칭업체의 정규직원으로 취업되어 남아공 주재원으로 지속 근무

● 신남방 / 신북방 / 다변화, 일자리창출과 수출증대

청년과 함께 하는 시장다변화사업을 통해 2018년 시장다변화사업 참여업체의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약 244%가 증가하였으며 aT가 최우선 전략국으로 선정한 남아공, 브라질, 카자흐스탄, 대만, 말레이시아, 폴란드 6개국의 2018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5.7%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은 신남방, 신북방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 수출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 농업인이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고 있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02

공공기관 최초 ICT 지능형 스마트 보상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최초 ICT 지능형 스마트 보상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 용지매수보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에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임
 - 용지매수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용재결이라 함
- 수용재결업무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업무의 방대함, 인력 부족으로 보상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업무 부담 과중에 따른 잦은 담당자 변경, 업무프로세스 개선 미흡 등으로 보상 담당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어 가고 있었음
 - 둘째, 사업인정(변경)고시의 관보게시 누락 등 행정적 실수가 발생하고, 적법한 협의의 조건 충족여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
 - 셋째, 보상비 지급시 수작업 작성으로 인한 이중보상 지출 우려와 횡령사고 등 회계 부정 위험도 상존하고 있었음
 - * 적법 협의요건 : 문서통지 3회, 전화 1회, 방문 1회 충족
- 수용재결 업무의 과중함, 비효율적 업무 관행 등에 따른 수용재결 지연은 공공지연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으며, 公社의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또한, 감정평가 후 1년 경과할 때까지 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이때, 감정평가 재실시에 따른 수수료 지출이 다시 발생하여 국고의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었음

추진내용

-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수용재결시스템」 구축
 - 보상 담당자가 보상 물건에 대한 적법한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보상 진행 정보를 입력하면, 협의불응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

하여 보상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신청서류를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公社의 전자수용재결 시스템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통해 검증·생산된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보상비 지급전표 생성방식을 수기입력에서 자동전표 생성방식으로 전환
 - 보상비 지급전표 수기 입력시 발생할 수 있는 전표의 중복 생성, 보상정보 임의 수정에 따른 고의적인 횡령 등 회계부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기 입력을 전면 금지하고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자동 전표생성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계부정 발생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추진성과

- 수용재결 소요기간 135일 단축, 수용재결 신청건수 21배 증가
 - 수용재결 업무의 전산화·표준화를 통해 기존 240일이 소요되던 수용재결 기간을 135일 단축하였으며, 보상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으로 수용재결 신청건수가 시스템 구축 이후 21배 증가하는 등 수용재결 지연에 의한 용지매수보상 및 공기지연을 완전히 해소
 -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미숙련 실무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수용재결 활성화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결로 상속자간 재산권 분쟁 등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정당한 재산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보상비 지급전표 생성시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
 - 보상비 지급전표 생성방식을 수기입력에서 시스템간 연계(용지매수보상시스템 ↔ERP)를 통한 자동생성 방식으로 전환, 보상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였음
 - 추가 관리비용 불필요로 연간 관리비용 9억원, 보상비 10억원 절감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지매수보상 지연 해소를 추가 관리비용 불필요로 연간 국고 1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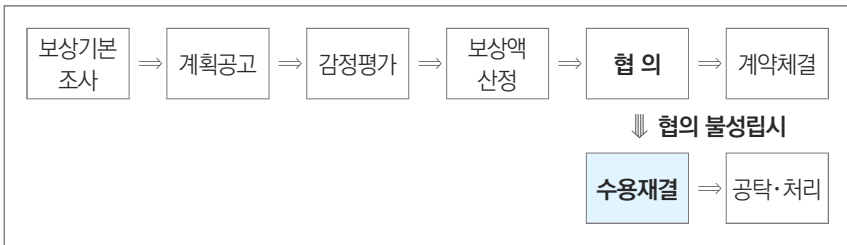
- 公社는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시스템」, 국토부의 「공공보상지원시스템」 등 여러 기관과의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보상 계획부터 수용, 공탁까지 보상 전 단계에 걸친 필지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SMS 등으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개인 재산의 사용·취득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

● 용지매수보상 자연으로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 저하

용지매수보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함에 따른 손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에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¹⁾ 불가능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용재결이라 한다.

■ [참고] 용지매수보상업무 Process



수용재결 업무는 신청 문서²⁾의 방대함, 비표준화 등으로 서류준비, 접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보상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던 업무였다.

업무부담 과중에 따른 보상업무 기피현상으로 담당자의 변경이 잦았으며,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필지별 보상정보를 수기로 관리하는 등 보상 담당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어 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인정(변경)고시의 관보게시 누락 등 행정적 실수가 발생하고, 적법한 협의 조건³⁾ 충족여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보상비 지급시 수작업 작성으로 인한 이중보상 지출 우려 및 횡령사고 등 회계 부정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 협의 불성립 사유 : 사망(상속자연), 거소불명, 미등기, 권리설정(압류, 가처분 등), 보상가저렴 등

2) 수용재결 신청 문서 : 총 26종, 1지구당 약 2,000페이지 분량

3) 적법 협의요건 : 문서통지 3회, 전화 1회, 방문 1회 충족

수용재결업무의 문제점

방대한 업무량	필지별 관리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 양식 미비, 수용재결 신청 문서의 방대한 분량(* 26종, 1,000~2,000쪽) → 서류준비, 접수 등에 4.5개월 소요 → 서류 미비 등 빈번한 오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기관리 업무관행, 담당자 수시 변경 등 → 필지별 적법 협의요건 충족여부 등의 연속성 있는 관리에 어려움 존재 * 적법 협의요건 : 문서통지3, 전화1, 방문1

이러한 수용재결 업무의 과중함, 비효율적 업무 관행 등에 따른 수용재결 지연은 공기지연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으며, 公社의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감정평가 후 1년 경과할 때까지 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데, 감정평가 재실시에 따른 수수료 지출이 다시 발생하면서 국고의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수용재결시스템」 구축

보상 담당자가 보상 물건에 대한 적법한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보상 진행 정보를 입력하면, 협의불용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하여 보상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신청서류를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公社의 전자수용재결 시스템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통해 검증·생산된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였다.

적법 협의요건 충족 여부 자동검증 자료

수용(사용)재결신청 적법성 검토서		신청요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적법성 검토사항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검토보고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① 계 호	행정지구 복귀대상지	사업장설립요건	사업장설립요건 발생에 일치하는지	① 사업장	적법
사업장명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세 고 시	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전관 등의 규정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② 재결신청의 적법 여부	적법
신청유형	행정·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지정요건	지정요건에 일치하는지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③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신청일자	2019.09.10	시 설 기 간	토지수용요건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실시행)인지에 일치하는지	④ 재결신청의 종료 여부	적법
신청대상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의 정 장 제 도	토지수용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행정목적수용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⑤ 사업장이 인허가 절차 완료된 것인지	적법
소유자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권리제한	인용·지대권·등기소유물권등지물지대권등지대권 등 법외권리 존재하는지	⑥ 사업장인의 권리 부담	적법
② 신청요건 충족률	100%	영양제한	영양제한이 부과되어 재결신청의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지는	⑦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농업진흥지역 제정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⑧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사용신청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⑨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⑩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⑪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⑫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⑬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⑭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⑮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⑯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⑰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⑱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⑲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⑳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㉑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㉒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㉓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㉔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㉕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㉖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㉗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㉘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㉙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㉚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㉛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㉜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㉝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㉞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㉟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㊱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㊲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㊳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㊴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㊵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㊶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㊷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㊸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㊹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㊺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㊻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㊼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㊽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㊾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주 목 조	국유지(국유지) 반환(국유지) 반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폐지 여부 및 농업진흥지역, 세외소득 지급 결정사항을 검토하는지	㊿ 사업장 지정·변경·폐업 여부	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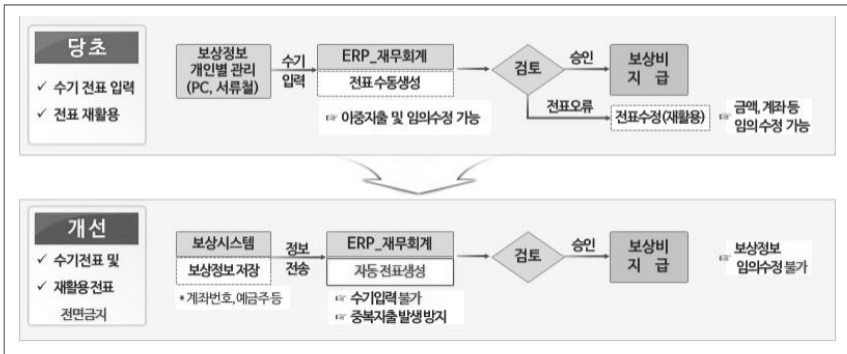
전자수용재결신청시스템 단계별 개발 현황

구분	1단계	⇒	2단계	⇒	3단계
주요내용	〇社 전자수용재결시스템 구축		중앙 토지수용 시스템 연계		지방 토지수용 시스템 연계

- 보상비 지급전표 생성방식을 수기입력에서 자동전표 생성방식으로 전환

보상비 지급전표 수기 입력시 발생할 수 있는 전표의 중복 생성, 보상정보 입의 수정에 따른 고의적인 횡령 등 회계부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기 입력을 전면 금지하고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자동 전표생성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회계부정 발생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보상비 지급절차 개선



● 용지매수보상 업무의 효율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 수용재결 소요기간 135일 단축, 수용재결 신청건수 21배 증가

수용재결 업무의 전산화·표준화를 통해 기존 240일이 소요되던 수용재결 기간을 135일 단축하였으며, 보상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으로 수용재결 신청건수가 시스템 구축 이후 21배 증가하는 등 수용재결 지연에 의한 용지매수보상 및 공기 지연을 완전히 해소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가 필지별 수기 관리(엑셀 등) → 협의요건 불충족 필지 발생 등으로 수용 재결의 장기화 악순환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을 통한 지속성 있는 관리 및 적법 협의 요건 충족여부 시스템 검증 → 장기화 악순환 고리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재결 신청서류 수작업 준비 → 서류준비, 접수에 135일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재결 신청서류 시스템 일괄출력 → 서류준비, 접수 API전송 방식(135일 단축)

* 전북 회현1지구 시범적용결과 135일 단축 확인(135일→ 실시간 전송)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미숙련 실무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통한 수용재결 활성화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결로 상속자간 재산권 분쟁 등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정당한 재산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토지수용위원회 입장에서는 시스템 검증을 거친 신뢰성 있는 신청서류를 받게 됨으로써 서류의 접수·검토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공익사업의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수용재결신청시스템 개발 전·후 비교

수용재결 소요기간 단축					수용재결 신청 건수			
Process	종전	개선	증감	비고				
• 재결신청서 작성	45일	-	△45	135일 단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수용재결신청 활성화 실현 → 용지매수보상지연 완전 해소!</p> <p><수용재결 신청건수></p> <p>시스템 구축</p> <p>6지구 4</p> <p>56</p> <p>127건 21.1배</p> <p>133</p> <p>16년 17.5월 17.12월 18.12월</p> </div>			
• 접수(수용위원회)	60일	-	△60					
• 검토(수용위원회)	30일	-	△30					
• 시군 게시판 공고	15일	15일	-	법적·행정적 소요기간				
• 조사 및 심리	30일	30일	-					
• 재결 및 사용개시	60일	60일	-					
합 계	240일	105일	△135					

■ 시스템 구축 전·후 수용재결 신청건수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6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133지구(증 127지구, 21배)

- 보상비 지급전표 생성시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

보상비 지급전표 생성방식을 수기입력에서 시스템간 연계(용지매수보상시스템↔ERP)를 통한 자동생성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상정보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개선 전(AS-IS)	개선 후(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가 보상전표 직접 입력·기안 → 이중 전표생성에 따른 중복 지출 및 고의적 횡령 등 회계부정 위험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지매수보상시스템에서 전표 자동생성 및 ERP(재무회계)로 전송 → 회계부정 가능성 구조적 차단(투명성 ↑)

- 추가 관리비용 불필요로 연간 관리비용 9억원, 보상비 10억원 절감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지매수보상 지연 해소로 추가 관리비용 불필요로 연간 국고 19억원(관리비용 등 9억원 + 보상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 1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시 연간 1,013억원(관리비용+보상비)의 국고 절감이 크게 기대되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43조 보상전문기관인 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17개 지방공사 등 총 22개 보상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타 공공기관의 보상업무 추진시 기존 수작업 업무처리를 전자수용재결시스템을 적용하여 업무 자동분석 등 우리나라의 보상업무에 대한 혁신으로 보상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 단계까지 One-STOP 연계처리로 스마트한 보상 실현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리비용 등 보상비 절감 효과

상시적 수용재결 가능 ↓ 용지매수지연 방지 ↓ 추가관리비용 불필요 ↓ 관리비용, 보상비 절감	구분	公社		公社 시스템 확대 보급	
		관리비용 등 횟수	관리비용	보상비 증가 (지가상승)	관리비용 등
	중감	△105건	△9억원	△10억원	△136억원

* 출처 : 한국토지보상협회, 한국감정원

4) 보상정보 : 토지 소유자 계좌번호, 예금주 등

公社は 향후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시스템」, 국토부의 「공공보상지원시스템」 등 여러 기관과의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유도하고 있으며, 보상 계획부터 수용, 공탁까지 보상 전 단계에 걸친 필지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SMS 등으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개인 재산의 사용·취득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03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적 물산업 지원체계 마련

한국수자원공사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적 물산업 지원체계 마련

추진배경

- 글로벌 물위기 확산으로 연간 800조원 규모인 전세계 물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하이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발전 중
- 반면, 국내 물산업은 수자원·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마무리 단계 진입과 기술혁신 및 해외진출 부진으로 갈수록 정체·위축되고 있는 실정
-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축적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물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해외수출 원스톱 지원에 착수

추진내용

- 물관리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을 통한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 개최, 기술 컨설팅 및 테스트베드 제공, 협업과제 수행, 시범 구매, 해외 동반진출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고속성장 지원
- 전국 111개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여 물산업 혁신기술 실·검증 지원
 - K-water가 운영·관리 중인 시설을 중소·벤처기업에 무상으로 개방·공유하고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여 혁신기술의 성능 검증 및 적용실적 확보 지원
- 해외 현지화 시범사업을 기획·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실현
 - K-water의 물관리 전문성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 물관리기술”로 브랜딩하고 해외 현지의 물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여 관련 중소기업 제품을 현지에 설치·검증함으로써 실질적 수출성과 창출 지원

추진성과

- 물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48개社 발굴·육성 및 하이테크 일자리 확대
 - K-water 협력 스타트업 글로벌 공모전 수상(3건), 투자유치(34억원), 정부 지원 사업 선정(40억원) 등 고속성장 기반 마련
- 실증 테스트베드 51건 제공 및 중소·벤처기업 매출 245억원 창출에 기여
 - 수처리 17, 녹조 9, 관망 7, 4차 산업혁명 7, 수력 2, 수상태양광 4, 기타 5 등 51개 혁신기술에 대해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및 기술컨설팅 지원
 - 개발 및 실용화가 완료된 기술에 대해 약 245억원의 매출 발생

-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한 33개 기업이 82억원 해외수출 실적 달성
 - 또한, 베트남, 필리핀, 요르단 등 3개국 5개 시범사업에 참가한 10개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화 성과 달성 및 190억원 규모의 후속수출 진행 중

향후계획

- K-water 오픈 플랫폼을 국가 차원의 물산업 원스톱 지원시스템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물산업 혁신의 허브로 조성
- '22년까지 400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하이테크 일자리 12,000개 창출

● 글로벌 물위기 확산과 국내 물산업 현황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의 중요성이 국제 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하였다. 글로벌 물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세계 물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하이테크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세계 물산업은 연간 800조원 규모이며, 2040년 경 연간 1천조원 규모의 새로운 하이테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수자원과 상하수도의 통합 등 통합 물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물산업은 수자원·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마무리 단계 진입과 기술혁신 및 해외진출 부진으로 갈수록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산업 기술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성상 리스크가 매우 커서 개별 기업 차원의 기술 혁신과 해외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한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개방과 공유의 물산업 육성 플랫폼

이에 국내 유일의 물전문 공기기업인 K-water는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물시장 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산업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지난 50여년간 축적해온 물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개방·공유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더욱이 작년 6월 환경부로 중앙정부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 여건이 마련되면서,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더욱 긴밀한 협업이 가능해졌으며, 기술·수출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물기업 니즈 파악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물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필요한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였다.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성능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기술·경영 컨설팅, 해외수출 채널 확보 등이

주요한 니즈로 파악되었다. K-water는 이러한 니즈를 One-stop으로 해결하고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물산업플랫폼센터’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2022년까지 400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1만 2천개 물산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

물산업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다

보수적인 물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살아남기란 유독 어렵다. 동시에 물분야는 UN 등 국제기구가 선정한 가장 스마트 기술혁신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물분야에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8년 1월 국내 유일의 물산업 분야 창업·보육 공간인 ‘K-water 스타트업 허브’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K-water연구원 내에 조성하였다. 분기별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이 개최되고, 보육 인프라를 갖춰 네트워킹이 이뤄지고 있으며, K-water의 최고 전문가들과 스타트업 간 컨설팅 및 협업·교류를 활발히 하며 물산업의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8년도에 발굴·육성한 스타트업은 48개사로 기술 멘토링, 협업과제 수행, 테스트 베드 및 창업공간 제공, 국내외 주요행사 공동 참여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34억원의 민간투자 유치, 4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사업 선정, 연간 신규 일자리 30%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K-water 스타트업 허브 개소



제1회 물산업 스타트업 포럼



- K-water와 만나 기업가치 4배 성장, '넥스트 유니콘' 선정

실시간 박테리아 검출이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제1기 협력 스타트업 '쥬더웨이브'는 실시간 IoT 수질분석 센서를 개발하던 중 K-water와 만나게 되었다. K-water에서도 수돗물의 실시간 품질관리와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찾는 중이었다. 협력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이후 K-water와 함께 2018년 3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포럼에 공동 참여하여, 전세계 물관련 정부기관, 글로벌 기업들에 기술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후 싱가포르 국제 물주간과 SWITCH 2018에서 아시아 지역 혁신 스타트업으로 선정되었고, 미국 바이오 분야 유망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RESI에 초청받아 2위를 수상하는 등, 물산업 뿐만 아니라 의약·식품산업까지 적용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초기 투자 다음 단계인 Series A 레벨의 3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다. K-water와는 수돗물 품질관리와 생산공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검출 기술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인 수지정수장 테스트베드 적용을 거쳐 빅데이터 축적과 기술 검증 중이며, 제품 양산과 해외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K-water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1년만에 기업가치가 4배 성장하였으며, 정부 모태펀드 주관기관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넥스트 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공공시설을 기업에 테스트베드로 개방, 물산업 기술개발 지원

- 물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니즈 파악

물산업 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사용될 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하고 현장 적용실적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기술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기술 성능향상 및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술의 적용실적이 부족하여 판로확보 등 사업화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하였다. 환경부 조사(2013)에서 환경기업의 94%가 기술개발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한 실적확보 지원, K-water의 물산업 테스트베드 Needs 조사(2017) 시 응답기업의 50%가 신제품 개발 및 판매 시 애로사항으로 실증기회 및 적용실적 부족으로 응답하는 등 지속적인 실검증 기회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었다.

- K-water 시설을 기업에 테스트베드로 개방·공유

K-water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시설을 포함하여 K-water가 운영·관리 중인 전국 111개 시설을 기업에 테스트베드로 개방하였다.

테스트베드 운영 첫 해인 2018년, 상·하반기 및 수시 과제 공모를 통해 수처리, 4차 산업혁명, 관망 및 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50개 기업, 51개 기술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였다. 기업들은 테스트베드 참여를 통해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새로 개발한 기술의 성능 실검증을 통해 기술을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K-water는 단순한 시설의 개방을 넘어,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고성능 달성을 위하여 K-water 내부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원 및 사업담당자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기술의 개선사항 및 사업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은 수요자의 요구 성능에 맞춘 기술개발을 통해 K-water와 참여기업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물산업 기술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었다.

- 물산업 테스트베드 성과 확대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향후 신기술 개발 또는 기술 개선 시 K-water의 물산업 테스트베드에 재참여를 희망하는 등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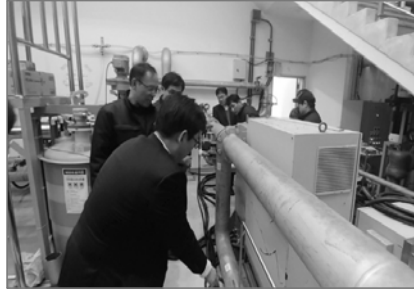
또한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51개 기술 중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가 진행된 기술에 대해 약 245억원의 매출 발생에 기여하는 등 테스트베드가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ater는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외 물관리 기관과 테스트베드 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더욱 다양한 실검증 시설을 확보하고 성능이 확인된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 운영 협약 체결



테스트베드 운영



● 해외 현지화 시범사업, 글로벌 물문제 해결

- K-water,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개발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일자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계 물시장은 동남아, 남미를 중심으로 연 평균 4% 이상 성장 중이다. 정부는 해외 전시회 참여,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 중소기업의 수출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자체 구매력이 부족하여 단순 홍보가 아닌 운영 효율화, 누수저감, 에너지절감 등 가시적 효과가 있는 수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해외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해외 현지화 시범사업이라는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였다.

해외 현지화 시범사업이란 한국수자원공사의물관리 전문성과 중소기업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 물관리기술”로 브랜드化하고 수원국의 물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 관련 중소기업 제품을 현지에 설치·검증함으로써 실질적 수출 브랜드 확보를 지원하는 K-water형 新 수출지원 프로그램이다.

- K-water,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베트남 물관리 전문기관, 필리핀 세부주 산타페시 등 물관련 전문기관과 상호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전략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분야별 전문가 활용 현지 진단을 통해 해당 국가가 안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중소기업 기술 활용)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을 현장에 설치, 검증하는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현지진단, 운영관리 노하우 전수, 현지인력 초청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원(기자재비 등 확보)을 마련할 수 있었다.

- K-water, 중소기업 매출확대, 일자리 창출까지!

베트남 수도시설 현대화 및 누수저감 시범사업, 필리핀 산타페시 수상태양광 시범사업, 요르단 지하수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 총 3개국, 5건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현지화를 추진하여 10개 참여기업의 해외 현지화 성과를 달성하였고, 해외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해외 매출액 및 일자리가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중 누수저감사업과 수상태양광 시범사업이 후속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9년 중 실질적 계약체결이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가장 직접적 효과 창출을 위해 기논의된 현지화 시범사업 및 수출성과 달성 사업에 역량 집중할 것이다. 또한 수원국별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물산업 우수 중소기업 기술의 현지화가 가능함에 따라 실질적 중소기업 해외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해외 수출 활성화 정책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수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산업 수출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2018년 스마트 물관리기술 시범사업 추진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04

빅데이터와 협업의 만남, “E-Green” 혁신 프로젝트

한국에너지공단

빅데이터와 협업의 만남, “E-Green” 혁신 프로젝트

추진배경

- 제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접목한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업무혁신의 필요성 증대
- 新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에 맞춰 기업의 투자 후순위인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발굴 노력 필요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인 반면, 기업의 투자는 위축 상태
 - 에너지가격하락 등의 환경변화로 인한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 국면에 적극 대응 필요
- 찾아가는 능동적인 홍보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정책자금의 실패러다임 제시
 - 기존 정부 정책자금의 특성인 찾아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동적인 홍보체계에서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금융기관의 기업마케팅 전략 및 전국 지점망의 활용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홍보체계”로의 전환
 -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新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맞춰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내용

-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실수요자 지원 강화
 - 공단 내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설의 개체 및 신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활용 가능성이 큰 타깃 업체를 선별하여,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과 공단이 협업을 통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타깃 업체 중심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가능
 - (실수요자 중심 지원강화) 실제 정책자금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집중 안내하고, 해당 업체들의 관리를 통해 기업의 자금지원 기회를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유도·발굴

- 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예산·인력 증대 없는 업무혁신 및 고객편의 향상
 - ① 합리화자금 취급 우수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기업대출상담사)을 활용한 타깃 업체 대상 맞춤형 자금상담·홍보
 - ② 합리화자금 취급 금융기관과 “E-Green지점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타깃 지역을 중심으로 고객접점(touch-point)의 자금지원 상담창구의 다원화
 - ③ 신규 발굴한 자금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E-Green 추천 프로세스*의 적용으로 고객 편의 제공
 - * E-Green추천프로세스 : 상시 접수, 제출 서류의 일부 면제 및 추천 기간의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별도 추천 프로세스 신설

추진성과

- (금융기관 협업확대) 예비수요처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E-Green 지점 확대·운영('17년 97개 → '18년 109개)하여 지역·수요처별 효율적 사업 홍보
-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정책자금 이용활성화) 능동적인 홍보·안내 강화로 신규투자 수요 215개 626억원 발굴('17년 대비 440억 증가)

'17년 실적		'18년 실적	
업체 수	지원 금액	업체 수	지원 금액
61개	186억	215개	626억

향후계획

- E-Green 지점 추가 및 확대 운영('19. 3~)
- 他정책자금 운영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E-Green 혁신 프로젝트 활동 노하우 제공 등으로 정책자금 운용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

●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융자서비스

우리나라에 정책자금을 융자·관리하는 기관이 많은데, 대부분 찾아오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수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합리화자금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업이나 국민이 자금을 신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처리해주는 수동적인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역별로 거점이 부족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약한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 에너지공단 중심의 찾아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동적인 업무 체계를 민관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능동적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E-Green” 혁신 프로젝트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금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과 지역을 선정하고, 금융 기관과 협업하여 프로세스 혁신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단이 했던 사업을 거꾸로 들여다 본 것이다. 고객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객을 찾아가는 개념으로 혁신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투자 수요의 신규 발굴 및 자금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E-Green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 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자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단과 약정을 통해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17개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 공단의 자금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층 등을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과제 혁신에 반영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타깃 고객 발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했다.

공단에 축적된 기업별 노후보일러 보유현황,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실적 및 투자 계획, 에너지진단 업체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시설 교체 및 신설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¹⁾ 활용 가능성이 큰 4천여개 타깃 업체 및 14개 타깃지역 리스트를 만들었다.

빅 데이터 활용 분석 절차

과정	내용
① 데이터 수집	에너지절약시설 신설·개체 등 투자 수요가 있는 업체 추출을 위해 공단 내부 사업 Big data 수집
↓	
② 유효 데이터 추출	수집된 Big data 중 노후보일러 보유현황,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절약계획 등 중요성 높은 유효 데이터 추출
↓	
③ 데이터 활용성 검토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및 정보의 공개범위 등 E-Green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실무적·제도적 애로사항 검토
↓	
④ 기본 데이터 구축	원시 데이터의 중복값 제거, 구분코드 생성 등 원데이터의 갱신·가공에 용이한 Primary Data 구축
↓	
⑤ 가공 데이터 분석	기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에너지절약시설 개체 및 신설의 여지가 큰 업체 리스트(target list)를 발굴
↓	
⑥ 분석 데이터 활용	추출한 최종 데이터 “합리화자금 타깃 리스트”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현장중심의 홍보에 활용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우리은행, 광주은행’과의 E-Green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리화자금 타깃업체 리스트를 공유해 정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빅데이터(28,000여개)를 분석한 후, 예비 수요처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별 E-Green 지점을 선정·운영하여(2017년 97개 → 2018년 109개) 지역별·수요처별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홍보할 수 있게 했다.

협업 은행에서는 기업전문 상담 직원의 전문적 안내와 대출가능 여부의 즉각 판단을 통해 행정소모 개선 및 고객불편 최소화가능해졌다. 필수 제출 서류인 대출심사 사전확인서도 생략하는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

E-Green 지점을 통한 현장 직접 안내로 정책자금 지원 내용을 모르고 찾아오는 고객에게도 선제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투자 필요성이 큰 업체에는 공단과 은행 직원이 함께 방문하여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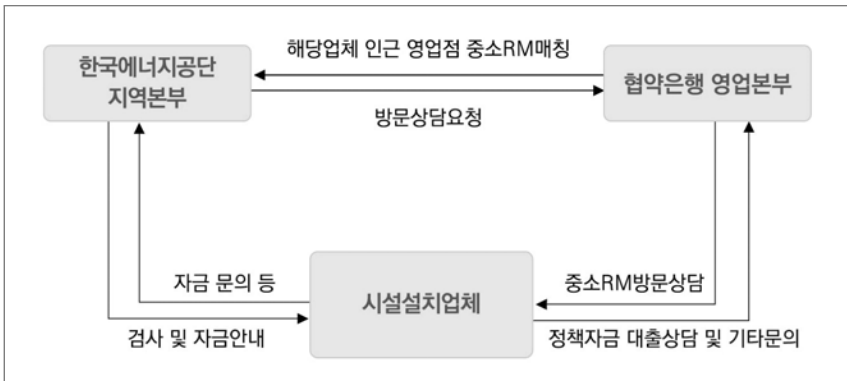
능동적인 홍보안내 강화로 노후 보일러, 고효율기자재 등 215개 626억원(2017년 61개 186억원)의 신규 설비 투자 수요를 발굴했다.

E-Green 프로젝트를 공단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공단과 협업 금융기관 지역 채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단과 은행 담당자가 함께 방문하여 합리화자금 대상 설비 안내부터 대출 안내까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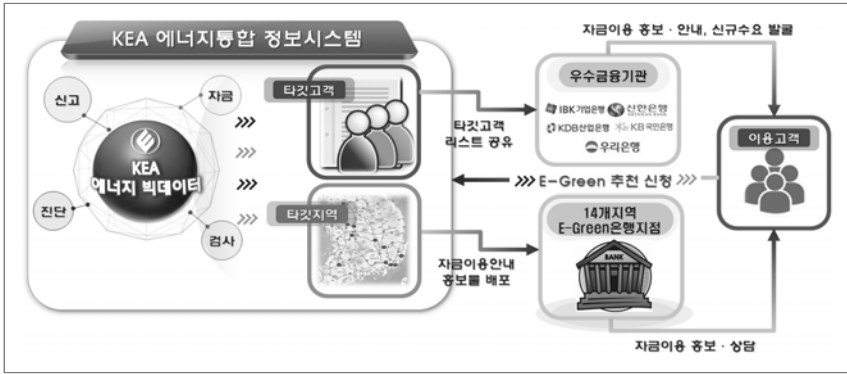
공단(12개의 지역본부)과 협약 체결을 한 금융기관(은행 영업점)의 각 지역 채널 간 상호 공조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 E-Green 프로젝트의 확산에 기여했다.

자금 수요 업체의 요청이나 설비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협업 은행이 공단에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이 동행·방문하여 자금제도에 대해서 안내하였고, 공단의 지역본부별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각 지역본부와 매칭된 협업은행 지점에 연락해 방문 상담도 할 수 있게 했다.

공단 지역본부 & 협약 금융기관 지역 채널 협업 체계도



한국에너지공단 E-Green 프로젝트 체계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 성과 및 노하우 공유로 정책자금 운용 패러다임 전환

E-Green 프로젝트 공유·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18년 11월 공단은 E-Green 프로젝트의 모델 및 사업 주요 성과를 타 용자기관에 공유·확산하기 위해서 환경산업 육성자금 용자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공단은 빅데이터 활용 및 금융권 협업을 통한 E-Green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했고, 앞으로도 타 정책자금 운영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자금 운용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예정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05

지속가능한 혁신을 꿈꾸다!
따뜻한 IoT 사회안전망 서비스

한국전력공사

지속가능한 혁신을 꿈꾸대! 따뜻한 IoT 사회안전망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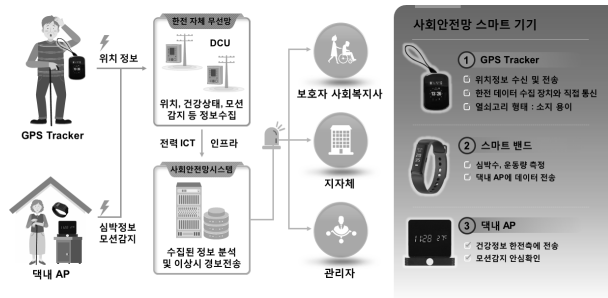
추진배경

-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어르신 실종 및 독거어르신 고독사 증가
- 사회적 약자인 치매·독거 어르신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 필요

추진내용

- 서비스 개요 : 한전의 에너지 IoT 인프라를 활용한 저비용 공공서비스 제공
 - 치매 노인 위치 확인
 - GPS Tracker의 위치정보를 한전 원격 감침망으로 수신
 - 생활환경 학습하여 행방 불명시 사회복지사 및 보호자에게 위치정보 제공
 - 독거 노인 안심서비스
 - 스마트 밴드의 심박정보를 주기적으로 취득
 - ☞ 정상범위에서 이탈시 보호자나 관련기관에 자동 통보
 - 연락 두절시 댁내 AP의 모션 감지를 통한 안심정보 제공

□ 서비스 구성



추진성과

- (비용 최소화) 한전 인프라 활용 최소비용으로 사회안전 서비스 제공

구분	기기값	스마트폰	통신요금
통신사	20만원	수십만원	2,000원/월
한 전	20만원(한전제공)	불요	무료

□ (서비스 개선) 기기 동작시간 및 통신 커버리지 확대

구분	종 전	개선후	효과
스마트밴드	사용시간 : 6시간	사용시간 : 3일	사용 편의 제고
위치확인	스마트밴드에 포함 (배터리소모 과다)	GPS Tracker로 분리 (저전력/경량화)	서비스 이원화
택내 서비스	불 가	모션감지	택내 재실 확인 가능
통신범위	150~200m	500m	설치비 절감

□ (사회적 가치 실현) 지자체와 상생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일자리 창출

- 지자체와 상생 협업모델 제시 : 한전 IoT 기술력 + 광주시 사회복지 협업
- 중소기업 R&D 협업(약 4억)으로 7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향후계획

-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한 피드백 및 광주시 사회안전망 확산 사업 시행
- 취침/기상/복약/식사 시간 음성안내, 온습도 측정을 통한 생활 패턴 학습 등 AI, 머신러닝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추가
- 타 지역 지자체 협업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 전국 취약 독거 어르신 35만명 중 50% 보급시 약 17만명 혜택

● 독거노인 고독사 및 치매노인 실종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유엔 등 국제기구는 노인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비중이 7.3%에 이르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17년 이후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7년에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33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50명, 2017년 835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2,103명, 여성 1,228명으로 남성이 많았다.

노인 고독사가 느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살아가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통계청의 추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홀몸노인 인구는 2014년 115만2,673명, 2015년 120만2,854명, 2016년 126만6,190명, 2017년 133만6,909명 등으로 늘었다. 이러한 독거노인들 중 빈곤에 시달리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약 64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취약 독거노인은 2015년 54만9,000명, 2016년 57만7,000명, 2017년 61만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치매 노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14년 8천207건, 2015년 9천46건, 2016년 9천869건 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1만308건을 기록했다. 치매노인 실종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치매노인에게 배회감지기와 인식표 보급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급률은 미미한 상태다. 낮은 보급률의 이유는 치매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기피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감지기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치매낙인'으로 비쳐질 수 있고 감지기 구입 및 통신회선 비용도 저조한 보급률의 원인 중의 하나다.

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고독사 및 치매노인 실종문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 등이 함께 나서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2014년 나주혁신도시 이주 이후,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은 사회공헌 활동을 중요한 책무로 보고 전국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 왔으며,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전력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었다. 최근 사물인터넷 기술이 급부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한전의 발자취

- 한국전력-광주광역시 사회안전망 MOU 체결

2015년 5월 29일 한국전력과 광주광역시는 치매·독거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전은 지역사회공헌과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IoT 기반 에너지 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함께 소외·취약 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전력은 지능형 전력계량 통신망(AMI망)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주광역시는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사회안전망 서비스 운영 총괄을 맡기로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한전은 에너지 IoT 분야 실증경험을 확보하고, 광주시는 사회안전 분야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사회안전망 구축 MOU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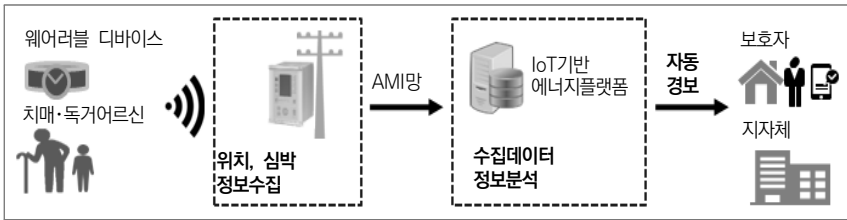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과 광주광역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시스템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규격 제정과 기술 검증 계획 수립,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제공, 서비스 최적화 시행 방안 검토, 전력ICT 융복합 기반의 추가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과제 발굴 등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구체적인 대상규모와 세부 방안 협의를 진행하였다.

• 기초체력 확보 :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시범 적용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기본 개념에 따른 데이터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대상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위치 및 심박정보가 한전의 AMI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수집 서버를 거쳐 광주광역시 사회안전망 운영서버로 전달된다.

■ 사회안전망 기본 개념도



이를 구현하기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데이터 수집 게이트웨이가 개발되었고, 한전 내부망에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한 서버와 광주시 노인복지관 생활관리사가 사용할 운영 프로그램 및 서버가 구축되었다. 10여 차례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각 기기의 기술규격이 결정되었고, 시범서비스 대상 지역은 AMI 보급률이 높고 저소득 독거 노인이 많은 광산구로 선정되었다. 광산구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256대의 데이터 수집 게이트웨이가 시설되었으며 50대의 웨어러블 팔찌를 보급하여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제일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웨어러블 팔찌 착용을 기피하는 것이었다. 외형이 투박하여 전자팔찌를 연상하게 된다는 의견과, 사용시간이 짧아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호소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기를 개발해야 했다. 하지만 제한된 배터리 용량에 GPS 수신 모듈, 심박측정 모듈, 무선통신 모듈까지 동작해야 하니, 사용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웠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했다.

● 혁신의 시작, 사용자 및 실무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 실무자 의견 수렴

서비스 대상자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이지만, 실제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노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들이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 방향을 설정할 때 생활관리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사용자들의 요구사항과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 스마트 시티와 및 광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노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들과 개발 협력사가 함께 모여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논의 결과 웨어러블 팔찌의 사용시간을 늘리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용 스마트 밴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위치확인 기능은 별도의 전용 기기(GPS Tracker)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즉 심박측정과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IoT 기기를 이원화하고 각 서비스에 해당되는 대상자도 분리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위치확인 및 생활환경 학습이 필요한 경증 치매 독거노인에게는 GPS Tracker를 배포하고, 심박측정이 필요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독거 노인에게는 상용 스마트밴드를 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 동작시간은 늘리고, 댁내 서비스까지

상용 스마트 밴드는 착용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미려한 디자인을 보유하고, 사용시간은 길면 5일, 평균적으로 3일까지 가능한 국산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상용 스마트 밴드에는 한전 무선 통신 규격인 LoRa 통신 모듈이 없고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인 BLE(Bluetooth Low Energy) 통신 모듈만 있기 때문에 댁내에 설치 가능한 AP(Access Point) 기기를 개발하여 BLE↔LoRa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생활관리사들이 돌봄 담당 어르신들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댁내 재실 여부만 확인되어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돌봄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착안하여 댁내 AP 기기에 모션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원격에서 댁내 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인 독거 노인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수시로 댁내 AP 기기의 전원 코드를 뽑을 위험이 있어서, 댁내 AP 기기의 상시 전원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서제 형태로 개발하였다.

스마트밴드



택내 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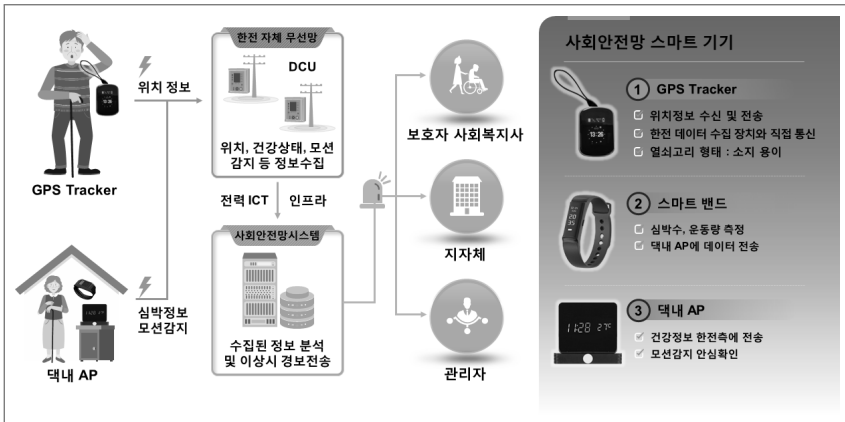
GPS Tracker



경증 치매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GPS Tracker의 경우 저전력, 경량화에 집중하였다. 또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몸에 기기를 착용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 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팔찌나 목걸이와 같이 몸에 차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집 열쇠 꾸러미는 어르신들이 외출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점에 착안하여 GPS Tracker를 열쇠고리에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통신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자체 메모리에 최근 10개의 위치정보를 저장하여, 통신 서비스 지역 진입시 전송하기 때문에, 좀더 광범위한 생활환경 학습이 가능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개선된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개선된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성도



- “안심이 되요, 자식이 해주겠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감사합니다.”

개선된 사회안전망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였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어르신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스마트 밴드 착용률이 10%에서 85%로 대폭 향상되었으며, 연락두절시 GPS Tracker의 위치확인 서비스와 맥내 AP의 모션감지 정보는 생활관리사의 돌봄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광산구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우OO 할머니는 지병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으며 관리하고 있지만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 한전과 광주시청이 보급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기기를 받고 마음이 든든해 졌다고 한다. 할머니는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마움을 전했다. “항상 안심이 되요, 자식이 해주겠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감사합니다.” 광산구 노인 복지관 생활관리사 황씨도 “제가 보살펴야 하는 독거 어르신만 30명이라 매일 찾아갈 수 없는 실정인데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어르신들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어 편리하고, 귀가 잘 안 들리셔서 통화가 불가능한 어르신도 있으신데, 위치정보와 심박정보, 맥내 재실여부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애타는 상황이 줄어들어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공기업으로서 책무 - 사회적 가치 실현

한전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책임경영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한전 사회봉사단은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이란 슬로건 아래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 이러한 사회봉사단 활동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사회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력사업용으로 기 구축된 전력 인프라를 공공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저비용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와 공기업의 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공헌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고, 해당 분야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고 협업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홍보도 열심히

지금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한국전력은 전사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송과 신문 언론을 통해 한전의 사회안전망 서비스 장점을 알리고, 웹툰 제작 및 SNS 홍보를 통해 사회안전망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광산구청과 홍보 전단지 제작하여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있으며 BIXPO 행사, 정부 박람회, ICT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올해에는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광주시와 함께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사업에서는 임펄스 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호흡측정 기능, 취침/기상/복약/식사 시간을 알려주는 음성안내 기능, 운습도 측정을 통한 생활패턴 인식 기능 등 새로운 서비스를 대거 추가할 예정이며, 사회안전망 운영 프로그램도 생활관리사의 돌봄 업무 지원 위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 확대 사업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에는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측·경보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확대 사업이 성공하여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전국 35만명의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전의 혁신은 단순히 전력공급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단 한분의 어르신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며,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전은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06

국민연금 빅데이터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빅데이터로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배경

- 정부는 사회적 이슈인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18. 8. 30.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 대통령 말씀)

- 다수의 일선 지자체는 기초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정확한 현황파악의 한계와 경험에 의존한 사업 추진으로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
- 이에 공단은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소 의지를 지지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마련을 지원하고자 지자체와 협력을 추진



추진내용

- 지자체가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단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자료 제공 및 활용 지원
 - 전 국민의 취업, 퇴사, 소득활동 여부 및 사업장 개업, 폐업 등 현황
 - 30년간 축적된 약 900억 건의 방대한 데이터, 전 국민 소득활동 이력, 사업장 생성·소멸·이동에 관한 생생한 전수 데이터 보유
 - 기초 정책 수립을 위한 지자체별 주민·사업장 분석정보
- 데이터에 기반 한 협업 추진으로 정부·지자체의 일하는 방식 변화 선도
- 지속적인 협업모델 개선 노력을 통한 정책 활용도 확대 추진
 -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으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전개
-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형 일자리 정보 제공

추진성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만족도 향상
 - 관례·경험에 의존 → 데이터 기반 행정
 - (국민연금) 데이터 분석정보 제공 ↔ (지자체) 효과적 정책수립 및 지원

구분	AS-IS	TO-BE
국민	• 실직·고용 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도 실질적인 지원 부족	• 일자리, 사회복지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국민 생활안정
정부	• 밀내이기식 복지지원으로 한정된 자원(예산, 인력)의 집행효과 감소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 지원을 통하여 국정과제 실현
지자체	• 신청하기 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인을 먼저 파악할 수 없음 • 관내 기업체 위주의 제한적 취업 알선 및 구인기업 발굴의 어려움	•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잠재적 취약 계층 선제적 파악·지원 •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통해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구인기업에는 인력 문제 해결 지원

- 국민연금 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를 융합·분석한 일자리 종합정보 모형개발로 현장 일자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한눈에 검색 가능한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정보 및 높은 정보 신뢰도
 - 신중년/청년 친화기업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상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NPS블록』 개발
 - 특정지역을 소규모(가로, 세로 50m 등)로 나누어 블록화된 맵을 작성하고 개별 블록별로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 민간 중소기업과의 공동 특허 취득을 통해 동반성장 및 상호 기술력 확보
- 민간·공공 포럼 참여 등을 통한 우수사례 전파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 발표 등 4회, 한국철도공사 등 역벤티마킹 4회
 -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가이드,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수록
- 구직자는 생활안정, 기업은 고용안정, 정부·지자체는 국민복지 향상, 공단은 공익성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향후계획

- 구직자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더한 투-트랙 전략 추진
 - 중소기업 위기 감지를 통한 실업예방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지원
- 협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국민 행복을 위한 지자체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

● 국민연금은 왜 일자리 문제에 주목하는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공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기관이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불황 속에 대량의 실직자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평생 파트너로서 공단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쟁점화 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단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취약계층 선제적 발굴 및 지원모델”을 개발하였다. 남양주시와 데이터를 통한 협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이 공단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의 또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는 이제까지 실체를 모르고 일했다. 즉, 모수가 극히 작은 샘플링 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시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전체를 모수로 한 분석이 가능해졌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파악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국정 최우선 과제이며, 사회적 현안 이슈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 국민연금의 역할과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전 국민의 소득활동과 사업장생의 생성·소멸에 관한 생생한 기록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일자리 관련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적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업을 시작하면 일자리 문제 해결은 어렵지만은 않게 보였다.

●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정책 지원

• 협업으로 힘을 모으다

하지만, 지자체와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공단이 파트너 십을 맺는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게다가 지자체는 빅데이터 기반 행정업무의 초기단계라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사업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선뜻 나서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경기도, 대전시, 전북도 및 시흥시와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각 기관이 모여 협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데이터를 통한 일자리 정책수립 및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협업기관 회의 및 시군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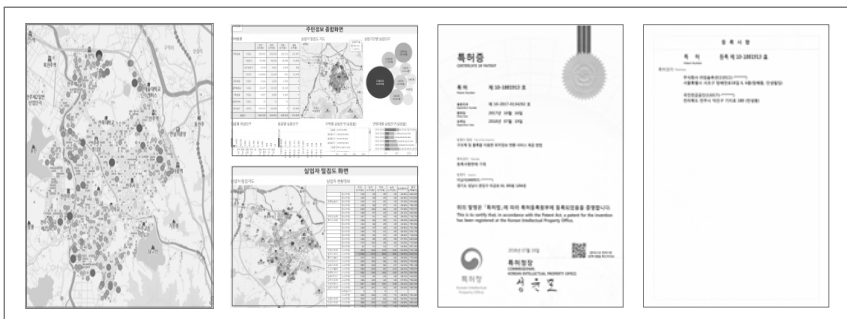


•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 『NPS블록』 특허 취득

국민연금은 주민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분석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여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원을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요지이다. 순탄할 것 같던 협업은 정보의 공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기관 간 데이터 관리체계가 상이하여 연계가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었다. 관련된 상용화 제품이 있으나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분포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안을 설계하였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우리는 특정지역을 소규모 블록(가로, 세로 50m 등)으로 나누어 블록화된 맵을 작성하고, 개별 블록별로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가칭 『NPS블록』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민간 중소기업과 공동개발을 통해 관련 알고리즘을 만들어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고, 공동 특허 획득으로 상호 기술력 확보와 동반성장의 계기도 만들게 되었다.

NPS 블록 활용사례 및 관련 특허증



•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찾다

초기 협업모델은 국민연금이 정보 공급자로서 지자체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보니 현장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고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사용상의 개선사항, 추가적인 정보 요청 등 20여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개선 활동 중에 일자리 매칭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업무 현장 조사를 거쳐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종합정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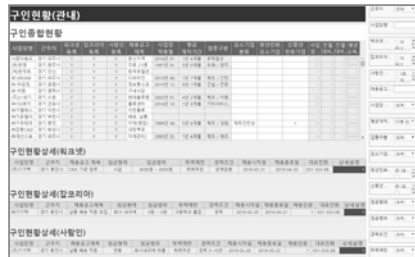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

- 중소기업의 정보가 부족하여 구인 공고의 검증이 어렵습니다.
- 중년층 이상은 구인기업에 전화를 하여도 연령을 문제 삼아 고용을 기피합니다.
- 보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분석하여 구직자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인, 잡코리아 등 민간 채용포탈업체와 접촉을 시작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었다. 일자리 종합정보 서비스는 기존에 여러 화면에서 수행하던 일자리 검색을 한 화면에서 가능하게 통합하고, 국민연금 사업장정보를 융합하여 평균연봉, 평균 근속기간, 재직인원, 전월대비 취·실업 인원 등 구직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담았으며, 신중년·청년 친화 기업 등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구인 상세정보는 민간 채용포탈로 연결하여 정보 독점화를 피하고 취업포탈 웹페이지 노출 증가를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일자리 종합정보 서비스는 여성, 장애인 친화기업 등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용 취약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 현장 회의 및 일자리 종합정보 서비스 화면



• **협업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복지 서비스의 시작**

지자체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부산시가 협업을 제안해 왔다. 처음 협업을 시작할 때 일일이 찾아다니던 시절과 비교해 보면 지자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니 어께가 으쓱해지는 일이다. 데이터를 통한 행정 개선을 시도하는 지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지만 제한된 인원으로 협업의 성공여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뒤돌아보니 어느새 2개 시·도, 2개 광역시, 78개 기초지자체가 협업기관으로 되어 있었고 인구를 산정해보니 대한민국 전체의 약 40%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모토인 ‘국민이 만들어준 데이터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자’를 항상 상기하며 협업에 흔들림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갔다.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양주시는 잠실역까지 운행하던 버스 노선을 출퇴근 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하게 되었고, 군산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고용현황 분석으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활용하였으며, 완주군·양주시·부안군 등 여러 지자체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하남시는 ‘2018 청년 희망 일터체험’, 김포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미소데이’(미스매치 해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분석 자료가 활용되었다.

-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는 A씨는 육아로 인해 실직 후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던 중 국민연금이 제공한 ‘실직자 밀집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찾아온 『이동 일자리 상담』을 통해 구직신청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다.
- 의왕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위한 대상기업 선정 시 사전에 기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왔으나, 국민연금이 제공한 ‘사업장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공단에 감사를 표시했다.

• **지역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또 다른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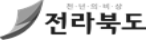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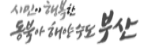
기본적인 협업체계를 갖추면서 지자체 현안문제를 풀기위한 다양한 요구가 발생되었다. 특정 지역의 대중교통 신규 노선 기획에서 시작되어,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상황 파악, 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지역 분석,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연령별 일자리 구조 분석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1년 동안 수많은 분석 지원을 진행하였다.

9개 지자체와 20여건의 분석이 진행되어 그동안 부족한 정보로 추진하던 정책이 보다 시의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되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현안 분석 주요사례

구분	협업 기관	지원내용	정책 활용성과
일자리 지원	군산시 (산업 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지역 월별 휴폐업 추세 및 일자리 현황분석 3년간 전국 시군구의 사업장 휴폐업 현황분석 산업구조, 지역별 경제 상황, 업종 상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대책마련 국가균형발전 연구
	부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인구 및 청년 사업체 현황 조사 19~39세의 취업, 실업, 실업기간, 소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군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층별(청년, 중장년, 고령자, 경력 단절여성 등) 고용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정책 결정, 맞춤형 취업교육 정책 수립, 맞춤형 알선정책 수립
	시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사업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후보사업장 선정으로 일자리 안정 및 행정개선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GM근무 중인 도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정현안 분석으로 정책 기초수립 지원
	전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별 시군구별 사업장/가입자 추세 현황 분석 전북 휴폐업 사업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도 일자리 정책 및 사업 활용
국민 편의	시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택지개발지구(배곧, 목감, 은계)의 거주자 및 근무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퇴근 교통정책 개선, 도시 재생, 맞춤 행정서비스
	평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승산업단지 사업장 현황 및 근무자 중 서울, 경기 거주자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와 직장 간 이동경로를 분석으로 출퇴근버스 지원
행정 개선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업종별 사업장 현황 데이터 제공(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월별·지역별·업종별 사업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화된 데이터를 시민, 공무원, 기업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 업종별 일자리 변동추이 분석 및 일자리 관련 업무지원에 활용
복지 증진	성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층별, 지역별 소득격차, 장애인 소득활동현황, 청년 실업현황, 경력단절여성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양극화 해소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시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실업자 및 사업장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도시재생 분석에 활용

또한, 지자체 협업을 진행하면서 파생효과가 확산되어 시·도·광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성이 추진되었고 기초지자체는 보다 편리하게 분석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협업기관	지원내용	파생효과
 세계속의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 국민연금 분석데이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취업서비스(양주), 미스매치 해소 컨설팅 미소데이(김포), 청년 희망 일터체험(하남) 등 다양한 일자리정책에 활용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8개 시군의 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등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진안, 임실, 부안에서 고용현황 분석, 일자리 이동 상담, 일자리종합센터 업무에 활용
 시민의 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에 기초한 시정 추진기반 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16개 구에서 고용취약문제 해결에 국민연금 분석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협업과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 협업 이야기 잠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게이츠와 스티브잡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 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두 사람에게 대단한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빌게이츠에겐 폴 앨런이, 스티브 잡스에겐 워즈니악이란 콤비가 있었으며 성과는 늘 협업의 결과였다. 한명은 아이디어를 다른 한명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위 혁명이 이루어졌다.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국민연금은 지자체와 데이터 공유를 통한 새로운 협업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

국민연금은 현재의 구직자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더한 투트랙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중이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이 모델은 비금융 정보인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평가 모델 사례이기도 하다.

- 맺으며...

국민연금 데이터를 통한 기관간 협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저소득층 삶의 질도 나아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토대가 되길 바란다. 국민연금 데이터를 통한 일자리 혁신은 이미 시작되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데이터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일,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07

창업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R&D+특허패키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R&D+특허패키지

추진배경

- **(사회문제)**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기술탈취, 특허분쟁으로 제품화되기도 전에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
- **(정부의 고민)** 중소기업은 보안전담 인력 부족, 시설 부족, 예산 부족 등 전반적인 보안관리가 부실하며 기술유출 발생 시에도 대응 취약
- **(발상의 전환)** 부처간의 협업부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협업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협업을 추진

〈추진 목표〉

① 사회문제 해결 창업기업 기술보호 기술사업화성과 제고	+	② 국민편익 증진 원스톱 지원 프로세스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	+	③ 행정 효율 제고 국민부담+정부예산 절감 행정의 효율성 제고
--------------------------------------	---	--	---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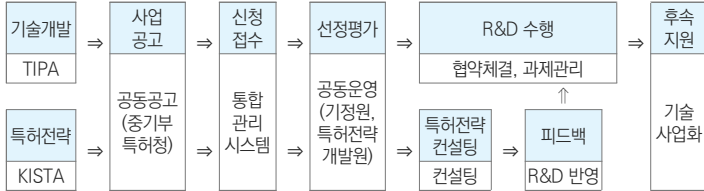
- **(협업의 방향)** 창업기업이 처한 기술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협업하여 문제해결을 시도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 R&D과제 선별 창업R&D예산 보유	⇒	창업기업 니즈(사회문제) 기술개발 계획은 있으나 자금여력 없고 개발에 성공해도 특허분쟁이 염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권 보호 노하우 보유 특허전문가 네트워크
--	---	---	---	---

- **(프로그램 개발)** 혁신R&D+IP-R&D전략 패키지
 -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R&D와 IP전략 컨설팅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
 - 기술개발을 계획 중인 기업이 한번 신청하여 선정되면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과 함께 R&D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R&D • 창업성장R&D - 혁신형 창업과제(1년) 기술정보진흥원 (TIPA)	+	IP전략 컨설팅 • 신기술·신사업 IP-R&D전략(5개월) • R&D수행전략(3개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	기술력 확보 • 우수IP 획득 • 기술경쟁력 확보
---	---	--	---	-----------------------------------

- **(프로세스 설계)** 기업 요구사항과 협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 사업공고, 신청 접수 창구는 통일 →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
 - 평가절차를 한번만 진행 → 평가기간 단축
 - 특허전략 컨설팅 결과는 기술개발 과정에 환류 →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추진성과

추진 목표	성과지표	'18년 목표	'18년 실적	달성률	성과 분석
기술 보호 역량 제고	기업 IP 대응 전략 건수(평균)	10건	14.4건	144%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총 260개의 IP대응전략 수립
	IP전략 활용수준	90%	90.25%	103%	도출된 전략에 대한 수용 정도는 목표 90%를 초과 달성
국민 편익	비용 절감 효과	1억	0.94억	94%	국가 재정 0.61억, 사회경제적 비용 0.33억 절감 예산

- **(기술보호역량 제고)** IP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 향상에 기여
 - 18개 창업기업에서 IP획득 104건, R&D방향 66건, 문제특허 무력화 63건 등 총 260건(평균 14.4건)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수립 지원

IP획득 전략 (매입, 보강, 신규)	문제(장벽) 특허 무력화전략	R&D방향 제시전략 (사업화, 생산성, R&D과제)	라이선싱 전략	특허Infra 구축전략	합계
104 (5.8)	63 (3.5)	66 (3.7)	5 (0.3)	22 (1.2)	260 (14.4)

- **(비용절감)** 협업기관 공동 평가에 따라 과제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 절감효과, 기업의 지원 신청 절차를 한번으로 줄여서 기업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
 - **(국가재정)** 평가관리 예산 173백만원 → 112백만원, 약 61백만원 절감
 - **(국민부담)** 행정절차 간소화 → 경제적시간적 비용 약 33백만원 절감

향후계획

- '19년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총 44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
- IP전략 수립결과 활용하여 R&D수행까지 연계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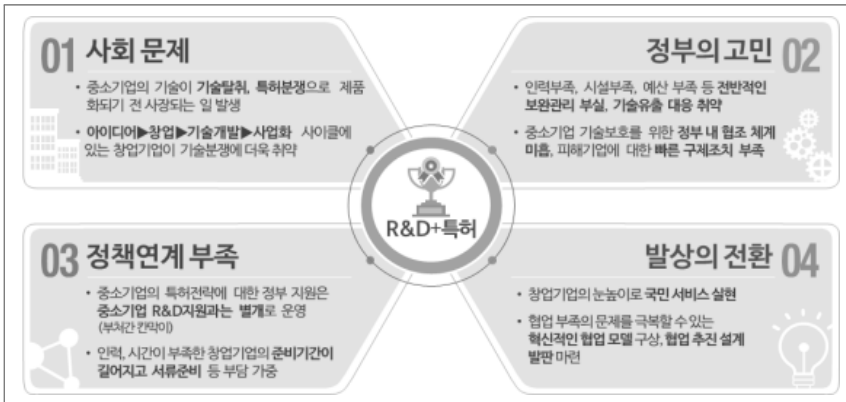
● 더 멀리가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서다

- 창업기업, 기술개발 성공은 했으나 특허분쟁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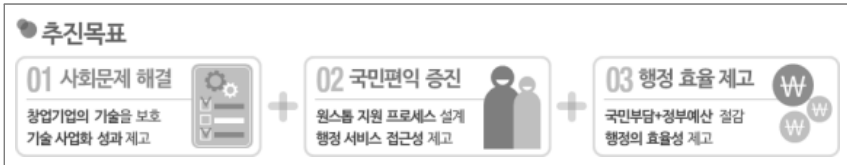
“18년 2월 국내 기술 기반 중소기업들의 이목인 생물정화기술 업체인 ○○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집중됐다. ○○○는 자동차 페인트 작업 중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나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와 관련된 자사 핵심 기술을 현대차가 탈취했다며 16년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이 1심 결과 판결일이었다.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며 현대차의 기술 탈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탈취되는 것은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어렵게 개발한 기술로 창업한 경우에도 특허분쟁으로 시장에서 나오기도 전에 사장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창업기업은 이러한 기술 분쟁에 대해 더욱 취약한 게 현실이다.

그간 정부 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도 미흡하고, 기업들도 개별 지원 프로그램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창업기업의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각자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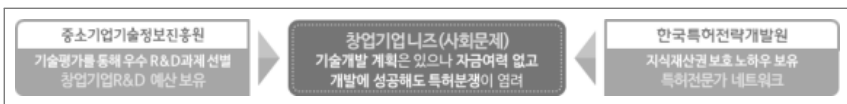
기정원은 창업기업의 기술보호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행정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협업 모델을 설계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창업기업의 기술을 지켜라

제일 먼저 창업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먼저 주목하였다. 창업기업은 기술개발 아이디어는 있으나 연구비가 부족하다. 어렵게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특허 분쟁에 취약하다.

기정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합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업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우선 기정원은 창업기업의 R&D를 위한 과제 발굴, 평가 및 과제관리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본 과제를 선도하면서 사업운영을 이끌어 나갔다. 이에 질세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실무경험을 갖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였다.



협업을 위해 실무추진반을 시의적절히 구성하여 협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밑받침을 마련하였다. 양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창업기업들과 소통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해결방안을 과제로 발전시켰으며, 의사결정권을 가진 간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속하게 실행해 나갔다. 2018년 2월 협업추진반이 처음 구성된 이후 과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활발하게 가동되었는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협업체제와 절차를 점검하였다. 또한 매월 1회 실무회의도 진행하여 그때그때의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R&D+특허 패키지 서비스 개발

- 성공적인 협업 추진을 위한 시작

실무추진반 회의를 진행하면서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행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각 활동별로 차근차근 협업 활동을 이행하여 장애요인을 해결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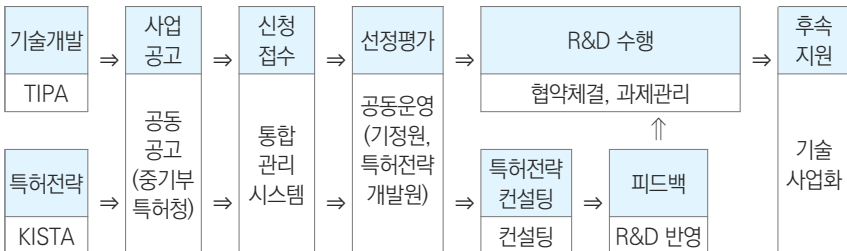
협업 활동의 이행절차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제도나 프로세스 설계,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는 사업기획단계. 2단계에서 사업 홍보, 신청접수, 과제 평가와 선정 절차를 거쳐 과제를 발굴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R&D 연구비와 특허전략수립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사업기획 단계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기관 간의 공감대와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협업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먼저 양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 본 협업과제의 목표와 취지에 맞는 세부사업을 골라내고, 적합성을 검토하여 협업대상 사업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3개의 사업을 선별한 이후에는 한번만 신청하여 선정되면 R&D 연구비를 지원과 함께 IP전략수립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사업을 패키지화하였다.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걸음

다음으로 협업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경우 예상되는 기업의 요구사항과 협업 기관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지원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 사업지원 프로세스



사업공고와 신청접수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한번의 선정평가로 창업기업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다. 특허건설링 결과는 기술개발 과정에 환류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을 초기 단계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 장애물에 부딪힌 협업,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다. 협업기관들 각자의 선정 기준이나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쉽게 통합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다른 정부 부처의 사업을 담당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도리어 협업의 장애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의 협업추진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업기업의 눈높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헤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협업 장애요인 극복

현안사항(장애요인)	해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상이 • 평가위원풀을 별도로 운영 • 기관간의 전산운영시스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평가지표 통합 • 선정평가 위원 공동 구성 ⇒ •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통합 • 운영시스템 일원화 • 제출 서류 축소

먼저평가지표 통합을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기술성 지표(40점) 중 특허관련현황 지표점수를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사업성 평가지표(60점)은 유지했다. 평가위원구성에 있어서도 기술 분야 전문가 5인의 구성을 4인으로 줄이는 대신 지식재산권전문가 1인을 추가하였다.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서류의 간소화를 실천하였다. 기존 혁신R&D는 사업계획서 15p와 증빙서류 7종과 IP-R&D 전략수립 사업계획서 4p와 증빙서류 필수 4종을 통합하여 사업계획서는 기존 15p로 하고 증빙서류는 필수 8종으로 결정하였다.

창업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정원과 전략원이 별도로 신청·접수를 받던 창구를 통일하여 SMTech(기정원의 시스템)으로 신청 받아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의 시스템에서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일원화하였다.

• 창업기업 기술개발과 기술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이러한 협업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2018년 3월 「혁신R&D+IP전략과제」라는 이름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창업기업에 대해 R&D 및 IP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우수 IP를 획득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중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R&D와 IP전략 컨설팅을 동시에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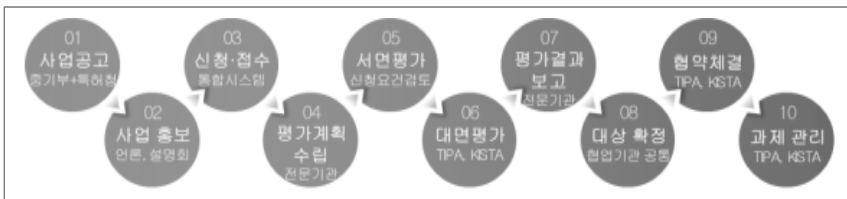
기정원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를 지원하는 ‘혁신형 창업과제’를 운영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신기술신사업 IP-R&D전략’과 ‘R&D수행전략’을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운영한다.

■ 혁신R&D + IP-R&D전략 지원내용

R&D	+	IP전략 컨설팅	⇒	기술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성장R&D - 혁신형 창업과제(1년) 기술정보진흥원(TI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신사업 IP-R&D전략(5개월) • R&D수행전략(3개월) 특허전략개발원(KIS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IP 획득 • 기술경쟁력 확보

구분	창업성장R&D(혁신R&D)	IP-R&D전략 컨설팅	
		신기술·신사업 IP전략	R&D수행전략
지원한도	2억원 이내	0.8억원	0.48억원
지원기간	최대 1년	5개월	3개월
정부출연비율	총 사업비 80% 이내		
민간부담비율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 부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 부담)	

대상 기업 공개 모집을 알리는 사업공고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였는데, 상반기에 18개 기업, 하반기에 22개 기업, 전체 40개 기업을 발굴하였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였다. 기정원이 R&D연구비를 지원하고 IP전략수립 컨설팅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담당하였다.



R&D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정원은 IoT, 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였다.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한 R&D연구비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창업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IP전략 컨설팅을 진행했다.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IP전담팀을 구성하고 대내외 기술·환경분석과 기업 역량을 고려한 R&D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착수전략위원회를 운영했다. 특히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은 5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했다.

• 기관과 국민이 함께하는 혁신으로 성과 UP

다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모든 일에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정착되었다. 본 협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양 기관의 성과관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기관의 혁신계획에 반영하고 기관장이 주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추진 과정과 현안사항을 점검하였고, 직원들에게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기를 부여하였다. 동시에 시민참여혁신단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성과관리연계	
구분	조직명칭
연계방안	협업성과 담당부서의 2018년 부서실적 평가지표로 반영 대상 부서 : 창업기술평가실, 비계량지표 10점
기대효과	책임성 강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width: 45%;"> <p>기관혁신계획</p> <p>2018년 기관혁신계획 중 중점추진과제에 반영 과제명 : 5-1. R&D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p> <p>전사적 성과관리</p> </div> </div>
※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KISTA 내부의 경영혁신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고객의 접점에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규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방안을 찾아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차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협업효과를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 참여기업의 100%가 만족하였으며, 75.6%는 매우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 경영혁신위원회
| 협업성과 격려
| 중소기업 현장방문
| 시민참여혁신단



● 힘을 모아 가꿔온 결실

-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Up

협업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었는데, IP침해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창업기업이 새로운 특허출원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경쟁특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새로운 R&D 추진방향을 발굴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주요한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2018년 상반기에 참여한 18개 창업기업이 IP획득 104건, R&D 방향수립 66건, 문제 있는 특허의 무력화가 63건 등 총 260건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업 당 평균 14.4건에 이른다. 기업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제시된 대응전략에 대해 90.95%의 수용 의사를 보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IP침해 대응수준이 상승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일석이조, 행정정비용 ↓ 국민편익 ↑ 를 동시에

비용절감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협업하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평가를 하게 됨에 따라 과제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였다. 더욱이 신청절차를 한번으로 줄여서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협업추진반에서 계산한 결과 평가관리 소요예산이 173백만원에서 112백만원으로 약 61백만원, 국민부담도 약 33백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하는 예산절감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가재정

✓ 공공기관간 협업의 결과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통합하여 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173백만원에서 112백만원으로 약 61백만원이 절감되는 효과 발생

	협업 전	협업 후	
협업 전후 평가관리 예산집행 비교	TIPA 신청 165개 × 85만원 = 140백만원	112백만원	수당 20% 절감
	KISTA 신청 165개 × 20만원 = 33백만원		비용 Zero化

※ 2018년 165개 과제 기준, 평가수당 단가(TIPA 85만원, KISTA 20만원)

국민부담

✓ 기업의 신청절차를 한번으로 줄여 증명서류발급, 신청서제출, 평가장 방문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약 33백만원이 절감되는 효과 발생

※ 행정서류 19페이지+증빙 12종 → 15페이지+증빙 8종으로 간소화 : 약10만원 절감(7업종)
 ※ 평가소요기간 3.5개월(2개월+1.5개월) → 2개월로 단축 : 약10만원 절감(7업종)

본 협업사례로 인한 예산 절감성과를 인정되어 '18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예산절감 경진대회에서 참가 → “대상(1등)”으로 선정

• 대표 협업 프로그램으로 정착

두 기관의 협업은 이제 미래를 향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44개 기업을 선발하기로 양부처간 논의를 마친 상태다. 향후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결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수행 까지 연계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2020년부터는 창업기업의 우수기술 확보와 지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 등록을 주요한 성과목표로 정하고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성과목표	창업사업화 R&D 혁신으로 기술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기업역량	우수기술 확보	시장 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측정치표	특허 등록	후속투자	사업화성공 신규 고용
추진전략	차별화된 사업성 검증 체계 구축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계지원 강화	창의·도전적 R&D 지원 강화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08

취업취약계층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으로 양성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가치 실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취업취약계층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으로 양성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가치 실현

추진배경

-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고성장 추세이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美, 中 등에 비해 걸음마 수준(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의 절반 이상을 美, 中이 차지, 우리나라는 0.1% 미만)
 -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파워셀러가 현저히 적어* 국가 차원의 양성대책 필요
 - * e-Bay 한국인셀러 중 年 100만불 이상 파워셀러는 0.2% 미만
- 기관별 분절적 지원으로 온라인수출 창·취업 성공률 저조
 - 교육 이후에도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구인·구직 미스매칭, 창·취업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글로벌 파워셀러로의 도약에 한계

추진내용

- 구직자·구인기업 발굴에서부터 교육·실습지원, 창·취업 사후관리 및 성과공유 등 사업 쏠단계에 걸쳐 분야별 민·관·학 협업체계 구축

해외직접판매단계	협력 기관
사업 기획, 운영, 관리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직자 구인기업 발굴	남북하나재단,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무역협회, 한국외대
교육·실습 및 경진대회(성과공유)	이베이,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창·취업 사후관리	한국외대
대국민 홍보 및 저변확대	EBS, MBC

- 온라인수출기업이 직접 선발한 인력에 대한 교육·실습 지원 및 성과공유 등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
 - (교육) 이베이 등 글로벌플랫폼사 소속 실무전문가의 마케팅 노하우 교육(30회)
 - (실습) 구인구직 매칭을 통한 온라인수출기업 현장실습 지원
 - * 인당 6개월 교육실습비 1천만원 지원
 - (성과공유) 교육생간 실습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전문조력자와의 전자상거래 해커톤 경진대회 개최(2회)

-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판 전문인력양성 저변확대
 - 남북하나재단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기관과 협업으로 온라인수출기업 채용설명회 (3회), 우수 인력 DB제공, 고용지원프로그램 설명 등 인식개선 및 고용촉진 지원
 - 취약계층이 해외직판 전문인력으로 거듭나는 성공스토리 공중파 특집 공동제작 * EBS 다큐시선 '열려라 플랫폼', MBC 다큐프라임 'e-커머스드림'

추진성과

- 1,641명의 해외직접판매 인력 양성 및 119개사 317명의 해외직접판매인력 성공 취업지원
 - 특히, 새터민, 경력단절녀,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연계로 44명의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창출

〈취업 취약계층(새터민) 온라인수출기업 취업 성공사례〉

식당 일용직 외 정규직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탈주민 Y씨 전자상거래 교육 실습 프로그램 및 구글, 이베이와 함께한 해커톤 경진대회 참가후 중국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 보유한 중국어 능통자를 찾던 온라인수출기업 A사에 '18년 8월 취업 성공

- 전문셀러-초보셀러간 노하우 공유가 수익창출로 연결되는 국내 최초 온라인 수출협 동조합(1,2호) 출범
 - 공동비즈니스형, 초보-전문셀러 멘토링 형 등 2개 조합 설립(조합별 5개사)

구분	해외온라인수출 협동조합(1호)	해외전자상거래 협동조합(2호)
설립 유형	글로벌몰별 공동비즈니스형 (조합원 : 기업)	파워셀러-영세·초보셀러간 멘토링형 (조합원 : 개인)
사업자 등록일	'18. 11. 2.	'19. 1. 8.
조합원	G사(이베이 셀러), B사(큐텐 셀러) 등 온라인판매 전문기업 5개사	한국무역협회 산하 파워셀러협의회 소속기업, '17년 중진공 파워셀러양 성과정 수료 기업 대표 등 5명

- '해외직판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관간 선순환 협력체계 구축
 - '해외직판 일자리창출'이라는 공동 목표제 기반의 성과창출 ① 구인기업, 구직자 공동 발굴 → ② 맞춤형 교육 → ③ 창·취업지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향후계획

- '22년까지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 1만명 양성 및 양성인력 중 3,750명 이상 창·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글로벌 온라인 수출강국 도약 기여
 - 아마존 등 글로벌몰 소속 전문가와의 1:1 매칭 및 판매실습계정 개설, 셀러창업 인센티브 지급 등 파워셀러 혁신성장까지 후속지원

● 점점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그러나 한국은?

2017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614조원으로 전년대비 24.8% 급증했으며, 2021년에는 약 5,500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0.1% 미만으로 비중이 미미하고, 이베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매출 100만불 이상의 한국인 파워셀러 비중도 0.2% 미만으로 국가차원의 양성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인 셀러들의 활약이 미진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수출기업의 전문인력 부재였다. 제품은 뛰어나지만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판매까지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의 부재로 온라인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온라인 파워셀러로의 양성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 등을 교육, 실습 등을 통해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청년 구직난, 수출 중소기업의 만성 구인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의 한국인 파워셀러 입지 강화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해외직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2018년도에 처음 기획하게 되었다.

● 아마존 등 글로벌 전문기관 등과 단계별 협업체계 구축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진공은 가장 먼저 해외직접판매 지원 단계별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기관별 분절적인 지원으로 인한 지원 비효율 최소화 및 성공적인 해외직접판매 양성을 위해 구직자 및 구인기업 발굴, 교육, 실습, 취·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끊임없는 지원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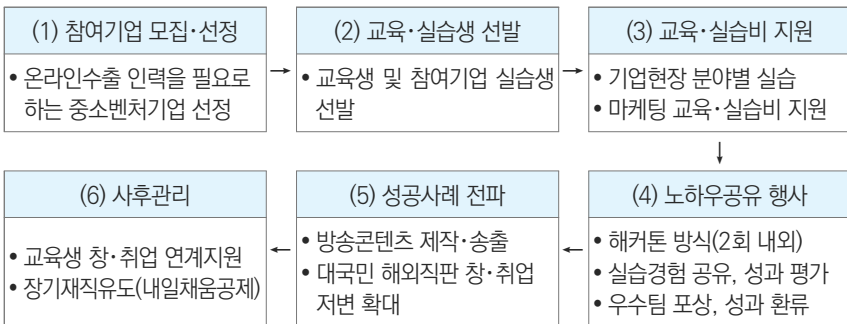
해외직접판매단계	협력 기관
사업 기획, 운영, 관리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직자 구인기업 발굴	남북하나재단,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무역협회, 한국외대
교육·실습 및 경진대회(성과공유)	이베이,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창·취업 사후관리	한국외대
대국민 저변확대(홍보)	EBS, MBC

특히 글로벌 플랫폼사에 입점하고자 하는 온라인 초보셀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마케팅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글로벌플랫폼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최대 고객층 중 하나인 중국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중국어가 능통한 새터민, 마케팅 전문성을 보유했으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해외 직접 판매 창·취업 저변 확대를 위해 MBC, EBS 등 공중파와도 특집방송 공동제작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 온라인수출기업 맞춤 인력 양성 밀착 지원

중진공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업계 전문가·학계 자문단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쳐 1회성 교육만으로는 창·취업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개선책으로 교육·실습 추진 → 성과공유 → 창·취업 사후관리 등 온라인 수출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습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취업 및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아마존 등 글로벌플랫폼사 실무자, 전문셀러의 실전 마케팅 교육**

온라인 수출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공통적인 애로를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사 소속 매니저 및 전문셀러, 관세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현장감 넘치는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글로벌 진출 준비단계별 맞춤 교육을 위해 주제별로 기초, 심화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B2B 거래성사율을 높일 수 있는 inquiry 작성, 실제 사례로 보는 자사 제품의 글로벌시장 진출 적합성 등 온라인 수출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사 진출 준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해외 독립몰 구축 및 운영전략, 쇼핑몰 활용 실무 등 직접 자사몰 구축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제공하였다. 또 SNS 기반 마케팅 활용도 제고를 위한 SNS 및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온라인수출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행정적인 애로사항인 통관, 수출신고, 해외배송 등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등 온라인 수출 관련 다양한 주제별 심도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전국의 해외직접판매 희망자 1,076명 대상 30회의 교육을 제공하였고, 회차마다 사례를 추가하는 한편, 교육생의 피드백을 다음 회차 교육시 즉각 반영하여 교육참여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자상거래 전문가의 실무 교육을 받는 모습



- 온라인 수출기업에서 현장감 있는 실습 지원 및 노하우 공유 해커톤 개최

온라인 수출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의 양성을 위해 구인을 희망하는 온라인 수출기업에서의 현장 인턴십 제도를 마련했다. 구인 기업이 니즈에 맞는 교육생을 직접 선발하여 해당 기업에서 6개월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중진공에서 6개월간 실습비를 인당 최대 1천만원씩 지원하였다.

또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해 쌓은 판매기법 등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해커톤방식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생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플랫폼사의 전문가 총 157명이 29개의 팀을 이루어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교육생들은 전문가 협업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온라인 수출기업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마케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전자상거래 해커톤 개최현장 모습



- 취업 취약계층 채용에 대한 고정관념, 성공사례 적극 홍보를 통해 극복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했음에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온라인 수출기업의 채용 기피 현상을 극복하고자 남북하나재단,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취약계층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온라인 수출기업 대상 취약계층 채용 설명회(총 3회), 우수 취약계층 인력정보 DB제공, 고용지원프로그램 설명 등 취약계층 인식개선, 고용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해외직접판매 창취업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등 교육·실습생이 해외직접판매 전문가로 거듭나는 성공스토리를 다큐멘터리 제작 후 MBC, EBS를 통해 방영하였다.

해외직판 전문인력양성 성공스토리 특집 방송



MBC 다큐프라임 'e-커머스드림'



EBS 다큐시선 '열려라 플랫폼'

1,641명의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317명 신규 일자리 창출

중진공은 위와 같은 애로 극복노력 및 민간·전문기관별 고유의 전문성을 극대화한 총출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총 1,641명의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 중 현장실습 온라인 수출기업 취업 연계 및 독립몰 창업 등을 통해 317명의 온라인 수출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남북하나재단,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터민, 경력단절여성 등 전문성을 보유한 취업 취약계층 4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취업 취약계층 온라인수출기업 취업 성공사례〉

- **(새터민)** 식당 일용직 외 정규직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탈주민 Y씨 전자상거래 교육실습 프로그램 및 구글, 이베이와 함께한 해커톤 경진대회 참가후 중국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 보유한 중국어 능통자를 찾던 온라인수출기업 A사에 '18년 8월 취업 성공
-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J씨는 소비재 유통 소기업에서 MD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던 중 결혼 및 출산으로 퇴직한 육아 5년차 주부로서, 중진공의 해외직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상품소싱전문가로 '18년 6월 J사 정규직 취업에 성공
- **(고령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L씨는 무역상사에서 26년간 근무한 무역실무 경력을 기반으로, 중진공의 구인구직 매칭에 참여해 온라인수출기업 K사에 '18년 5월 정규직으로 취업, 온라인(아마존) 셀러로 직종 전환에 성공

또한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역협회 소속 “파워셀러협의회”와 중진공 해외직접판매 교육수료생간 공동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여 노하우 공유가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업계 최초 “온라인수출 협동조합 1,2호”를 출범시켰다.

〈온라인수출협동조합 공동비즈니스모델〉

- ① 상품소싱, 공동마케팅, 상품페이지 제작 협력 및 쇼핑몰 연계 등 시너지
- ② 전문셀러의 물류창고 공동 활용, 합배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 온라인수출협동조합 1,2호 현황

구분	해외온라인수출 협동조합(1호)	해외전자상거래 협동조합(2호)
설립 유형	글로벌몰별 공동비즈니스형 (조합원 : 기업)	파워셀러-영세·초보셀러간 멘토링형 (조합원 : 개인)
사업자 등록일	'18. 11. 2.	'19. 1. 8.
조합원	G사(이베이 셀러), B사(큐텐 셀러) 등 온라인판매 전문기업 5개사	한국무역협회 산하 파워셀러협의체 소속기업, '17년 중진공 파워셀러양성과정 수료 기업 대표 등 5명

● 2022년까지 1만명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글로벌 온라인 수출 강국 도약 기여

향후, 중진공은 아마존 등 글로벌몰 소속 전문가와의 1:1 매칭 및 판매실습 계정 개설, 셀러 창업 인센티브 지급 등 교육 수료생의 파워셀러 혁신성장까지 후속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창·취업 전문교육을 2개월간 후속 지원하여 전문성 보유 취약계층과 구인기업간 매칭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정 지원 유관기관 등과 신규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해외직접판매 전문 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양성 인원 중 3,750명 이상의 창·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글로벌 온라인 수출 강국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09

LNG냉열을 활용한 동북아 콜드체인 구축

한국가스공사

LNG냉열을 활용한 동북아 콜드체인 구축

추진배경

- LNG냉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 필요
 - 정부의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미활용 LNG냉열 에너지를 국내 냉동·냉장 산업 전반에 적용 필요
- 고비용·고품질 미활용 LNG냉열 에너지에 대한 민간기업의 수요 증가
 - 설비의 효율을 개선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냉동·냉장 물류 민간기업의 LNG냉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대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저온 냉열 이용기술 개발과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필요

추진내용

- 인천신항 배후부지 냉동·냉장 물류단지 조성('18~'20, 진행중)
 - 사업개요 : LNG와 냉매를 열교환한 후 냉매배관을 통하여 인천항만공사에 LNG 냉열 공급, 부지면적 230,700㎡, 사업비 6,027억원
 - 입주기업 모집 : 입주기업 수요조사('18. 1.), 업무협약 체결('18. 3.),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18. 4.), 사업설명회 개최('18. 5.), 입주기업 공모('18. 7.), 입주기업 니즈파악 및 개선계획 수립·추진('18. 7~12.)
 - 기대효과 : 향후 10년간 약 4.3조원 생산·부가가치 유발 및 2.6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추진성과

- 참여기업의 편익
 - 한국가스공사 : 운영비용 절감, 안정적인 LNG 인수기지 설비운영
 - LNG설비 운영을 축소하여 기화비용 연간 약 6억원 절감
 - 탄소배출량 연간 2.4만tCO₂ 감축(배출권 거래 시 약 4.8억원)
 - 인천항만공사 : 인천신항 항만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 향후 10년간 생산 및 부가가치 약 4.3조원, 고용유발 효과 2.6만명 창출
 - 인천신항 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물류기업 : 냉동창고 운영비용 절감
 - 전력비용 연간 약 27억원 및 유지관리비 연간 약 6.3억원 절감
 - 탄소배출량 연간 1.4만tCO₂ 감축
- 사회적 편익 : 탄소배출 감축, 신선식품 보급
 - 급속냉동
 - -162℃의 LNG냉열 활용으로 빙결정 생성 속도가 빨라 식품 조직변형 최소화
고품질 확보
 - 장기보관(부패율 : 선진국 5~10%, 한국 15~20%)
 - 24시간 적정 온도유지로 품질유지에 적합하여 식품의 맛과 신선도 유지 탁월
 - 식품 유통기한 연장으로 식품 부패율 감소 및 위생상태 청결
 - 유통단계 간소화로 탄소배출량 연간 2만tCO₂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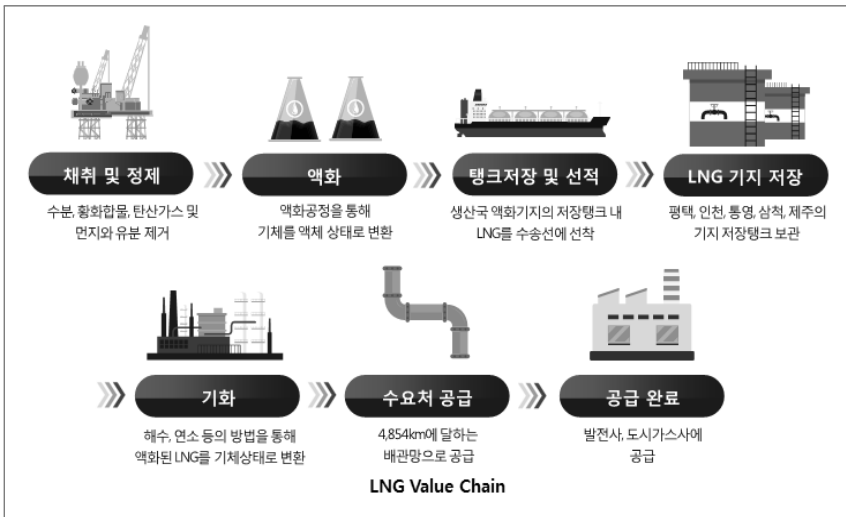
향후계획

- 국내·외 LNG냉열 이용 사례와 현황을 조사하고 콜드체인 등 냉열이용 산업분야 발전방향 검토('19. 4.)
 - 시장조사 전문용역업체 및 용역 과업 범위 선정
 - 용역 결과에 따라 LNG냉열 산업화 타당성 조사 등
-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 LNG 배관 및 LNG 냉매배관의 도면, 시방서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 검토 ('19. 5.)
 - LNG 냉매설비 건설공사 발주 및 착공('19. 7.)
 - 건설공사 준공 및 설비 시운전('20)
- 인천신항 배후부지 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 냉열공급설비 관리 및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기업 선정('19. 6.)
 - 냉동창고 운영 입주기업 선정('19. 9.)

LNG냉열 에너지를 아시나요?

- 먼저 LNG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4400만톤의 LNG(Liquefied Natural Gas)를 도입하여 전국 각 지역에 가정용(도시가스) 및 발전용으로 천연가스(Natural Gas, NG)를 공급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위치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분단된 국가임에 따라, 4면이 가로막혀 있어 유럽과는 다르게 도시가스를 전량 액체상태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액체상태의 천연가스를 LNG라고 부르며 기체상태의 천연가스보다 부피가 약 1/600로 줄어들어 해상운송비가 낮아진다는 이점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많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LNG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 LNG는 연료로도 쓰이고요, 냉열도 쓸 수 있어요!

액화과정을 거친 LNG는 냉열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냉열에너지는 해상에서 운송 중인 LNG를 초저온상태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인천, 평택, 통영, 삼척 그리고 제주에 위치한 LNG 인수기지에 LNG를 하역한 뒤 LNG저장탱크에 저장하고 나면 천연가스 수요량에 따라 LNG를 기화시킨 뒤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기화과정에서 LNG에 저장된 냉열에너지를 내보내는데, 기화기를 이용하여 기화시키기 때문에 이 냉열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162℃에서 0℃로 기화 시 발생되는 냉열에너지는 LNG 1kg당 약 200kcal에 해당하며, 이 활용하지 못한 냉열에너지를 냉동·냉장창고에 활용한다면 기계식 냉동창고에 비해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를 최대 70~80% 절감할 수 있다.

●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가속화 및 민간수요 증대

- 대세는 친환경 에너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과제가 포함 되어 있다. 이 과제에는 2016년 4.8%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에 2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¹⁾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을 설치하여 친환경·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 및 IeE²⁾ 기반을 통한 신비즈니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수요를 분야별로 관리하여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을 활성화 하는 등 이를 토대로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 및 국내산업 전반에 대한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위 : 천tce]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급량	6,086.2	6,856.3	7,582.8	8,850.7	9,879.2	11,537.4	13,293.0	14,178.0
(공급비중, %)	2.5	2.6	2.8	3.2	3.5	4.1	4.6	4.8
태양열	30.7	29.3	27.4	26.3	27.8	28.5	28.5	28.5
태양광	121.7	166.2	197.2	237.5	344.5	547.4	849.4	1,092.8
바이오	580.4	754.6	963.4	1,334.7	1,558.5	2,822.0	2,765.7	2,765.5
폐기물	4,558.1	4,862.3	5,121.5	5,998.5	6,502.4	6,904.7	8,436.2	8,742.7
수력	606.6	792.3	965.4	814.9	892.2	581.2	453.8	603.2
풍력	147.4	175.6	185.5	192.7	242.4	241.8	283.5	355.3
지열	22.1	33.4	47.8	65.3	87.0	108.5	135.0	162.0
수소·연료전지	19.2	42.3	63.3	82.5	122.4	199.4	230.2	241.6
해양	-	0.2	11.2	98.3	102.1	103.8	104.7	104.6
IGCC	-	-	-	-	-	-	1.3	76.1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1)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 2)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하지만 IEA통계³⁾ 기준으로 한국(1.7%)은 독일(12.7%), 덴마크(30.0%), 프랑스(9.6%), 스페인(14.5%), 일본(4.8%), 미국(7.1%)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의 공급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 및 육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미활용 LNG냉열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서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더욱이 신에너지⁴⁾라는 범주에 포함된다면 민간기업의 LNG냉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그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LNG냉열 인기 급상승 중!

이런 친환경적인 LNG냉열 에너지는 LNG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기술적·경제적인 이유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과 탈원전 정책으로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LNG냉열 에너지의 효율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해외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공기액화분리 공정을 운영하는 서울냉열을 시작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인천신항 배후부지에 냉동·냉장 물류단지 조성⁵⁾과 유진초저온⁶⁾의 평택 오성산단 LNG냉열 물류센터⁷⁾를 구축하여 증가하는 민간기업의 LNG냉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⁸⁾포시즌월드⁹⁾의 동계스포츠허브 건설, 크리오텍의 고무파쇄 사업이 지리적인 여건과 재무적인 여건에 따라 사업실패로 연결되어 LNG냉열을 활용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LNG냉열 활용 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 LNG냉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연관산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천연가스냉열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규정과 법제도의 개정 및 산업별로 LNG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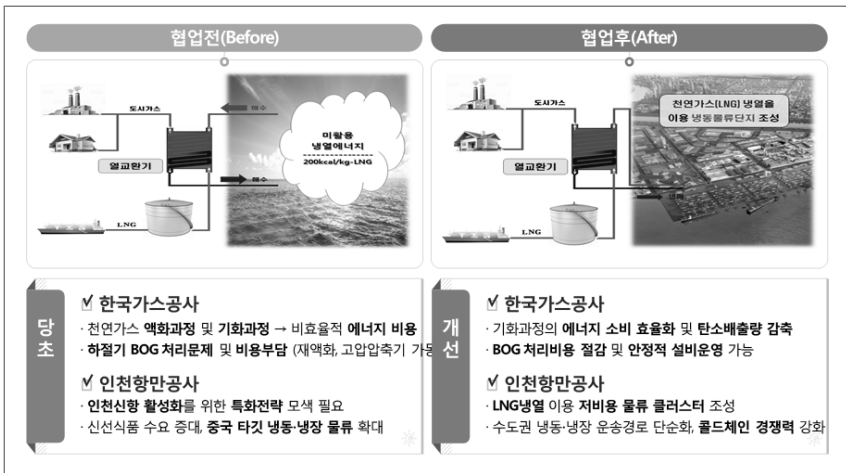
3)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통계기준은 국가별로 상이

4)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에너지를 칭함

❶ 콜드체인 함께 구축해요!

- 냉열로 묶이다.(Feat. Cold Chain)

LNG냉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LNG냉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운영사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인천신항 배후부지 냉동·냉장 물류단지 조성 사업도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인천시에서 부지에 대한 사업을 허가 받은 운영사인 인천항만공사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냉열을 공급받아 입주한 냉동·냉장 물류기업에 물류창고를 임대해주는 복합 협업 사업이다.



- 암초를 만나다...

2014년 1월 LNG냉열을 이용한 물류센터 구축의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2014년 7월 일본에 위치한 LNG냉열 활용 냉동·냉장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했으며, 2015년 2월 입주희망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가졌다. 더욱이 2016년 3월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컨부두 활성화 방안', 2016년 8월 국토교통부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 계획' 그리고 2016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반영되면서 LNG냉열을 활용한 인천신항 배후부지 냉동·냉장 물류센터 조성 사업이 순항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막상 2018년 입주기업을 모집하려고 하니 입주기업의 참여가 부족하여 7개월

간 사업이 지연되고 말았다. 이때 한국가스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허송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입주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보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생각은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항만공사가 판단하는 것과 상이했다. 생각보다 짧은 운영기간과 높은 임대료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참여기업의 니즈를 고려하여 한국가스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m^2 당 2,512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23%가량 인하하여 1,964원으로 절감하고, 20년의 운영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30년간의 운영기간을 확정하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주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렇듯 고객맞춤 정책을 펼치게 된 결과 금년 6월에는 많은 입주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기업 참여부족 이유	입주기업 선정조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임대료(2,518원/m²월)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 참여 저해요인 1순위 ✓ 운영기간 단기(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 회계-운영 관점에서 40년 이상 운영 필요 ✓ 물동량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항은 항로, 인프라 열악 ✓ 불확실한 기술적인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례 없음, LNG냉열의 안정적·지속적 공급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23% 인하(1,964원/m²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 협의 완료 (항만공사법) ✓ 운영기간 연장(30년) → 최대 50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항, 평택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등 30년(+20년) 기준 ✓ 배후시장 형성,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 식품가공 제조·유통업체 유치, 배후도로 개설 등(인천시 협력) ✓ 기술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 공정설계 협의체 운영(안정적 냉열공급방안)

이 사업은 인천신항 배후부지 약 7만평에 냉동·냉장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사업비 6,027억원이 발생하는 대규모의 사업으로서 LNG냉열을 LNG냉매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냉동·냉장 물류센터의 축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인천신항 배후부지의 콜드체인을 완공시킨다면 동북아 콜드체인 구축은 시간문제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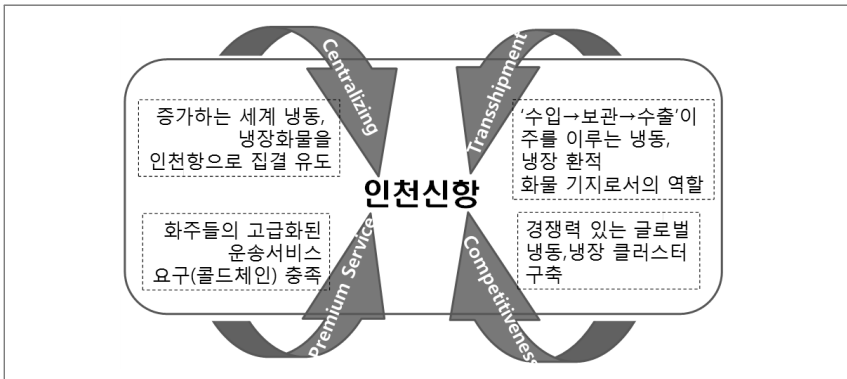
🔵 한방에 4마리 토끼를 잡다!

- LNG 설비운영 비용 절감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동북아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통해 LNG냉열을 인천신항 배후부지에 공급함으로써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LNG 기화설비의 운영비용을 연간 약 6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화기를 운영할 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도 연간 2.4만 tCO₂로 감축할 수 있다. 이는 배출권 거래 시 약 4.8억원에 해당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항만공사 또한 이런 사업을 통해 인천신항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며 중국 타겟의 물류센터에서 동북아 타겟의 물류센터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냉동·냉장화물의 물동량을 인천항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수입, 보관 그리고 수출을 축으로 하는 냉동·냉장 환적화물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생산 및 부가가치를 약 4.3조원과 고용유발 효과 약 2.6만 명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냉동창고 운영비용 절감

무엇보다 물류기업의 이익이 가장 클 것이다. 기존 기계식 냉동물류창고 대비 운영비가 연간 약 33.4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1.4만tCO₂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간접적으로 냉동창고 운영비용의 절감으로 냉동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절감효과

구분	기계식	냉열식	비용절감
전기료	약 40억원/년	약 13억원/년	약 27억원/년
유지관리비	약 9억원/년	약 3.3억원/년	약 6.4억원/년

• 사회적 편익 상승

LNG냉열을 활용하여 신선식품을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기계식 냉동기보다 빙결정 생성 속도가 빨라 조직변형이 최소화되어 고품질의 냉동식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과 관계된 문제이며 고품질의 냉동식품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헐적으로 작동되는 기계식 냉동기에 비해 24시간 적정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 맛과 신선도 유지에 탁월한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위생상태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이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음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냉동·냉장 식품 유통단체를 최소화시켜 운송 중에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연간 2만tCO₂을 감축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신항은 큰 소비처인 수도권과의 최고의 접근성으로 냉동·냉장 식품이 집결된다면 수입, 보관, 유통, 소비의 과정이 크게 간소화되어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된다.



출처 : 유진초저온(주)

● NEXT LNG냉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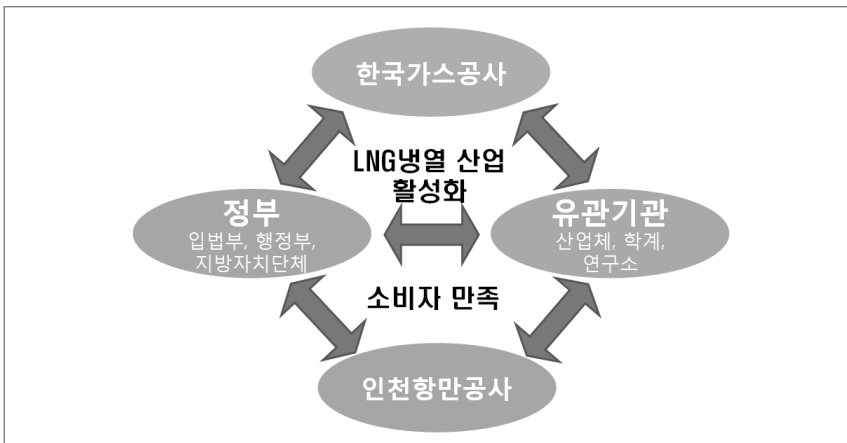
- LNG냉열을 활용하기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린다.

사회적 편익과 여러 유관기관들의 이익이 동반 상승되는 LNG냉열 활용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LNG냉열 이용 산업의 국내·외 사례 및 미래에도 이용 가능한 냉열산업 분야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LNG냉열 이용의 국가별 지원정책 및 관련 법률·제도 등 사례를 조사하여 법 개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냉열산업 분야별 LNG냉열 이용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친환경성 측면과 에너지효율적인 측면

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실질적인 LNG냉열 적용방안을 찾고 국내 LNG냉열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연관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는 한편 미래의 냉열산업을 예측하면서 LNG냉열 활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 한발 빠른 대응으로 LNG냉열 산업의 First Mover가 될 것이다. 이는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효율화 정책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업 그 이상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오롯이 한국가스공사만이 달성하기엔 역부족이기에 산업체, 학계 및 연구소와의 협업과 냉열협의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모든 관련 유관기관의 힘을 합치고자 한다. 또한 LNG냉열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아래 여러 유관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국내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LNG냉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입법부는 천연가스냉열에너지 이용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 합법적인 법테두리 안에 LNG냉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 인허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LNG냉열 에너지 활용에 적극 조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항만공사 등 LNG냉열 사업자와 LNG냉열 기술 개발관련 산업체 및 학계는 적극적인 LNG냉열 사업개발에 박차를 다해야 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0

주택임대차등록 활성화 지원으로 주거안정 개선

한국감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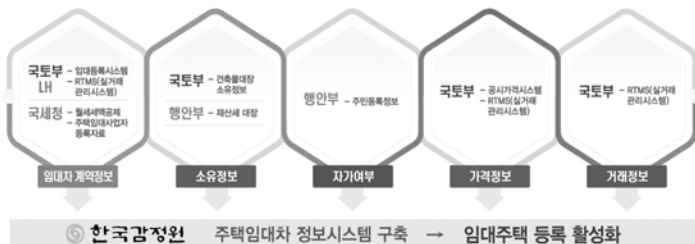
주택임대차등록 활성화 지원으로 주거안정 개선

추진배경

- 그동안 부동산 계약은 사적영역으로 분류되어 과도한 임대료 상승과 잦은 이사 등으로 국민의 주거불안 노출
 - 국민주거형태 중 약 60%에 가까운 인구가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등록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이 필요
- 기존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는 확정일자 신고와 같은 임대차계약 신고에 의존해왔으며, 신고건은 전체 임대차계약의 약25%수준에 불과
 -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의 운영·관리주체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보활용면에서 제약이 많아 제한적 활용 현실
- 주택임대차정보의 통합·활용을 통한 국민 주거생활에 밀접한 정보생산 및 정책추진 필요

추진내용

-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주택임대차시장 통합DB구축
 -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임대차 계약정보, 소유정보, 주민 세대정보, 가격정보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종합·연계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의 기반 구축
 - 5개 기관 보유 부동산관련 정보(9종 1억4천만건) DB화로 실시간 관리가능한 시스템(RHMS) 구축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성
 - 건축물대장과 재산세대장 활용, 소유정보 기반 시스템 구축
 - 임대등록자료 및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정보 데이터화
 - 자가여부, 빈집여부 등 확인 후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 연계

추진성과

다주택자현황 최초 파악

- 다주택자 경비 등 운영 결과 분석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 '18. 9. 13. 부동산대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기여

- 미등록 임대사업자(무보증 월세 등) 소득 현황 파악 가능
- 등록 임대사업자 상시 모니터링 가능
-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제도권 흡수 확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소유자별 주택현황 분석 조세재정특위 제공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자료 활용('18. 7.)
- 월세세액공제 법령 개정 활용

미신고 임대소득 그물망 감시

- '17년 임대소득 추정자료 국세청 제공 등
- 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선정 세무검증

☞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제도권 흡수(임대주택등록)로 인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세입자의 임대료 급등 방지 효과 및 저리의 장기 주거환경 조성 기여

향후계획

- 연령별, 주택유형별, 재건축지역 및 가격급등지역 등의 관심지역별 주택소유실태, 지역별 다주택자, 외국인, 1인가구 분포 비율 등의 자료분석
 - 전·월세 분포 지수 및 임대료 인상을 분석, 다주택자 조세부담 통계,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를 생산
- 관계 부처 정보활용 적극 확대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 기여
 - 보건복지부 전·월세 실거래 및 지역별 평균 시세 정보 제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정보 부족

- 무주택자와 임차인을 위한 주택 통계 부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인구가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도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큰 임대차 시장을 가진 대한민국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고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상수 우려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통해 파악되는 임대차 계약 건수는 전체의 25%로 발생 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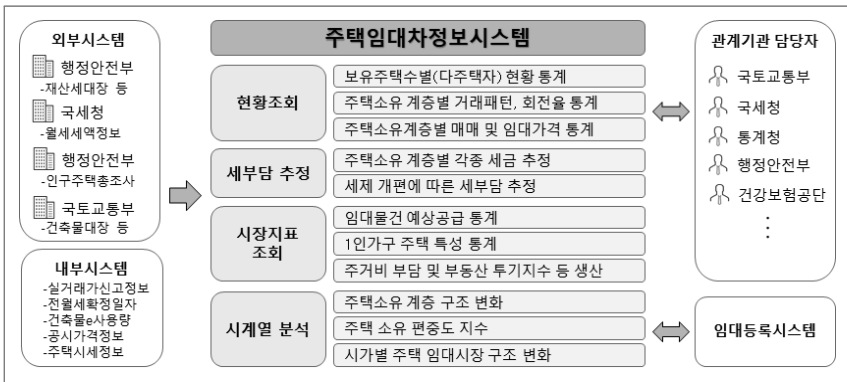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거래량·공급량 등의 통계는 다양하나,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시장 통계는 부족한 상황으로 사적(私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다.

- 투명한 임대차 시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절실

민생 안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 임차인과 같은 상대적 주거약자의 거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등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한 축으로 임대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은 관련 정부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임대등록 시스템의 자료를 재정비하고 여러 공공기관의 정보와 연계한 독자적인 임대사업 DB구축을 계획하게 되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개념도



● 한국감정원, 국토부·행안부·국세청·LH와 손잡고 대규모 융합정보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

- 임대시장 분석 및 연계DB 시뮬레이션 실시

임대차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정보, 소유정보, 자가여부정보, 가격정보, 거래정보 등 다양한 DB를 연계한 부동산 융합통계가 필요하지만 기존 부동산 정보는 시스템별, 관리주체별로 상이한 DB 관리로 통계 생산의 한계가 있어 이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분석을 위한 필요자료 정의, 수집형태, 내용, 범위, DB정비 방향 등을 결정하고, 既 확보된 LH의 임대사업자등록 정보와 감정원 보유정보 시범 시뮬레이션 후 타 DB와의 점진적 시뮬레이션 실시하였다.

- 관련 정보들의 데이터 연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서로 다른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표준화된 코드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일방적인 통계 생산에 그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임대등록시스템과 감정원 DB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7년 10월부터 임대등록 DB 정비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과의 자료협조를 위해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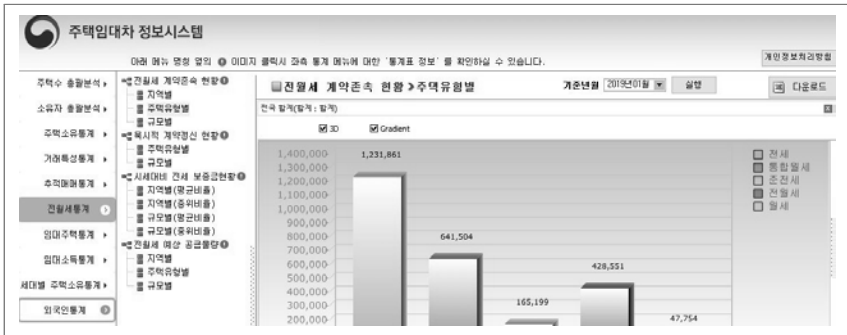
■ 타 부처 보유정보

자료 명칭	보유(운영)기관	필요성
주민등록정보	행안부	자가여부, 세대수 파악 등
재산세과세대장	행안부	소유자정보, 주거용 오피스텔 구분
월세세액공제	국세청	임대차 계약정보
건축물대장	국토부(LH)	소유정보, 주택특성 정보
임대사업자등록정보	국토부(LH)	미등록 다주택자 선별
실거래신고정보	국토부(감정원)	소유자정보검증, 목시적 계약갱신
전월세 확정일자	국토부(감정원)	임대차 계약정보
공시가격	국토부(감정원)	과세대장 여부, 주택특성 정보
건축물에너지정보	국토부(감정원)	세대수 검증, 공실여부

•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 구축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임대차 계약정보, 소유정보, 주민 세대정보, 가격정보 등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세움터 상 전산화 된 임대등록 전수 자료를 준비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수기 입력된 등록 자료를 모수자료에 입력하여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을 즉각 반영하는 임대차 정책 통계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인트라넷 생생화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성〉

-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행안부 재산세대장을 활용·구축한 소유정보의 기반으로 함
- 국토부 임대등록자료 및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종합하여 임대차 계약정보를 DB화
- 자가여부(주민등록자료 활용), 빈집여부(건축물에너지정보 활용) 등을 확인한 후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를 연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파악)**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현황 파악

〈정보보안 강화〉

- 행정망-외부망 완전한 망분리 운영, 중요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제한구역 「중요정보처리실」 별도 구축 및 접속통제기능 전용 응용프로그램 운영, 개인정보영향평가 후 개인정보 취급 최소화 등 완벽한 보안관리 유지

● 부동산정책수립 및 세무검증 등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다양한 분석결과 제공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수립기어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 분석 자료가 필요하므로 인적정보 및 물건정보 등의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해 소유자, 유형별 보유주택 특성에 따른 분포, 소유자별 자산규모 및 추정 조세부담 현황 등 다양한 분석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였다.

첫째, 다주택자의 경비율 등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임대주택 현황이 파악 가능하였으며 최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대책에 기여하였다.

둘째, 소유자별 주택현황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2018년 7월)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셋째,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제도권 흡수(임대주택등록)로 인한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세입자의 임대료 급등 방지 효과 및 저리의 장기 주거환경 조성 기여하였다.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RHMS 관련 내용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 9. 13.

관계부처 합동

2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1)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

□ 개요

- 기간 부차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 기반 구축
 - '17.10월부터 추진하여 1년3개월 분의 구축, 관련 법·규거는 '17.12월 기 마련 (연간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118조 시행)

□ 구성

-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헬안부 재산세대장을 활용해서 구축한 소유정보의 기반 위에,
 -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제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종합하여 임대차계약정보를 DB화하고,
 - 자가여부(수인등록자료 활용), 민집여부(신축에너지정보 활용) 등을 확인한 후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를 연계

<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구축 개념도 >

임대차 계약정보		소유정보		자가여부		가격정보		공시여부	
국토부	국제청	국토부	헬안부	헬안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 임대등록 사실확인	· 월세청리 계약자료	· 임대등록 자료	· 건축물대장 소유정보	· 재산세 대금	· 주민등록 자료	· 공시가격 시스템	· 실거래가 신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 정보	· 공시 정보

- 임대소득 추정자료 국세청에 제공하여 임대소득 신고자료 검증에 활용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활용하여 2017년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분석하여 국세청에 제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에서는 임대사업 세제혜택을 악용한 투기세력 검증하기 위해 2주택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추정임대수입금액 미신고 및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인 1,500명을 선정하여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세무검증 결과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30% 가산세 추가징수 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였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언론 보도자료



성공 요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료수집 근거 마련!

감정원은 2018년 3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부처로부터 임대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통계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2018년 3월)하여 감정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에 대한 정부·국민의 공감대 형성

고가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곳들이 많았다. 실제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많을 뿐더러 드러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자료를 통합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현황파악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임대차 시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관련 통계 기반을 우선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언론 등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끌어 냈다.

한국감정원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LH공사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정보를 모아 임대차 통계 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 주거약자 임대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임대차 시장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령별, 주택유형별, 재건축지역 및 가격급등지역 등의 관심지역별 주택소유실태, 지역별 다주택자, 외국인, 1인가구 분포 비율 등의 자료를 통하여 전월세 분포 지수 및 임대료 인상을 분석, 다주택자 조세부담 통계,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 종합과세 현실화를 위해 임대소득 정보를 제공, 보건복지부에 전월세 실거래 및 지역별 평균 시세 정보 등의 제공을 통해 관계 부처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시계열 단위로 주택소유편중도지수를 도출하여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 소유계층 구조 변화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주택시장 이론체계 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1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배경

- 정부예산을 수반하는 재정일자리 사업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 발생(* 18년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42.7%에 불과)
 -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통한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필요

추진내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발전3사(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가 협업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구 분		추진내용
노인 일자리 창출	바다사랑 환경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 환경정비 활동 수행 - 쓰레기 및 유해물질 제거, 자연 조정 관리
	자연문화 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및 문화유적 환경정비 활동 수행 - 불법 게시물 및 시설 계도, 쓰레기 수거 지원
	독거노인 돌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 생활 지원 서비스 -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가사활동 지원
창업	실버카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카페 설립 - 실버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통해 실버카페 설립 추진

추진성과

- **(일자리 창출)** 발전 3사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477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목표(330 자리) 대비 145% 달성
 - 한국서부발전 협력사업 : 태안지역 특성화 노인일자리 283자리 창출 및 태안군수 감사패 수상(제6856호)

연번	사업명	참여자 수
1	바다사랑환경지킴이	101명
2	자연문화관리원	102명
3	독거노인돌봄이	80명
합계		283명

- 한국남동발전 협력사업 : 경남 사천시, 고성군, 강원 강릉시, 인천 옹진군 지역에 바다사랑지킴이로 노인일자리 177자리를 창출하고, 실버카페 창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17자리 창출

연번	사업명	지역명	참여자 수
1	바다사랑 지킴이	경남 사천시	50명
2		경남 고성군	50명
3		강원 강릉시	50명
4		인천 옹진군	27명
5	실버카페	경남 진주시	17명
합계			194명

- 한국중부발전 협력사업 : 시니어 희망기업 (주)서래야, 랑주식회사 2개소 설립
- **(노인빈곤 개선)**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
 - 477명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약 872백만원의 소득창출 유도, 농어촌지역 노인 빈곤 문제 일부 개선
 - * 한국남동발전 : 약 617백만원의 소득 보충 기여, 한국서부발전 : 약 255백만원의 소득 보충 기여, 한국중부발전 : 시니어 희망 기업 2개소 설립
- **(삶의 질 향상)** 노인일자리를 통한 어르신의 경제적, 정신적 삶의 만족도 향상

〈발전사 협력 사업 우수 활동 어르신 후기〉

“기업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때 사회복지가 향상 되어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시니어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활동을 통하여 건강(정신적, 육체적)에 도움은 물론 여가 선용, 경제적인 도움에 감사하며 문화재 관리를 통하여 조상의 얼과 문화재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자연문화관리원 송OO 어르신의 후기-

-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4.41점(5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 달성
 - * 참여노인 137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향후계획

- **(기존 기관과 사업 확대)** 기존 발전사와 '18년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년에도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

기관명	'19년 사업계획
한국남동발전	• 사천, 고성, 강릉, 옹진 등 4개 지역 바다사랑지킴이 일자리 200명 신규 추진
한국중부발전	• 시니어희망기업 (주)서래야 17명, 랑 주식회사 25명 일자리 창출

- **(타 기관으로 사업 확대)** 발전3사 협력사업과 같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미 참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홍보하여 확대 예정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대두

저출산 장기화,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정년 이후인 만 60세 이상 인구는 2022년 1,529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 및 급속한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절로 인해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되며,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과 만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비중 증가에 따라 학력, 소득, 근로능력 등 측면에서 노인집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대로 노인빈곤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40% 후반대로 그 비율이 높고, 독거, 우울 노인 등 취약노인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과 역할

급속한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활기찬 노년을 위해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사업은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 사회활동사업 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니어인력 DB 구축·운영, 노인 및 노인일자리 인식 개선, 노인일자리 연구·조사 등이다.

●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8.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1%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일 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2018년 현재 약 42.7%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외에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의 문제를 노인일자리로 해결하기로 전사가 합의하였다. 그래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협력사업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인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발전사 주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사회공헌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 한국서부발전은 기관간 공동사업 추진협의를 거쳐 공동사업계획이 2018년 1월 확정하였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안한 바다사랑지킴이 사업내용이 공모를 거쳐 2018년 3월 22일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사업 제안이 공모를 통해 2018년 10월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발전3사간 협업을 통해 해안가쓰레기, 독거노인 문제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였다.

- 바다사랑환경지킴이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152천톤으로 추정되며,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해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피해가 커 해안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바다 해안가 쓰레기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자연 조경관리 등 해변 환경정비 활동을 수행하는 “바다사랑환경 지킴이 사업”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인근 지역 거주 노인을 환경지킴이로 하여 27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자연문화관리원 사업 추진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보면 국가 점검대상 시설 6,558개소 중 다수의 자연공원 및 문화유적 안전도가 약 1,000위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자연문화 관리원”이라는 직무를 개발하여 불법 게시물 및 시설 계도 등 공원 및 문화유적지 환경 정비 활동을 수행하여 10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추진**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독거노인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발전3사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발전사 인근 지역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 가사 활동 지원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실버카페 및 시니어희망기업 설립**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버카페 및 시니어희망기업을 설립하여 1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독거노인돌보미**



❑ **실버카페 사랑채**



❑ **바다사랑환경지킴이**



● **노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전사 모두 윈-윈하는 노인일자리 개발**

•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및 일자리 창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역문제 및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모델 3개를 개발하였고, 고령자 특성 및 직무를 고려한 시니어 기업 3개소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477자리를 창출하였다. 한국서부발전과 협업하여 태안지역 특성화 노인일자리 283자리를 창출하여 태안군수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그리고 한국남동발전과 협업하여 경남 사천시, 고성군, 강원 강릉시, 인천 옹진군 지역에 바다사랑지킴이로 노인일자리 177자리 창출하고, 실버카페 창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17자리 창출하였다. 한국중부발전과는 시니어 희망기업 2개소를 설립하여 추가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노인빈곤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477명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약 872백만원의 소득창출을 유도하였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총 255백만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참여노인 1인당 월 40만원을 수령하였고,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총 617백만원으로 참여노인 1인당 월 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 노인 빈곤 문제를 일부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사업 참여노인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4.41점(5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통한 어르신의 경제적, 정신적 삶의 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사업 참여노인 만족도 조사 결과

연번	구분	만족도(점)
1	근무환경 만족도	4.51
2	근무기간 만족도	3.93
3	교육내용 만족도	4.50
4	임금 만족도	4.21
5	노동 강도 적합도	4.34
6	동료직원(상사)과의 관계 만족도	4.74
7	전반적 만족도	4.65
전체 평균		4.41

* 참여노인 137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하는 착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하여

- 기존 발전사와 사업 확대 추진

기존 발전사와 2018년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9년에도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사천, 고성, 강릉, 용진 등 4개 지역 바다사랑지킴이 일자리 200명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중부발전은 시니어희망기업 (주)서래야 17명, 랑주식회사 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사업 확대

발전3사 협력사업과 같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미참여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홍보하여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며,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하실 수 있는 착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모든 임직원은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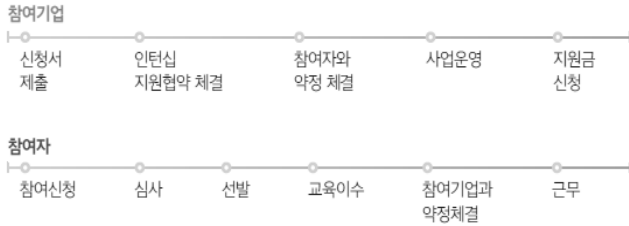
01. 시니어인턴십

인건비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2018년 주요 실적	참여기업 1,914개
	참여인원 5,686명
	계속고용률 96.0%

사업정의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참여대상	<p>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항목업체, 단단계 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p> <p>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③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 자 등</p>
지원내용	<p>일반형 1인당 월급여액의 5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p> <p>지원한도 1인당 최대 180만원</p> <p>지원방법 ① 인턴기간 3개월 월 최대 30만원 지원 ② 인턴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이상) 체결시, 추가 3개월, 월 최대 30만원 지원</p> <p>직 종 자동차 정비원, 재봉사, 양식원 등 총 357개 직종</p> <hr/> <p>전략직종형 1인당 월급여액의 5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p> <p>지원한도 1인당 최대 240만원</p> <p>지원방법 ① 인턴기간 3개월 월 최대 40만원 지원 ② 인턴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이상) 체결시, 추가 3개월, 월 최대 40만원 지원</p> <p>직 종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한식조리사, 버스운전원 등 총 79개 직종</p> <p>! (장기취업유지형) 인턴십 사업참여자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총 90만원 지원</p>

추진 절차



신청안내

	제출방법	제출서류
참여기업	해당 기관에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참여자	해당 기관에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관련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6203-0968
- 호남지역본부 : 062-365-8815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507-6377
- 중부지역본부 : 070-8795-4026
- 대구경북지역본부 : 070-7875-2382
- 제주지사 : 064-805-3077
- 경기인천지역본부 : 070-8858-8903

운영기관 대표전화

- 1577-1923(발신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운영기관으로 연결)

**시니어인턴십
주요 사례**

- 자동차부품제작원 | 자동차 부품 제작 및 성형 업무원
- 푸드서비스원 | 음식조리 및 주방 보조원
- 감리원 | 건설(소방, 전기, 건축 시공) 감리원
- 비파괴검사원 |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검사원
- 숙박시설 서비스원 | 전통문화 체험 서비스 지원 및 한옥 관리 업무원
- 식품 가공원 | 수산물(미역, 해산물 등) 건조 등 식품 가공원
- 관세사 |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 및 자문, 수출입품에 대한 세율 분류, 세액 계산 등의 업무 수행원



02. 기업연계형

간접비용 등 1인당 최대 250만원 지원!

2018년
주요 실적

참여기업 206개
참여인원 4,593명

사업정의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간접비용(직무모형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법인(영리 및 비영리)과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협력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 기업에 근로를 희망하는 자

• 신청제외: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② 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예외: 세대통합형 중 재고용형과 기술유지형에 한해 사업참여 직전 90일 이내 취업 사실이 있어도 가능

③ 사업 참여 당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 등

지원내용

세대통합형

- 개 념 | ① 채용형 만 60세 이상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직·간접비 지원
 ② 재고용형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 중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만 60세 이상 숙련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직·간접비 지원
 ③ 기술유지형 단기 촉탁직 등 일시적인 기술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전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해당 업종 관련 15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 시 직·간접비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250만원

지원내역 | 참여자 인건비* 및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지원

* 단, 인건비 지원의 경우 기술 전수자에 한하며, 기업이 참여노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일반형

개 념 | 고령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역량에 적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비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200만원 (최대 250만원)

지원내역 | 해당직무 필요 장비 및 설비, 안전시설, 개인보호구 등 안전 관리 및 작업 용이성을 위한 제반비용, 사회보험료, 홍보비 등 지원

신청 제외

직종 | 경비, 청소(직)업종 및 파견업종(직)
 직무 | 요양보호사 및 일용직 근로자

추진 절차



관련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6203-0961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70-4372-3065~7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759-1900
- 경기인천지역본부 : 032-527-9221
- 호남지역본부 : 062-714-1292
- 중부지역본부 : 042-476-9893
- 제주지사 : 064-805-3078

**기업연계형
 주요 사례**



- ㈜케이앤지 | 담배제조 특수기계 운전 업무
- LG화학 | 화학분야 안전관리
- kt(株) | 전화 선로현장 및 교환기 운영
- 유성알미늄(株) | 알루미늄 압연기술, 분리-절단 기술, 연마기 보수-유지관리 기술
- ㈜S.D.M | 금형조립

03.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자금 최대 3억원 지원!

2018년 주요 실적 참여기업 51개
참여인원 1,468명

사업정의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

지원분야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기업인증형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없음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모기업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70% 이상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신규 설립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시장형 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단체	없음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없음	개소당 1억원
	시니어직능형	특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모기업 및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70% 이상 (직장형) 20% 이상 (직능형)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고용인원

유형별 최소 고용목표 인원

구분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
최소 고용목표	10명	10명~20명	10명	5명	10명 ~ 20명

신청자격

기업인증형 | 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최근 6개월)

※ 기준고용률 :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상용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수의 비율

모기업연계형 |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탈락기업은 사업계획 보완 후 다음차수 공모 등에 재참여 할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발전형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2

해외시장 진출지원 서비스를 데이터로 업그레이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 진출지원 서비스를 데이터로 업그레이드!

추진배경

- 개방형 플랫폼 활용을 통한 무역투자 빅데이터 공유 필요
 - 데이터기반의 민간 해외시장 진출지원 서비스 부족
 - 국제무역·투자환경 연구에 필요한 마이크로 데이터 부족
-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필요
 - 수요자인 기업의 취급제품, 관심지역의 특성 고려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추진내용

- 해외시장 진출정보 개방 DB 구축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정보 개방체계 구축
 - '18년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 중소중견기업간 해외시장 정보격차 해소 및 우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전면적 정보개방으로 해외시장정보를 활용한 진출지원 서비스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빅데이터 분석 협업기반 마련
 - 코트라의 데이터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분석인프라 활용한 협업체계 구축

기관	주요 역할
코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 공개 데이터 선별 및 비식별화 • 데이터 공공개방 플랫폼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데이터 통합 시스템 지원 • 데이터 분석 인프라 제공

- 민간 연구협력 지원체계 구축
 - 심층분석 Sandbox 운영
 - 학계, 연구소, 기업 등 민간 연구자가 심층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수행

추진성과

-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 완료
 - 93개국 국가정보 및 127개 무역관의 해외시장뉴스 등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를 API를 통해 개방
 - 총 12종 1,768,841건 개방완료('19. 2. 기준)
-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오애프터는社 “해외시장 뉴스를 활용한 해외수출용 바이오 코스메틱 기획”
- 무역·투자 데이터 샌드박스를 통한 무역투자 심층연구 지원
 - 코트라 기업고객들의 수출역량진단(GCL)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연구 수행
 - NIA 지능형데이터 기획팀 및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공동연구 “수출활동 영향 요인 분석” 연구리포트 발행 및 업계 지원

향후계획

- 비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중소중견기업 맞춤 수출지원
 - 타겟 마케팅 기획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활용
 -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 국가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19~'20 구축) 확대 연계
 - 온오프라인 통합의 무역투자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학계연구활동 지원 및 데이터기반 창업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창업 연계
 - 샌드박스 지속 운영으로 무역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 활동 확대

● 해외시장 진출 서비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필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2019.1.16.” 자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데이터 가치사슬(구축, 유통, 활용)내 시장형성이 미진하고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 모두 부족하여 미국 데이터 경제규모의 1/400 수준이고 데이터의 기술력은 2017년 기준으로 미국대비 79% 수준, 인공지능 기술력은 78%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데이터 구축·개방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센터의 양질의 데이터가 결합·유통되고 새로운 서비스로 창출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데이터 경제의 부상과 사회경제적 영향, 2018.11.19.”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가공·확보·활용하는 기업, 국가, 개인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는 데이터 경제시대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2002년 시작된 디지털 시대 이후의 IC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기업들도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경제의 주체로 참여하고, 고객 데이터를 확보·활용해서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제조 설비와 과정을 최적화해 비용절감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Airbnb)는 191개국 420만개 이상의 숙박정보 및 고객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GE는 제트엔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전에 장애를 예측하고 최적의 비행항로를 제시해 연착횟수를 20% 감소시켰다.

- 무역·투자 빅데이터 공유 및 개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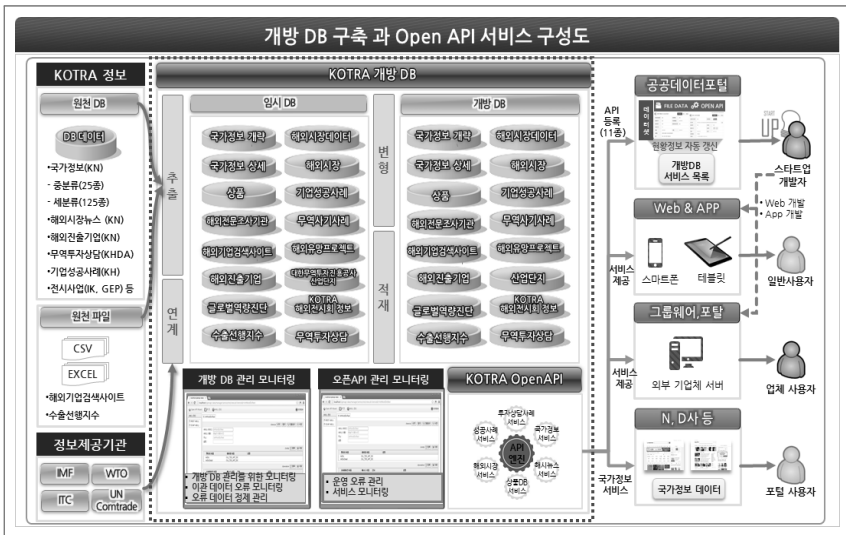
코트라는 1962년 설립되어 57년간 무역·투자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무역투자 분야의 현장데이터를 120여개 이상의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다. 코트라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창출을 선도하는 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이라는 비전과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코트라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토록 하고, 무역투자 분야의 현장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 무역·투자 데이터의 개방, 분석, 연구 체계 구축

- 해외시장 진출지원 정보DB 개방체계 구축

코트라는 2018년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 DB 개방체계 구축”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중소기업간 해외시장 정보격차 해소하고 우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전면적 정보개방으로 해외시장정보를 활용한 진출지원 서비스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 및 개선하며, 정보DB화를 통한 OpenAPI 구축하고 해외시장 뉴스포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번 과제로 개방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비즈니스 모델 창출, 수출 저변 확대 등이 예상되며, “개방 데이터 관점 및 데이터 품질 관점”에서 연간 약 40억 원의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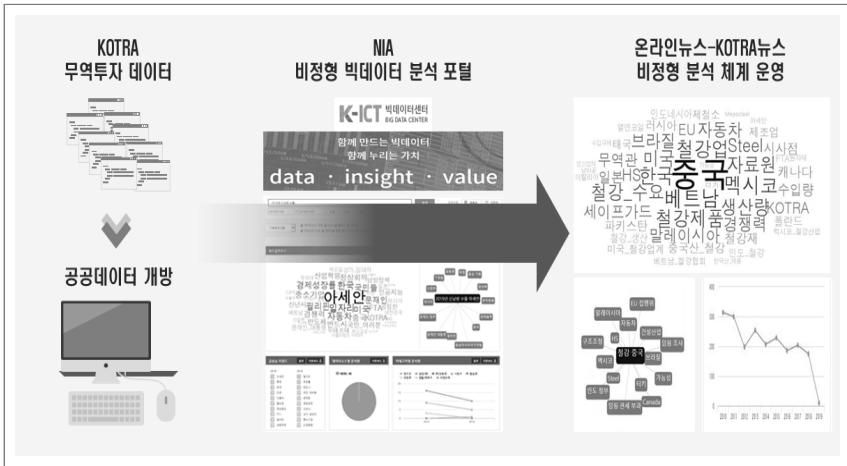
■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 DB 개방체계



• 빅데이터 분석 협업기반 마련

코트라는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서 무역투자 분야에 특화된 “해외시장 진출 지원정보 DB”를 보유하게 되었고, NIA는 국가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K-ICT 빅데이터 센터는 분석포털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두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NIA의 온라인뉴스 분석시스템으로 코트라의 120여개 무역관에서 수집된 해외시장뉴스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간 빅데이터 분석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빅데이터 분석 협업기반 마련



• 민간 연구협력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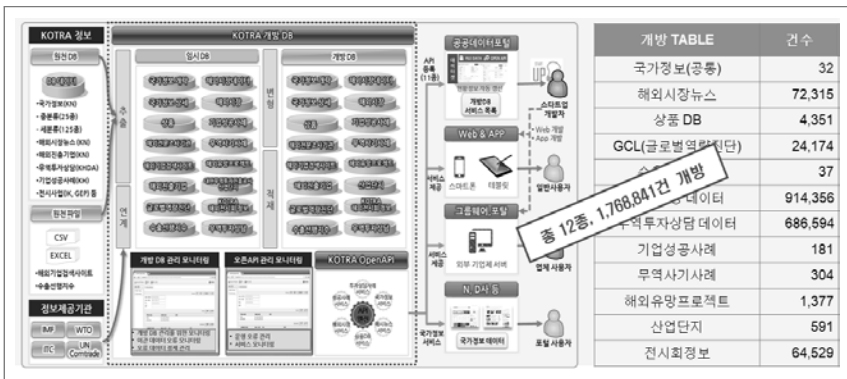
또한, 수출도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하였다. 코트라의 해외 진출상담센터는 수출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국내기업들을 위해서 글로벌역량진단(Global Competency Level Test)을 수행하여 해당기업의 역량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글로벌역량진단 결과를 NIA의 심층분석 인프라를 통해 사전승인절차를 거쳐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데이터의 개방, 활용, 연구 지원분야 성과를 내다

-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코트라는 “해외시장 진출지원정보 DB 개방체계 구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Open API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93개국 국가정보 및 127개 무역관의 해외시장뉴스 등 총 12종의 1,768,841건 데이터를 개방완료 하였다.

▣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신규 서비스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무역투자정보의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하였으며, 코트라와 한국전력공사는 동 행사를 공동주관하게 되었다. 2013년에 최초로 공모전을 시작하여, 이번 2018년은 6회째로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오애프터는 코트라의 해외시장정보를 활용하여 바이오 코스메틱을 기획·개발하여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시상명	시상내용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대상	산업부 장관상	(Interlight) 도로조명·사용자간 쌍방향 소통관리 솔루션	(G-Moc)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 정보 검색 서비스
최우수상	KOTRA 사장상	(아이세름)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홈 전기요금 관리시스템	(오애프터눈) 해외시장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코스메틱 개발
	한전 사장상	빅데이터 기반 신재생사업 스타트업 지원시스템 구축	머신러닝을 활용해 대구시의 대기환경을 예측, 제공
우수상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상	(HERE? HERE) 도보 길안내 서비스	(SunBot) 태양광데이터를 활용한 폭염피해 예측 서비스
	중부발전 사장상	(AI Tailor) AR과 시를 이용한 사용자 의류치수 측정 서비스	인공지능 스마트 침대로 수면시 이상 징후 알람 서비스
	남동발전 사장상	(Do Not Sink) 싱크홀 예측 서비스	(Emodeling) 에너지 절감을 위한 리모델링 서비스
장려상	동서발전 사장상	(Cosmos) 제품별 소비전력량을 이용한 스마트컨슈머 서비스	-
	남부발전 사장상	(Handi eye)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안내 디바이스	-
	서부발전 사장상	노인층 대상 색채를 활용한 알림 디바이스(투약시간 등)	-
	한국산기평가원 원장상	선박의 IGS장치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
	에너지공단 이사장상	(Sigma including Next) 전자제품 구매시 예상전기요금 등을 비교분석	-

• 심층분석 샌드박스를 통한 무역투자 심층연구 지원

심층분석 샌드박스를 통하여 코트라가 수행한 기업역량진단(GCL Test) 데이터를 활용하여, NIA의 지능데이터 기획팀에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수출활동 영향 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작성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역·투자 데이터의 앞으로의 발전방향

- 비정형 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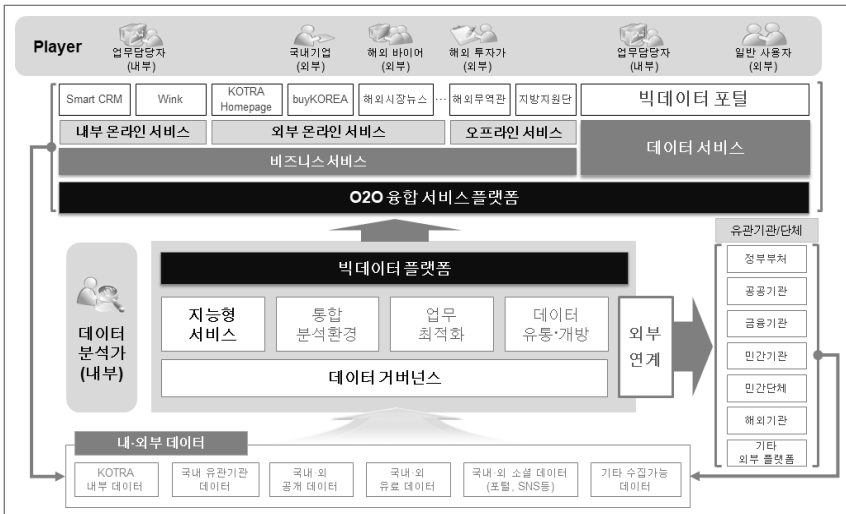
앞으로, 코트라는 기 확보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정보 DB와 NIA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수출지원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전략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코트라는 국가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2019년부터 2년간 구축예정으로, 향후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무역투자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구축내용 들은 다음과 같다.

- 무역·투자를 수집·분석, 운영·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 무역투자분야 데이터 모델 개발·관리, 메타데이터, 데이터 품질 등 거버넌스 체계
- 빅데이터 활용 지능형 서비스 개발
- 데이터 내외부 연계 및 공유 개방체계 수립
- 통합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구축

■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 학계 연구활동 지원 및 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

코트라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창업 연계, 샌드박스 지속 운영으로 무역투자 경쟁력 강화 학술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3

외국인 불법취업 근절하고,
내국인 일자리는 보호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불법취업 근절하고, 내국인 일자리는 보호하고!

추진배경

- 외국국적동포(H-2)는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라 취업교육 수료 후 합법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불법취업 비율이 49.4% 차지***

- **외국국적동포(H-2) : 중국 및 CIS 동포 대상** 단순노무업종 등에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 **건설업 취업등록제**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건설업 취업 동포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한 동포에 대하여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이에 따라, 내국인 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일자리 갈등 심화, 임금 및 근로조건 하향화, 불법취업자 인권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화****

* 건설업 외국인 취업자 총 16만 8천명 중 **불법 8만 3천명(49.4%)**으로 추정(「2018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7. 11.)

** [KBS 연속기획] 건설 현장 잠식하는 불법 취업자(KBS, '17. 10.)

-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최저가 수주경쟁, 불분명한 고용관계에 따른 체계적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

* [중국인 장악한 건설인력시장] 하청, 하청, 또 하청...건설인력 공급구조 기형적(국민일보, '18. 3.)

- **‘합법적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시행기관으로서, 외국인 불법취업 근절을 위한 ‘현장중심의 적극적 행정’ 필요**

추진내용

체계적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외국인력 불법취업 예방’**

(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육 건설업 취업 인정증

☞ 취업교육 수료 시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인정증 발급

현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와 출입관리 단말기를 이용하여 퇴직공제금(하루 5천원)을 자동으로 적립하는 제도

구분	내용
질적 측면	• 공단의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 시스템 연계 및 현장 활용 = 건설업 취업교육 수료정보 + 건설업 근로 종사자 정보
양적 측면	• 건설업 취업교육장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교육 제도화

추진성과

AS-IS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분명한 고용관계 등에 의한 체계적 인력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외국인 불법취업이 지속적으로 발생 • 건설업 취업교육과 전자카드제의 분리 운영으로 홍보 미비 및 행정 효율성 저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인정증 정보연계 및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도입으로 외국인 불법 취업 사전예방 • 퇴직공제금의 경제적 유인을 통해 카드 소지 및 활용률 제고

향후계획

- 향후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카드의 범용성 확보
 - 공공공사 100억, 민간공사 300억 이상 현장에 의무적용 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에 '19년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준비 중에 있음
 - * 현재 국토부 소관 300억원 이상 및 지자체(서울, 부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의무적용 ('18.12. 기준 61개 공사현장에 167개 단말기 설치)
- 건설업 전자카드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점검
 - '19년도 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전자카드 관련 연구용역 시행 시,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업률 점검** 등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분석**
- 취업교육장 전자카드 홍보 강화를 통한 발급인원 증가 도모
 - 취업교육장 전자카드 순회교육 등을 통해 '19년도 건설업 취업교육 시행 시 **교육인원의 약 90% 이상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건설업 외국인 불법취업 막아달라!”현장의 목소리

2019년도 2월 18일 새벽 5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노조원 약 1,200명이 한남동 한 고급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내 최고가 주택 건축’이라고 주장하는 광고 문구를 붙인 이 현장에서는 저임금으로 불법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물을 짓고 있다”며 “외국인 불법취업 막아 달라”가 집회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번 집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건설업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다. 2017년도 10월 KBS 연속기획에서도 서울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불법취업 실태 관련 주제를 다루었던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국인 불법취업이 가져오는 연쇄적인 사회문제가 많은데, 특히 내국인 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일자리 갈등, 임금 및 근로조건 하향화, 불법취업자 인권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 불법취업이 성행하게 되면 건설업 취업현장의 임금 및 근로조건 또한 하향화되어 형성될 것이고, 하향화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일반화가 되면 전반적인 건설현장 취업구조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건설현장 구조가 고착화 되어버리면 내국인 유입요인이 아닌 내국인 유출요인이 될 것은 자명하며,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기에 건설현장 내국인 근로자의 시위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불법취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불법취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 2018년도 3월 국민일보 기사(중국인 장악한 건설인력 시장) 하청, 하청, 또 하청... 건설인력 공급구조 기형적)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하청을 주는, 이러한 건설현장 구조가 만연하다. 즉 건설업 특성상 다단계로 하도급 되면서 최저가 수주경쟁, 불분명한 고용관계에 따른 체계적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취업 예방을 위해 주요 원인인 건설업 외국인 인력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특히 외국국적동포(H-2)의 경우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라 취업교육 수료 후 합법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외국인 불법취업 비율이 약 49.4%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법적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시행기관으로서, 외국인 불법취업 근절을 위한 ‘현장중심의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건설업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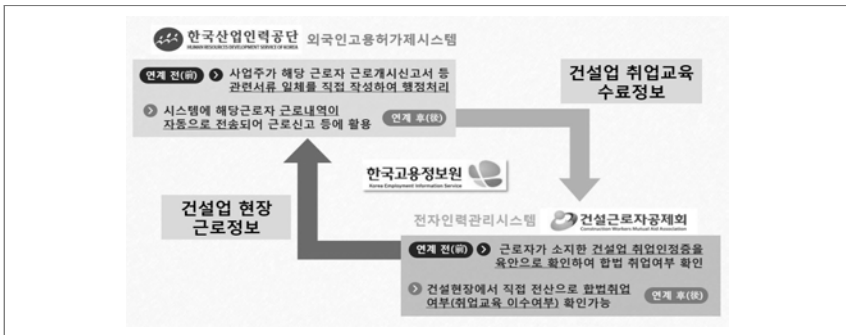
● 교육과 현장을 ONE STOP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교육’ 실시 기관으로서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을 통한 건설업 취업교육 수료자, 즉 합법적 취업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현장에서 실제 건설업에 근로하는 외국인 종사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교육을 수료한 합법적 취업자인 것은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합법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데이터베이스는 있지만 그 근로자들이 합법근로자인지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각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교육정보와 현장 근로정보를 연계하고, 동시에 공단의 외국인 취업교육 입교 시 실제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¹⁾ 발급 및 활용교육을 통해 전자카드 발급률과 활용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현장과 교육의 정보를ダイレクト로 연결함으로써, 현장에서 교육 수료 여부를 다른 매개체로 확인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제도인 전자카드를 활용함과 동시에 교육정보를 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Two-Track으로 움직이던 교육과 현장을 연결하여 현장관리자의 행정을 덜어줌과 동시에 외국인 불법취업을 예방하고 합법적 취업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시스템 연계 및 활용 형태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와 출입관리 단말기를 이용하여 퇴직공제금(하루 5천원)을 자동으로 적립하는 제도로서 현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전담하고 있다.

● 건설산업 외국인근로자와의 행복한 동행

201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업 취업교육장에서 25,787명, 취업교육인원의 약 63.7% 전자카드를 발급받았으며, 2018년도 11월부터는 전자카드를 활용하는 실제 사업장에서 해당 외국인의 합법 취업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외국인이 아침에 출근해서 전자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할 경우 건설현장 관리자 혹은 사업주가 즉시 전산으로 취업교육 이수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건설현장 관리자(사업주)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화면

근로자 정보 조회

근로자정보	전자카드 사용정보	출/퇴근정보	교육이력
-------	-----------	--------	------

① 고유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국적	기타	한국 이력(외국인인 경우)	
성별	남	체류자격	H2
카드발급여부	발급	지문등록여부	사용기간 만료

② 기초연천교육

교육이수여부	미이수	교육이수일	이수기관
--------	-----	-------	------

③ 취업인정 교육

취업인정 교육 (2건)									
No.	증명서번호	증명서 유효 시작일	증명서 유효 만료일	취업교육기관	신청일자	연장구분	처리상태	승인일시	수정일시
1	C151711811220007	2018-11-26	2019-11-25	한국산업인력공단(수원)	2018-10-16	승인	처리완료	2018-11-27 00:00:00	2018-11-27 00:00:00
2	C151711709250004	2017-09-25	2018-09-24	한국산업인력공단(수원)	2017-08-14	승인	처리완료	2018-09-20 00:00:00	2018-09-20 00:00:00

실제 현장에서 전자카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도 12월 직접 현장을 찾았다. 2015년도 9월부터 전자카드를 도입한 D산업의 서남 물재생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이 현장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 240~260명(외국인 26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었다.

해당 현장관리자는 먼저 불법취업 예방 효과를 손꼽았다. 아침에 출근할 때 전자카드를 찍고 또 퇴근할 때 전자카드를 찍도록 내부규정이 되어있고,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기만 하면 교육 이수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합법 근로자만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불법고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최대효과로 꼽았다.

두번 째로는 노무관리의 효율성 부분이다. 전자카드 도입 이전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공제금을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여야 하였으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이후에는 퇴직 공제금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현장관리자도 좋고, 외국인도 좋은 일석이조의 제도임을 체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근로의 질 향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소속감 강화 및 현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고취시켜준다고 하였다. 전자카드 도입 이전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퇴직공제금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그것이 외국인근로자들의 권리인 것도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전자카드 활용이 현장에서 시작되면서 전자카드를 찍는 행동 자체가 외국인들의 근로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현장의 한 외국인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찍을 때마다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자카드 활용이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고 있었다.

전자카드 단말기 형태



<부스형>



<벽부형>

🔵 외국인 불법취업은 down, 건설근로자 복지처우는 up!

이러한 협업추진 결과, 2018년도 12월 실시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업장 만족도 조사에서 전자카드의 국내 건설산업 긍정적 영향 여부에 응답자의 67.2%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현장에서 전자카드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세부 사항을 보면 건설근로자 행정관리 효율성(3.66점/5점), 사업주의 노무관리 수준 향상(3.51점/5점), 퇴직공제금 적립 투명화(3.44점/5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육이수정보 연계를 통해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의 합법 및 불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 부분에 대하여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자카드 활용이 불법고용 관행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고용구조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외국인력 불법취업 방지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 하향화,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양질의 고용환경 조성을 통한 건설현장 내국인 유입요인 제공 및 일자리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법고용이 성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하향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카드를 통한 불법취업 방지 효과를 통해 건설업 고용환경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카드 발급 및 교육을 통해 전자카드의 필요성 및 활용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 인권강화와 복지처우 개선에도 증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취업교육 시에 전자카드를 발급하기 이전에는 단순 홍보 등을 통해 별도의 창구로 발급받았지만, 이제는 취업교육 이수 시에 전자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바로 전자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설업 취업교육 정규교과과정 이외에도 별도로 전자카드가 무엇인지, 전자카드의 필요성과 활용법 등을 교육하게 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 인권강화에 기여하였다.

전자카드제는 2017년 12월 12일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전자카드제를 통한 경력관리 기반구축'과 '불법외국인력 퇴출 및 노무관리 책임 강화' 부분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적·대외적으로 사안의 중대성 및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법무부, 고용노동부 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기관 간 벽 허물기'와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으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에도 전자카드 범용성 확보, 건설업 관련 연구용역 실시, 전자카드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전자카드 범용성 강화를 위하여 gogo!

현재 전자카드는 국토부 소관 300억원 이상 및 지자체(서울, 부산)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전자카드의 범용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공사 100억, 민간공사 300억 이상에 의무적용 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준비 중에 있다. 법적 구속력을 통해 범용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외국인 불법취업 예방 효과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건설업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인 불법취업률과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취업교육장 전자카드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인원의 약 90% 이상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4

석탄광산을 태양광광산으로 전환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력 도모

한국지역난방공사

석탄광산을 태양광광산으로 전환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력 도모

추진배경

- 석탄산업의 사양화,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업모델 필요
 - '86년 석탄산업합리사업단 출범 강제 폐광 추진
 - '15년 탄광 구조조정 정책으로 지역경제 몰락
(43개 탄광 폐광/실직자 19,000여명 발생/인구 47% 유출)
 - '16년 정부 장성광업소 폐광('21) 발표로 지역소멸 위기
(지역위기감 정점/극렬한 대정부 투쟁/사회적 갈등 고조)

추진내용

- (사업개요) '석탄광산'을 '태양광광산'으로 전환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훼손된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창출 및 지역에 환원하는 '태양광 광산' 사업 추진

- (사업현황) 4개소 태양광 9MW + ESS 27MWh 추진

사업명	용량	추진경과	비고
함백	1MW + 3MWh	'19. 10. 준공예정	구매계약('18. 11.)
강릉	4MW + 12MWh	인허가 추진 중	주민민원 해결('19. 1.)
삼척탄좌	3MW + 9MWh	발전사업허가 취득('18. 8.)	계통부족
영월	1MW + 3MWh	복구지 하자보수 중	계통부족

※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은 화재·폭발 사고로 정부의 안정화 정책 마련 시까지 사업 보류

- 추진경과
 - ('16.12) 폐광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업무협약
 - ('17.12) 함백, 강릉 태양광광산 사업허가 취득
 - ('18. 4) 함백탄광 산림복구지 태양광광산 개발 업무협약
 - ('18. 8) 삼척탄좌 태양광광산 사업허가 취득
 - ('18.10) 함백태양광광산 발전설비 계약체결('19. 10. 준공 예정)

추진성과

-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新 산업 모델 제시
 - '태양광 광산', 석탄을 대체할 폐광지역의 수익사업으로(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17. 12. 27.)
- 주민이 원하는 태양광 발전소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함백탄광 산림 복구지 태양광광산 개발 업무 협약'(18. 4. 26.)
- 환경 훼손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폐탄, 폐경석(석탄을 골라낸 후 남는 광업부산물) 등을 매립한 훼손된 폐광지역 부지를 활용

향후계획

- 태양광광산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Biz 모델 개발로 지역 일자리 창출
 - 교육, 문화, 관광 1박2일 콘텐츠 '삼탄 Starry Camping' 개발 추진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공유 모델 다각화
 -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공유하는 사업
 - *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음

● 사양길에 오른 석탄산업, 소멸위기의 폐광지역

- 과거 우리나라를 견인하던 석탄산업 위기에 처하다...

1970년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창고에 연탄을 그득히 쌓아두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만큼 연탄은 우리의 생활과 산업에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광산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 가정용 에너지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연탄과 석탄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폐광지역은 차츰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폐광지구의 증가는 사업자의 급격한 감소, 또 이로 인한 광산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폐광지역의 경제는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2015년 탄광구조조정 시행으로 43개 탄광 폐광되었으며, 약 19,0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 하였으며, 인구 또한 47% 유출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거 1999년부터 태백시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으로 지정 후 제조업으로 지역의 주력산업 변화를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역의 경제는 부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에 따라 지역의 유일한 광산이었던 석공 장성광업소가 2021년 폐광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폐광지역 신규 대체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p>떠나가는 광부들</p> 	<p>폐업절차 추진 중인 상가</p> 
<p>▲ 지난 1999년 12월 태백 중앙로 거리에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반발, 태백시민 상존광학회(구대회)가 열었다. 본사 DB</p>	<p>10년간 1,126명 감원</p>	<p>개점휴업 상가 속출</p>

☉ 석탄광산을 태양광광산으로 탈바꿈

광산지역의 잇단 광산의 폐광과 지역주민의 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자체, 광해(광해피해)방지과 폐광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신재생에너지사업자로서 우리공사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사업이 “태양광 광산” 사업이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런 사유로 인해 임야 또는 농지 등에 건설을 위해서는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면서 태양광사업의 육성을 위해 건물의 지붕과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광으로 인해 쓸모없는 폐광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발전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태양광 광산” 사업이며, 이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이 강원도 함백 폐광부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광산” 사업이다.

“태양광 광산사업”을 통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폐광으로 인해 환경훼손 문제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공사는 RPS의무이행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부함으로써 각 이해당사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공사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주민대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8년 4월 26일 “함백탄광 산림복구지 태양광광산 개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상기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정선군은 관련 인허가의 적극적 지원, 지역발전기금 활용 지역경제활성사업 공동발굴하고, 우리공사는 태양광광산 발전소 건설, 운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한국광해공단은 기부된 지역발전기금의 관리, 발전수익 활용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공동발굴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공사는 태양광 광산사업은 발전소운영에 따른 초과수익의 환원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태양광 발전소

유지보수 시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모듈청소, 잡초제거, 축 변경 등은 마을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마을조합, 협동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업무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 **함백 탄광 산림복구지 태양광광산개발 업무협약**



이전 협약식의 한여름 정장은 신동훈 주민대표, 최은희 지역노동조합장 등협약한 순회복지가 협회서비스 들

▶ **업무협약서**

(함)함백탄광 산림복구지 태양광광산 개발 업무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폐광지의 전용 및 경제 활성과 장 시너지 가치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민대표, 직공, 학년, 장애인이 협력하여 함백 산림복구지를 활용한 태양광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유지) 정선군, 주민대표, 직공, 학년 및 정해공은 상호보완과 신뢰,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 (협약내용)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 한다.

기 명 명	역 할	비 고
정 선 군	- 탄력기 지원 - 지역발전기금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발굴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신동훈 주민대표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발굴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추진	
대한적십자공사	- 산물처리 경제지원물 위한 함백 산림복구지 제공	
한국적십자당공사	- 발전소 건설 및 관리 - 태양광발전기 구조 조립에 기여(지원/관리)	
한국광해관리공단	- 지역발전기금 관리 - 협약이행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추진 및 성실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위한 용기제공 협력(발전/발전) - 폐광지역의 산물 처리와 지원	

제4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이행한다.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 선정 및 협회제를 구성한다.

제5조 (협약변경)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간의 협의하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호 비공개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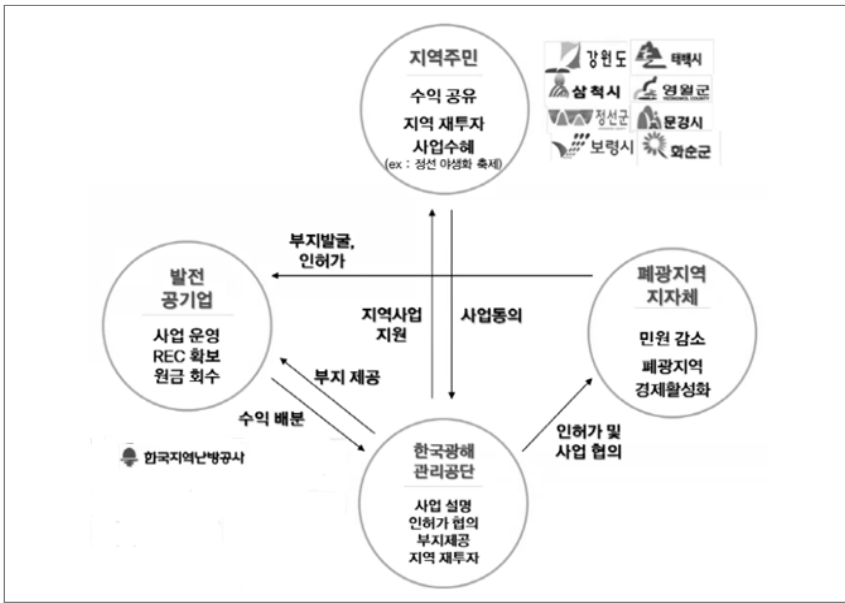
제7조 (효율성 및 유동성) 본 협약은 장애기반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간에 협약서의 폐기 또는 변경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유효기간이 3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의결방법) 본 협약은 각 기관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어떠한 일적인 의무 및 구속력 있는 계약을 구성하지 않으며,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4월 26일

정선군 부군수 김주호 김주호	신동훈 주민대표 민영희 이병호 이병호	대한적십자공사 한국적십자당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조영수 김광영 조영수 김광영 조영수 김광영
-----------------------	----------------------------	--

태양광 광산사업 비즈니스 모델산업통산자원부 '17.12.28자 보도자료



● 함백 태양광광산 사업의 추진

- 계통 미확보, 사업의 지연... “인허가와 발전소 건설 일괄계약 추진”

태양광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각종 민원 및 인·허가 등으로 인해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태양광사업은 입야 또는 전답 등 지역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관계로 ① 주민수용성, ② 전력계통, ③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장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함백 태양광광산 발전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까닭에 마을주민과 지자체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주민수용성의 문제는 사업추진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광이 위치한 강원도 대부분은 태양광 과열지구로서 한전 계통이 부족한 상황이며, 계통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4월에야 비로서 계통확보가 완료된 상황이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 태양광설비와 ESS(Energy Saving System)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8년 말 발생한 ESS 설비 화재, 폭발 등의 문제와 이를 우려한 주민의 요청으로 인해 ESS를 제외하고 재차 설계를 추진하는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017년 12월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음에도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대비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공사는 지역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 협력 속에서 신속한 사업추진방향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당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사업취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우리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2018년 10월)하고, 현재는 사전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쳤으며, 시공을 위한 최종단계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함백지구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마무리하고 최적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초과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광산사업의 시범사업을 완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함으로써 이후 계획 중인 강릉지구, 삼척탄좌, 영월등의 사업에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 태양광광산 연계 新 Biz 모델 개발로 일자리 창출 기여

우리공사는 폐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광산사업의 시행을 통해 1차적으로 초과수익을 공유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의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공사와 지자체와 협의 중인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삼척탄좌에 설치할 태양광광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태양광광산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수익금을 활용하여 캠핑장을 구축하고 마을 주민들이 캠핑장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며, 더불어 삼척탄좌태양광광산 사업대상지 인근의 우수한 교육, 관광 인프라인 삼탄 아트마인, 정암사, 함백역사관 등을 접목하여 1박2일 관광 코스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초과수익금의 기부만이 아닌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Samtam Starry Camping 사업모형



또한, 폐광부지를 활용한 지역주민과의 수익공유 및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즉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모델 및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부울경 협동조합) 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국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사업은 설치에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단점이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양하고, 방치됨으로써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5

100만호 임대주택 기반 주거생활플랫폼 “내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100만호 임대주택 기반 주거생활플랫폼 “내친구”

추진배경

- 현재 LH는 '18년 100만호, 향후 20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과 더불어 관련 주거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갖춘 종합 주거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곡점에 위치
- 그러나 LH 차원의 주거복지서비스 확대만으로는 자원 부족 등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다양한 니즈 충족에는 한계

추진내용

- 기존 LH 주도의 공급 전략에서 탈피하여, 입주민·지역사회·사회적 기업 등(LH Friends)이 상호 자발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주거서비스 향상

(주요 서비스)

공유마켓	알뜰쇼핑	커뮤니티	포인트 제도 및 임대료 차감
입주민간 주거서비스 (육아, 돌봄 등) 및 일자리 공유	지역농산물,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 판로 지원	공지사항, 입주민 게시판, 임대료·관리비 조회, 하자접수, 설문조사, 각종 생활정보 제공	(적립) 플랫폼 활동, 물품 구매(3%) (사용) 임대료 차감·물품 구매, 주거복지서비스에 활용

협업체계

-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쇼핑·생활정보·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유기적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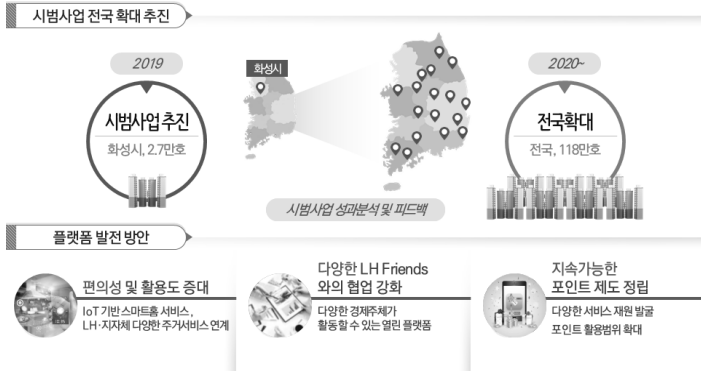
협업성과

- 참여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18년 12월 화성권 2.7만호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론칭을 완료하였으며, 협업형 플랫폼 경제를 기반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공공서비스 혁신·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

입주민 생활혁신	협업 효과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를 통한 생활혁신 • 생필품 특가구매 • 플랫폼 포인트로 임대료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물품 판로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서비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기반 혁신성장 • 주거서비스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향후계획

- 화성권 시범사업 운영 후 전국 100만호 임대주택으로 확대 추진



● 새로운 시대, 주거복지방향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LH의 고민

• 임대주택 100만호 시대, LH의 새로운 고민과 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그간 보다 살기 좋은 주택, 더 새로운 도시를 만들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그려왔다. 그 결과 임대주택 100만호는 우리 국민이 두 발 뻗고 쉴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1·2기 신도시와 혁신도시, 수많은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든든한 터전이 되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임대주택 100만호 시대에 입주민의 니즈는 단순히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입주민들의 일상을 살펴보자.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 워킹맘의 '육아에 대한 부담', 여느 주부의 '가계부 걱정', 요즘 세대가 느낄 '오프라인 중심인 단지 생활의 불편함' 등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과 고민에서부터 주거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LH의 새로운 고민과 도전이 시작되었다.

• 새로운 협업을 만든 “내친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더욱 다양해지는 입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LH는 주거복지사업의 방향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지만 LH 주도의 공급자 중심 주거서비스는 그 한계가 명확했다.



입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입주민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온라인채널이 필요했고, 다양한 주거서비스 콘텐츠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협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여야 했다.

이에 임대주택 입주민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실시간 소통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고, 약 1년여 간 다양한 플랫폼 참여주체와 협업·협력하여 새로운 주거복지플랫폼 “내친구”를 구축하고, 2018년 12월 화성권 29개 단지, 2.7만호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

● LH 입주민의 친구, 친구들이 모여 만드는 새로운 가치 내친구 란?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따뜻한 플랫폼”

내친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스마트폰 App에 구현한 LH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복지플랫폼이다. 스마트폰을 매개로 입주민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모여 다양한 정보, 의견을 나누고 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공유함으로써 입주민 주거복지가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가 실현된다. 기존에 출시된 입주민 카페, 아파트 앱을 넘어 입주민과 입주민, 다양한 지역 경제주체, 각종 주거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라고 할 수 있다.

단지라는 울타리 내에서 내친구 앱을 통해 입주민 간 재능과 삶, 일자리를 손쉽게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복원되고, 한 발 더 나아가 플랫폼 참여주체를 지역사회,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넓은 주거복지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내 친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똑똑한 플랫폼”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간한 ‘Home, 미래의 문명을 바꾸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의 집이 ‘주거지(Shelter)’의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의 생활 방식(Lifestyle)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라이프 플랫폼(Life Platform)’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에 대응하여 내친구 앱은 입주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편의 기능을 탑재하였다.

내친구 앱은 크게 ① 커뮤니티, 관리비 조회 등 생활편의 기능 ② 주민들의 재능과 삶을 공유하는 공유마켓 ③ 소상공인·사회적경제주체·로컬푸드 등을 연결하는 알뜰쇼핑,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아우르며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를 가능토록 하는 ④ 포인트 기능을 제공한다.



● 내친구 주요 서비스

- 즐겁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내친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으로, 단절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입주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민은 스마트폰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민 라운지에서 이웃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또한 계약정보와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조경시설 등 공용시설이나 내집 화장실 하자보수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설문조사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단지 운영에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생활정보 메뉴에서는 LH,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복지센터 등이 제공하는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채널에서 일일이 찾지 않아도 내친구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입주민 주거서비스에 동참하는 지역상가, 기업, 복지기관 등 LH Friends들을 입주민에게 소개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다. 이 밖에도 관리사무소 업무지원 등 편리한 단지 생활을 위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마켓”

내친구 앱이 제공하는 공유마켓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입주민들이 재능과 물품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온라인 벼룩시장’이다. 단순한 중고물품 거래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가 필요한 입주민과 육아·긴급돌봄 등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이 매칭되어 단지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서비스가 창출된다.

가까운 이웃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웃 간의 거래는 내친구 앱이 가지는 강점으로, 간단한 중고물품·아기 옷들을 사고파는 것 뿐 아니라 단지 내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독감에 걸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때 혹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 저녁식사를 준비할 수 없을 때, 스마트폰으로 단지 내 입주민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웃 간의 관계가 이어져 공동체가 복원되고 단지 내 다양한 생애주기별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치소비를 위한 “알뜰쇼핑”

알뜰쇼핑은 입주민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복지몰로 플랫폼의 주된 수입원이다. 우체국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기관과 제휴하여 다양한 양질의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알뜰쇼핑 매출액의 일부는 포인트로 적립되어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에 재투자 된다. 현재 우수농산품, 중소기업제품, 가치상품 등 900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 주 입주민들을 위한 특가전과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입주민 복지와 우수중소기업·사회적기업·로컬푸드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를 위한 “내친구 포인트”

내친구 포인트는 입주민들을 모으고 커뮤니티를 확대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입주민들은 내친구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알뜰쇼핑에서 1만원어치 생필품을 구매하면 100원(1%)이 적립되고, 공유마켓이나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후기를 작성하면 소정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1point=1원의 가치로 환산되어 물건을 구매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쓰인다. 알뜰쇼핑 등 매출의 2%는 공용 포인트로 적립되어 단지 내 도서관 운영, 놀이터 개보수, 교육 프로그램, 기타 각종 행사 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활용된다.

또한 환경미화 등 다양한 참여기관들이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지역상권, 후원단체들의 지원금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거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포인트 제도

 <p>입주민 포인트</p>	 <p>공용 포인트</p>
<p>POINT 적립</p> <p>상품 거래, 서비스 매칭·공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Point로 적립</p>	<p>POINT 적립</p> <p>온라인 쇼핑몰 운영·LH Friends 광고수익·주거복지재원·후원 등</p>
<p>POINT 사용</p> <p>재화·서비스 결제, 임대료 차감 등에 사용</p>	<p>POINT 사용</p> <p>운영자금 외에는 전액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 주거복지서비스에 재투자</p>

협업형 플랫폼 경제로 시너지 극대화

각 분야의 전문기관과 MOU 체결 등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쇼핑·생활정보·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협업형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협업 기관별 역할



주거복지재단은 관리사무소, 입주민과의 소통과 포인트 재원운영 및 각종 서비스 발굴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체국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알뜰쇼핑의 운영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는 가치소비관 운영, 육아돌봄 교육 등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성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발굴과 정보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으며, 민간·지역 사회 등 플랫폼 협업기관과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함께 만든 성과, 그리고 더 많은 내친구를 위하여

입주민, 지역사회와의 소통·상생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1년여 간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여러 전문기관들의 지원에 힘입어 2018년 12월 말 화성권 소재 29개 단지 임대단지 2.7만호 입주민을 대상으로 내친구 시범사업을 런칭 하였다.



* (LH친구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폼 홍보, 일자리매칭 등을 수행하는 단지별 입주민 코디네이터 선발·운영 중(49명)

내친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리소, 입주민과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활동이 익숙지 않은 노년층등을 지원하기 위한 LH친구 코디네이터 49명을 입주민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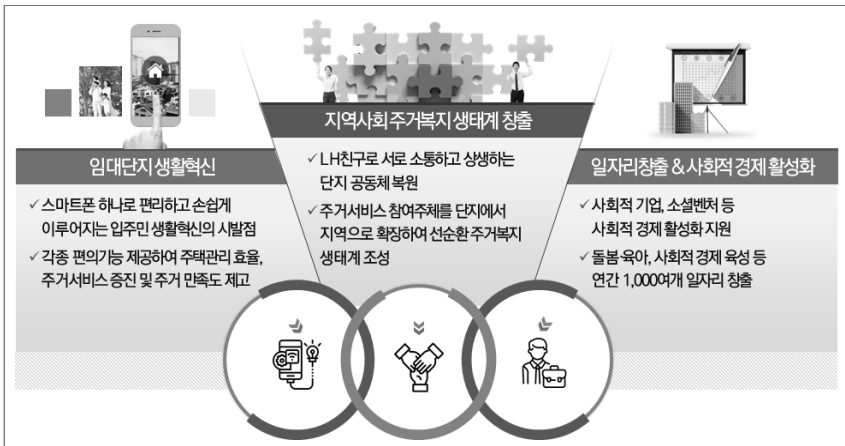
- (동탄신도시 입주민 이○○)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했는데요. 적립된 포인트는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동탄신도시 입주민 나○○) “알뜰쇼핑 이용해봤어요. 마침 필요한 물건이 있길래 구매해봤는데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깔끔하고, 게다가 제품 퀄리티도 좋더라고요.”
- (동탄신도시 입주민 김○○) “이제 관리비 조회도 가능하나봐요. 점점 발전하는 LH친구 보기 좋습니다.”

주요 언론보도






오픈 이후 시범사업 지역 입주인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지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주인간 소통, 중고물품 나눔, 돌봄 등 이웃 간 공동체가 점차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내친구가 LH임대단지에 정착될 경우 스마트폰으로 단지 내 여러 편의기능을 손쉽게 이용하는 생활혁신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입주인과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고 거주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개인화·고립화·고령화 등 여러 단지 내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주거서비스 주체를 단지에서 지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확대하는 선순환 주거복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내친구가 100만호 임대주택, 300만 입주민이 누리는 플랫폼으로 확대되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국민이 누리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스마트 홈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서비스 콘텐츠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플랫폼 발전방안

 <p>편의성 및 활용도 증대 IoT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LH 지자체 다양한 주거서비스 연계</p>	 <p>다양한 LH Friends 와의 협업 강화 다양한 경제주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p>	 <p>지속가능한 포인트 제도 정립 다양한 서비스 자원 발굴 포인트 활용범위 확대</p>
--	--	--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6

주민 주도형 “폐광지역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강원랜드

주민 주도형 “폐광지역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배경

- 카지노 인근지역 유해시설 난립, 도시 황폐화 등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해진 폐광지역 작은 마을들의 생활환경 및 주거시설 등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 필요
- 폐광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도록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분위기 조성
-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방식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 투자하여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정책 추진 필요

추진내용

-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기반 구축’**
 - 폐광 이후 주민공동체 상실, 열악한 정주환경, 강원랜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16년부터 폐광지역 정체성 회복,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과 추진기반 구축'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 **강원랜드, 국내 유일 ‘민·관·산’ 협력 시스템 구축**
 - 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주)강원랜드, 정선군, 지역재단인 (재)3.3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과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함
-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해봄 학교, 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주민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폐특법이 종료되는 '25년 이후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실천과제 등 실행 아이디어 도출하고자 '2025 타운미팅,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성과

- **지역 주민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지역주민 도시재생 활동가 회의를 통해 마을 개선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주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주민 아이디어를 구현함
 -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사복읍 650 특화거리 조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실행
- **지역주민의 자발적 변화노력에 대한 전문가 연계 및 재정 지원**
 -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민·관·산 협력의 전담지원조직 운영,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주민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
 - 주민주도의 변화노력에 대한 전문가 연계와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공모델 발굴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구분	정선군 고한읍	정선군 사복읍
사업 내용	고한 18번가 마을호텔	마주보는 70리
지원 내용	주민협의체 구성, 선진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연계, 집수리 사업 주민 커뮤니티 공간 해봄파크 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해봄 학교 교육, 선진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연계지원, 650 거리 골목길 개선사업
주요 성과	2018 균형발전박람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상 수상 2018도시재생한마당 최우수상(국토부장관상) 수상 국토부 도시재생 소규모 뉴딜사업 선정 • 총사업비 2억원(국비+지방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공모유형 : 우리동네 살리기 • 총사업비 : 93억원 • (국비 46억, 지방비 47억) • 사업기간 3년간('19~'21)

향후계획

- **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연계 추진**
 - 주민협의체가 추진한 사업 중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원
 - 주민 성장 지원 사업은 폐광지역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강원랜드 희망재단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

● 폐광 속에 피어난 꿈, 그 새로운 여정

- 고한읍, 사북읍을 아시나요?

고한읍, 사북읍은 강원도 정선군의 작은 마을이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한읍과 사북읍은 정선군 최대 산탄지였다. 정선군은 전국 석탄생산량의 20~30% 이상을 차지하는 탄광지역으로 전국의 석탄종사자들이 군으로 유입되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석탄생산량은 하락하게 되었으며 정선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후 고한읍과 사북읍의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쇠락해 가던 지역경제는 1995년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을 시도하였다. 이에 (주)강원랜드가 설립되면서 폐광지역은 관광산업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원랜드와 맞닿아 있는 고한읍과 사북읍 인근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으며, 길도 넓어지는 등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상권 쇠퇴 및 인구 감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등 도시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 국내 유일의 도시재생 민·관·산 협력 시스템 구축

- 강원랜드,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 역할 충실

지역주민들은 누구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도시재생을 위한 관(官) 주도 사업은 특성상 개발 위주, 실적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지역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실행이 필요했다. 또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성장기반의 재구축, 지역기반 사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시재생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2016년 강원랜드는 좋은 마을 만들기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인식 개선 활동, 역량 강화 교육 등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계기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이후 강원랜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주도하고 사업방향 설

정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4월 정선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또한 사업추진력 강화를 위해 민·관·산이 함께 협업하는 국내 유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 민(民) :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민(民)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센터는 주민교육 및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였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도시재생 해봄학교, 재생활동가 양성교육, 해봄 주민공모사업, 2025타운미팅,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과 성과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업 및 성과

사업명	내용	성과
도시재생 해봄학교	주민주도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공감	총 117명 교육수료
재생활동가 양성교육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총 59명 양성
해봄 주민공모사업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발굴 및 개선	총 41개 팀(446명)
2025타운미팅	지역 의제 설정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	지역주민 179명 참여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주민제안 아이디어 시범사업 추진	9건 진행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중심에는 지역주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도시재생 해봄 학교, 지역주민 활동가 교육



• 관(官) : 정선군, 운영비 지원과 인력파견

정선군은 도시재생을 위해 매년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에 전담 인력 1명을 파견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채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2건의 뉴딜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 산(産) : 강원랜드, 사업기획, 사업비지원, 인력파견

강원랜드는 2016년 '좋은 마을 만들기' 포럼을 계기로 2017년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2018년 기준 공동체활성화지원을 위해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38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경제활성화지원을 위한 지역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57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무국에 1명의 전담인력을 파견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고한읍, 사복을 변화가 시작되다.

- 고한 18번가 마을 호텔 사업

얼마 전까지 강원랜드 인접 마을인 고한읍 18번가는 찾는 사람이 많이 없고, 빈 집으로 인해 골목길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마을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지역주민 활동가 8명과 외부전문가 2명은 서울 연남동, 성수동, 경리단길 등 전국의 유명한 동네와 골목을 찾아다니며 도시재생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 나갔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고한18번가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한 후, 먼저 마을 상가와 주택을 연결하는 곳의 거리를 정화하였으며, 빈집을 수리하는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나갔다.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니었기에 예산이 없었지만 주민들이 앞장서 마을에 꽃을 심고 골목을 청소하는 등 작은 변화부터 이루어갔다. 이후 정선군에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시재생 공모 사업과 연계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호텔 18번가 시범사업으로서 '마을호텔 1호점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초기 사업으로 고한읍 출신 사진작가 전시회를 동네 주민 사무실에서 열었다. 또한 마을 슈퍼마켓이었다가 빈집으로 방치된 곳을 '들꽃사진관'으로 새 단장하였다. 2018년에는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아, 마을의 유휴공간이었던 건물을 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이자 방문객들의 휴식처로 리모델링한 '해봄파크'가 문을 열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서서히 빈집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골목의 표정은 달라졌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재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고한읍 18번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 회색 골목에서 무지개 마을로 변해가는 고한읍 18번가



이후 주민들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함께 마을의 자원으로 경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마을 호텔 사업을 추진하였다. 높이 서 있는 호텔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낮게 펼쳐져 있는 건물들을 호텔로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은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호텔이 되자”라는 18번가의 기적, ‘고한 18번가 마을 호텔’사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이 사업은 ‘2018균형발전박람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도시재생 한마당’에서는 최우수상인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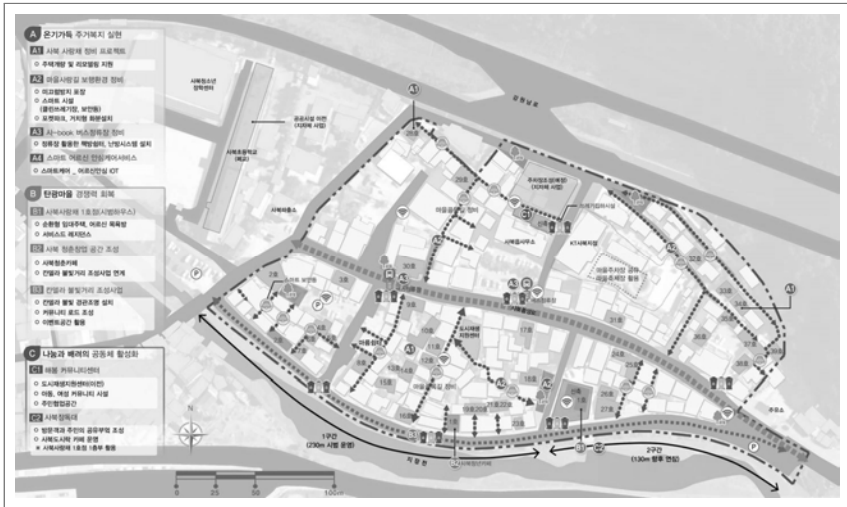
■ 2018년 도시재생 한마당 최우수상(국토부장관상) 수상



• 사북 해봄마을 뉴딜사업(마주보는 70리)

‘마주보는 70리’에서 70리란 사북 7리와 사북 10리의 마주보는 골목길을 뜻한다. 사북읍에서는 ‘마주보는 70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뉴딜사업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으로서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과 녹색쉼터 조성들을 계획하였으며, 사업의 방향은 마주보는 70리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 사북 해봄마을’로 설정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에 최종 선정,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았다.

사북 해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우리동네살리기유형)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선군은 2021년까지 준비를 포함해 총 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북 7리 및 10리 일원에 사북사랑채프로젝트, 마을사랑길 보행환경정비, 해봄 마루들 공원조성, 사-book 버스정류장 정비, 스마트 어르신 안심케어서비스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북사랑채 사업, 650청년창업 공간조성, 칸델라 불빛거리 조성을 통한 경쟁력 회복, 그리고 해봄커뮤니티센터 조성, 밥상공동체로서 사북장독대 사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로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함께 꾸꾸는 상생공동체 ‘사북 해봄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북읍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지, 주민 안전, 공용시설 정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미관정비 및 특화공간 조성 등으로 지역이미지를 회복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 작은 마을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는 성과에 대한 조급함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는데 달려 있다. 폐광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제는 바로 이러한 조급함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역주민들의 하나 된 열정과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결과 고향음과 사복음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며, 조급함, 냉소, 불안을 떨쳐내는 계기가 되었다.

강원랜드의 도시재생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고향음과 사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도시재생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역시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고향음, 사복음을 아시나요?”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을’ 또는 ‘또 한 번 가고 싶은 마을’이라고 답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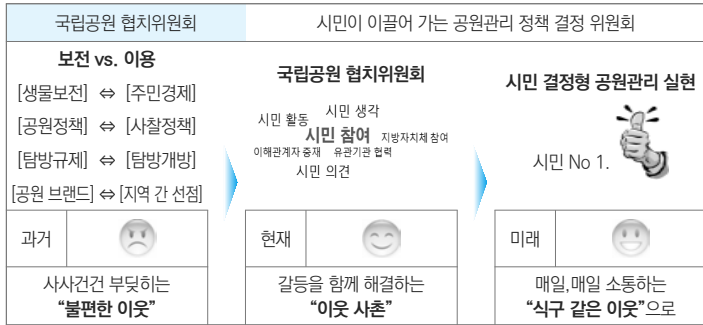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관리로 사회적 갈등 해결

국립공원공단

시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관리로 사회적 갈등 해결

추진배경

- 국립공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보전'과 '이용'의 충돌 상존
- 규제에 따른 공원관리 갈등을 시민 참여 '협치위원회'로 해결
 - 협력(協力)을 넘어선 협치(協治)로 시민 결정형 공원관리 정책 추진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위원회로 국립공원 주요 갈등 해결

추진내용

- 시민참여 국립공원 협치위원회 구성
 - 중앙(공통 갈등) 1개, 지역(지역별 갈등) 29개 협치위원회 구성
 - 중앙협치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본사 연2회)
 - 지역협치위원회: 시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391명 등 740명으로 구성(지역별 연 2회)
 - 공원관리 관련 중립적 시각을 가진 시민이 50%이상 참여

구분	계	시민·NGO	유관 기관	학계	언론	종교계	국립 공원
인원	740명	391명	225	46명	15명	33명	30명
비율	100%	53%	31%	6%	2%	4%	4%

추진성과

- 시민 제안 안건 83%를 국립공원 관리에 반영(603건 중 506건)
- 협치위원회 운영으로 국립공원 주요 갈등 해결

갈등	논의	성과
• 탐방로 통제 vs 탐방로 개방	• 대설시 탐방로 개방 여부	• 대설시 탐방로 이용 기준 마련 및 시범 운영 - 저지대 탐방로, 사찰, 안전이 확보된 설경 명소 96개소 개방
•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vs 주민 재산권 제약	• 반달가슴곰과 주민의 상생	• 반달가슴곰 특산품 브랜드 개발·활용 - 달고미 캐릭터 개발, 캐릭터 활용 포장재 4종, 2.2만개, 홍보물 5종 5.7만개 지원
• 전남 구례 화엄사 양비둘기 서식지 보전 vs 사찰 훼손	• 배설물 처리와 목조문화재 보호	• 양비둘기 시민조사단 운영 - 22명 양성(전문 교육 60시간 운영) - 양비둘기 배설물 처리 자원봉사 및 모니터링
• 소백산 정상 표지석 경복 vs 총복	• 갈등 요인 제거	• 지역명칭 삭제 및 단일 정상 표지석 이용 - 소백산 정상에 지역명칭 없는 단일 표지석 설치

향후계획

- 공원별 주요 갈등과 숙원사업을 중장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 지속적인 논의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증진 및 타협점 도출로 갈등 해결
 - 협치위원회를 활용한 지역 역량 결집으로 지역사회 숙원사업 해결
- 안건 논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사무소 평가 지표로 활용)로 시민위원회안 의견의 공원관리 반영률 확대

● 국립공원은 불편한 이웃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그간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생물종 복원사업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이용규제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서식지 보호와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등 보전과 이용의 상충에 따른 갈등이 항상 존재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에게 국립공원은 불편한 이웃이 되었다.

▶ 보전과 이용의 충돌에 따라 불편한 이웃으로 여겨진 국립공원공단



● 시민과 협력(協力)을 넘어 협치(協治)로

- 시민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국립공원 협치위원회 운영

갈등해결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를 중재하는 한편 국립공원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후원자들을 찾게 되었으며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그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던 ‘시민’이었다.

공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모델이자 시도로 ‘시민과의 협력을 넘어 협치’라는 목표 아래 국립공원 협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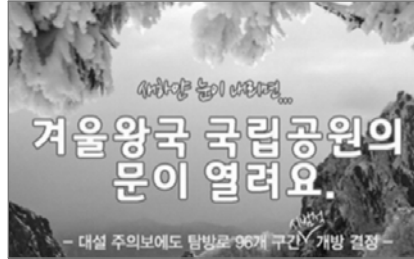
국립공원 협치위원회는 전체 국립공원의 공통갈등을 논의하는 중앙협치위원회 1개와 지역별 갈등을 다루는 지역협치위원회 29개로 구분하여 시민위원장 30명을 포함한 위원

740명으로 구성하였고 시민이 50%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시민의 공원관리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 안전이 보장된 설경 감상 기회 확대

겨울철이면 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벌어지는 실랑이가 있다. 눈 내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싶어 하는 탐방객과 대설특보가 발효되어 탐방로를 통제해야 하는 국립공원 직원들과의 갈등이다. 중앙합치위원회에서는 해법을 찾기 위해 이 문제를 안전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설경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 아름다움을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단의 의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방 장소와 안전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96개소를 개방하여 탐방객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 국립공원 설경과 탐방객 / 대설주의보 시 탐방로 개방 알림



- 반달가슴곰 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기여

지리산에는 2004년부터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으로 반달가슴곰 61마리가 살고 있다. 그동안 반달가슴곰들은 지리산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였지만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는 서식공간으로 인해 문제도 발생했다. 반달가슴곰 중 일부 개체가 주민들이 설치한 양봉통의 꿀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양봉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반달가슴곰 복원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복원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공단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갈등 해결을 위해 협치위원회 시민들은 수차례 논의를 통해 “반달가슴곰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 특산품에 활용해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민 소득을 향상 시키면 어떨까?”, “반달가슴곰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생활피해를 상쇄시켜 반달가

습곰의 상생을 이루자”라는 묘안을 찾아냈다. 이에 주민들과 공단은 반달가슴곰을 활용한 대표 브랜드 ‘달고미’를 만들고 꿀 포장재 등을 주민에게 지원하였다. 또 반달가슴곰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에 맞춤형 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개최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이 반달가슴곰 서식에 치명적 위협인 불법엽구 수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협치위원회에서 시민이 낸 아이디어로 추진한 반달가슴곰 브랜드 사업은 반달가슴곰을 지역의 애향단지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로 탈바꿈 시켜 주었다.

■ 반달가슴곰 달고미 브랜드와 특산품 포장재



• 사찰에 배설물을 싸는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멸종위기복원사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지리산 이야기가 있다.

지리산에는 양비둘기라는 새가 살고 있다. 전남 고흥 거금도를 제외하면 전남 구례화엄사 일원이 유일한 서식지인 멸종위기종 2급의 귀중한 동물이다. 그런데 이 양비둘기의 배설물이 화엄사 목조 사찰 문화재를 오염시키면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관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특히나 양비둘기는 우리가 흔히 도심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와 생김새가 비슷해 멸종위기종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었던 사찰 입장에서는 귀중한 목재 문화재에 배설물을 싸는 양비둘기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양비둘기는 멸종위기종의 안전한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공단과 문화재를 보호해야 하는 화엄사 간 갈등 요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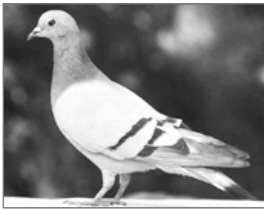
갈등 해결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지역협치위원회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양비둘기 서식지 보전을 지역협치위원회 논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시민들과 토론을 시작하였다. 시민들의 대답은 간단했다.

“우리가 할게요.”

양비둘기 배설물을 시민들이 치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후 지역협치위원회 시민들은 22명으로 구성된 시민보호단을 발족시켰고 배설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또 생김새로 오해를 받는 양비둘기의 명예 회복을 위해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있는 시민은 양비둘기 수채화를 그려 홍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치위원회와 시민들의 노력은 화엄사가 양비둘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양비둘기는 사찰과 시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 화엄사 양비둘기와 시민보호단 활동



• 소백산을 둘러싼 지역갈등 협치위원회로 해결

비로봉은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에 있는 소백산 정상 봉우리다. 1993년 영주시가 비로봉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하면서 양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시작되었고 2012년 마침내 사단이 발생했다.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충북 단양군이 반발하여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여 오다 2016년 대법원에 가서야 소백산면 명칭 개칭을 취소하면서 논쟁이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 되나 싶었던 지역갈등은 2017년 소백산 정상 비로봉 표지석에 새겨진 경북 영주시 지역명칭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러한 소백산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지역협치위원회 논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시민들은 소백산을 둘러싼 뿌리 깊은 갈등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비로봉 정상 표지석 단일 설치를 통해 지역 간 화합을 주문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 25년 간 지역갈등 요인이었던 소백산 비로봉 정상 표지석은 '경상북도 영주시'라고 새겨진 지역명을 삭제하고 단양군 표지석을 철거하여 정상에 단일 표지석을 존치하기로 협의하고 논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 소백산 비로봉 정상표지석의 지역명 삭제 전·후



• 지역별 우선 해결 필요 갈등 중점관리

2018년 30개 국립공원 협치위원회에서는 603건의 안건을 논의 하였고, 이 중 83%가 국립공원관리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민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갈등해결을 경험한 국립공원공단은 사무소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우선 해결이 필요한 중점관리 갈등요인 29개를 선정하였고 이를 협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의뢰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협치위원회를 지역쟁점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 시키고, 시민 제안안건의 공원관리 반영률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결정형 공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8

시민참여형 지역 생태자산 발굴

국립생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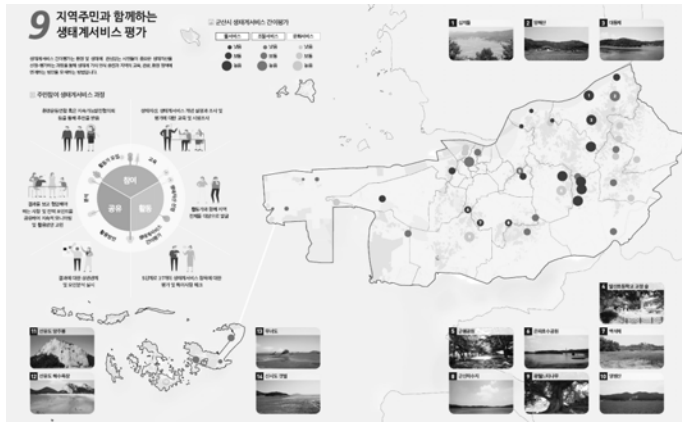
시민참여형 지역 생태자산 발굴

추진배경

- 지역별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생태자산*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것은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에 중요한 부분
- 시민들은 지역 생태자산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높은 주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는 생태자산 파악하고 그 공간에서 체감하는 생태계서비스를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
-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증진효과를 가져오며, 지역계획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
 - * 생태자산: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지칭하며, 생물 또는 비생물적 구성요소들과 기타 환경적 성분들로 구성되어 함께 기능하는 공간영역 또는 속성을 의미
 - ** 생태계서비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등 자연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지칭

추진내용

- 국립생태원은 전국 10대 지자체(강릉, 군산, 남양주, 부천, 밀양, 속초, 수원, 시흥, 안산, 창녕)을 대상으로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생태자산을 선정하고 생태계서비스 간이기능평가를 수행
 - 각 지자체별로 50여개의 생태자산을 발굴하였으며, 생태자산 간이기능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통계, 상관관계, 요인분석 실시
- 생태계서비스의 공간적 특성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 도시계획 및 환경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4개 지자체 분석 결과, 주요 생태계서비스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주로 도심지에서는 문화서비스, 산과 연안지역은 지서비스, 조절서비스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을 확인
- 지역 활동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태자산 평가 결과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 생태자산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어 생태계서비스 인식증진의 기초자료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나 선정된 생태자산에 대한 용도를 분류하여 문화, 역사,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의 생태자원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



시민참여형 생태자산 발굴 결과(군산)

추진성과

- 전국 10개 지자체에 대한 생태자산 500여개 발굴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 전국 10개 지자체 60여명의 시민과 환경단체 대상 생태계서비스 교육
- 전국 10개 지자체 평가결과의 생태관광 정책자료 활용 및 환경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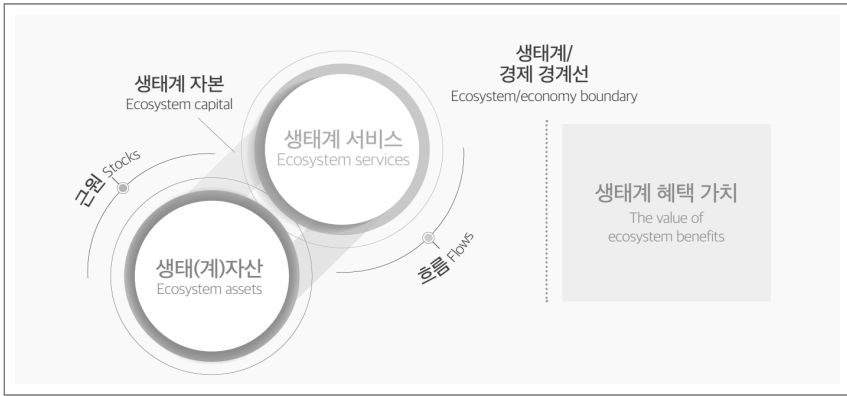
향후계획

- 웹 및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된 생태자산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더욱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대표 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계획

● 생태자산이란

생태자산이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생물 또는 비생물적 구성요소들과 기타 환경적 성분들로 구성되어 함께 기능한 공간영역 또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태자산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생태자산의 개념(Dickson et al., 2014)



시민들은 생태자산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높은 주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생태자산을 파악하고 그 공간에서 체감하는 생태계서비스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생태자산에 대한 목록을 파악하고 DB화한 자료는 과학적 모형 기반의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시민참여 생태자산 발굴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시민들의 생태지식(지역 고유 생태자산의 의미와 유래, 활용방안)을 이끌어내어 지역의 특수성이 담긴 생태현황과 정보를 수집가능하게 하며, 환경 물리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과학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생태자산을 찾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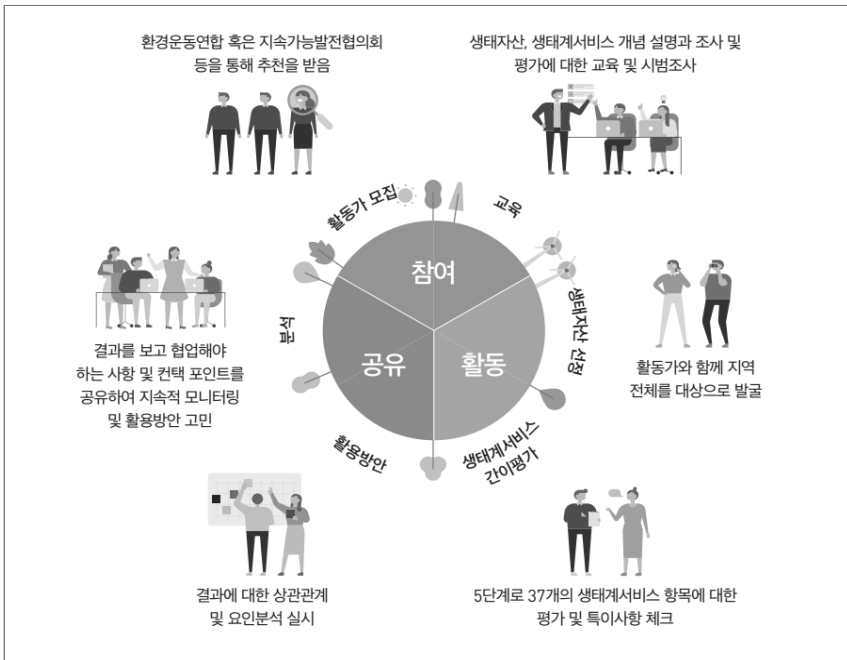
또한 시민참여 생태자산 평가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인식증진 효과를 가져오며, 지역 환경계획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시민들은 생태자산 발굴과 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워크숍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선정하고 평가한 주요 생태자산에 대한 공간적 분포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태계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참여 생태자산 평가과정

지역의 생태자산 연구는 시민들과 함께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목록화하여 그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생태자산을 발굴하고 평가할 지역활동가들은 지자체 시민단체 중 환경 분과가 있는 단체에(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문의하여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선정되었다. 각 지역별로 6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추가된 과정으로 지역의 생태자산 목록을 대략적으로 선정하여 37개의 생태계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평가실습을 진행하였다. 평가는 지역별로 50여 곳을 2인 1조로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 생태자산 발굴 및 평가 과정에 대한 개념도(출처: 국립생태원, 2018)



● 시민참여 생태자산 평가결과: 남양주 사례

군산의 생태자산 주요요인은 스크리 도표를 통해 급격하게 고유값이 낮아진 부분까지 경계를 나눠 추출하였다. 군산의 경우 3개의 요인을 선정하여 시흥의 생태자산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군산의 첫 번째 요인은 (+) 생태계서비스로 3개의 조절서비스 2개의 공급, 지지서비스, 1개의 문화서비스가 도출되었다. 특히 공급서비스의 '담수'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다른 서비스에서도 물에 관련한 서비스가 높게 평가되었다. (-) 생태계서비스로 조절서비스의 '세계적 기후', '소음차단', '폭풍 재해'가 도출되었다. 군산의 첫 번째 요인은 다양한 서비스가 도출되었고 요인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공통적으로 물 생태계와 관련이 있어 물 생태계로 명명하였다. 군산에 물 생태계가 높은 생태자산은 대동제, 남초산, 증초산, 냉정제 등이다.

■ 군산 요인 1 특징: 물 생태계

순위	(+ 생태계서비스			(-) 생태계서비스		
	분류	서비스	요인점수	분류	서비스	요인점수
1	공급	담수	2.128	조절	세계적 기후	-1.764
2	조절	물 순환	1.871	조절	소음차단	-1.565
3	지지	서식처 제공	1.566	조절	폭풍 재해	-1.046
4	조절	화재	1.521			
5	공급	식량	1.329			
6	문화	여가 및 관광	1.301			
7	조절	홍수 재해	1.134			
8	지지	물 순환	1.052			

■ 군산 요인1 생태자산 목록

대상지	구성요소		
	1	2	3
대동제	0.897	0.286	0.046
남초산제	0.897	0.286	0.046
중초산저수지	0.825	0.244	0.021
냉정제	0.815	0.302	-0.107
철봉제	0.812	0.334	0.072
십자들	0.799	0.25	0.215
우곡저수지	0.797	0.243	0.195
공주산	0.711	-0.187	0.194
군산저수지	0.691	0.358	0.357
옥녀지	0.666	0.602	-0.018
월명공원호수	0.658	0.53	0.371
은파호수공원	0.639	0.288	0.58
이영춘정원	0.631	0.001	0.504
백석제	0.616	0.4	0.474
금강하구언	0.56	0.068	0.306
금강습지공원	0.55	0.042	0.337
수심마을계곡숲	0.497	0.474	0.271

군산의 두 번째 요인은 (+) 생태계서비스로 4개의 조절서비스, 3개의 지지서비스가 도출되었다. (-) 생태계서비스는 문화서비스의 ‘문화유산’, ‘영감을 주는 가치’, ‘정신적 종교적 가치’가 도출되었다. 군산의 두 번째 요인은 (+) 생태계서비스에서 요인점수가 높은 조절서비스로 명명하였다. 군산에 조절서비스가 높은 생태자산은 ‘망해산’, ‘동국사’, ‘옥구지’, ‘신시도 갯벌’ 등이다.

■ 군산 요인 2 특징: 조절서비스

순위	(+) 생태계서비스			(-) 생태계서비스		
	분류	서비스	요인점수	분류	서비스	요인점수
1	조절	소음차단	2.056	문화	문화유산	-1.703
2	지지	토양형성	1.649	문화	영감을 주는 가치	-1.396
3	조절	세계적 기후	1.532	문화	정신적 종교적 가치	-1.004
4	조절	수질정화	1.519			
5	조절	침식	1.466			
6	지지	영양 순환	1.380			
7	지지	물 순환	1.183			
8	지지	1차생산	1.143			

■ 군산 요인2 생태자산 목록

대상지	구성요소		
	1	2	3
망해산	0.202	0.808	0.051
월명산 동국사	-0.08	0.773	0.175
옥구지	0.578	0.713	0.023
신시도 갯벌	0.074	0.709	0.351
옥도면 대각산 신치해수욕장	0.13	0.697	0.232
망동제	0.629	0.693	-0.062
금굴제	0.564	0.692	0.142
대위지	0.564	0.692	0.142
북초산저수지	0.603	0.692	0.18
원우저수지	0.463	0.674	-0.121
축산지	0.527	0.657	0.127
옥도면 야미도	0.563	0.632	0.139
군봉공원	0.229	0.617	0.266
내항 도선장	0.229	0.61	0.467
오식도동 오식도	0.29	0.59	0.491
옥도면 신시배수갑문	0.162	0.516	0.188
영병산	0.299	0.493	0.289
비응도동 비응도	0.072	0.485	0.397

군산의 세 번째 요인은 (+) 생태계서비스로 6개의 문화서비스가 도출되었다. (-) 생태계 서비스는 공급서비스의 '담수', '식량'이 도출되었다. 군산의 세 번째 요인은 (+) 생태계서비스에서 요인점수가 높은 문화서비스로 명명하였다. 군산에 문화서비스가 높은 생태자산은 '발산초등학교 교정 숲', '광월느티나무', '임피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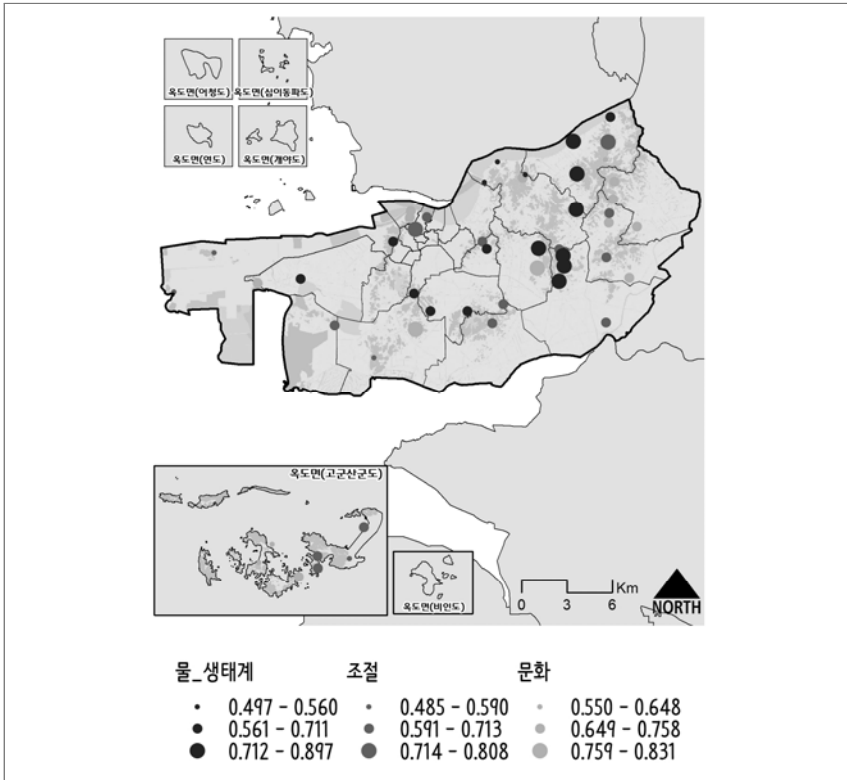
■ 군산 요인 3 특징: 문화서비스

순위	(+) 생태계서비스			(-) 생태계서비스		
	분류	서비스	요인점수	분류	서비스	요인점수
1	문화	문화유산	2.574	공급	담수	-1.225
2	문화	여가 및 관광	2.341	공급	식량	-1.039
3	문화	교육, 연구	2.316			
4	문화	심미적 가치	1.547			
5	문화	영감을 주는 가치	1.267			
6	문화	사회적관계	1.000			

■ 군산 요인3 생태자산 목록

대상지	구성요소		
	1	2	3
발산초등학교 교정 숲	0.008	-0.106	0.831
광월느티나무	0.12	-0.038	0.788
임피역	0.056	0.214	0.758
노거수	0.084	-0.282	0.74
월명공원수시탑	0.153	0.316	0.737
임피향교	0.052	0.141	0.737
해망동 해망굴	0.028	0.349	0.717
상주사	0.285	0.159	0.712
무녀도	0.236	0.194	0.708
임피중 교정숲	0.313	0.303	0.705
내초도동 내초도	-0.014	0.367	0.701
오성산 남사면	0.398	0.27	0.675
선유도 망주봉	-0.002	0.21	0.648
서지제 불주사	0.127	0.147	0.638
선유도 해수욕장	0.294	0.348	0.55

■ 군산의 주요 생태계서비스별 생태자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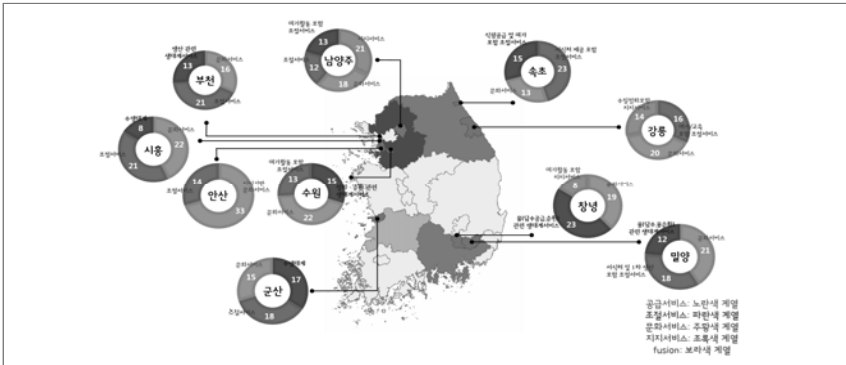


군산 생태자산의 경우, 저수지를 중심으로 물관련 기능이, 도심지를 중심으로 문화서비스 기능이 강하게 나타났다. 조절서비스 기능들은 그 외의 산과 호수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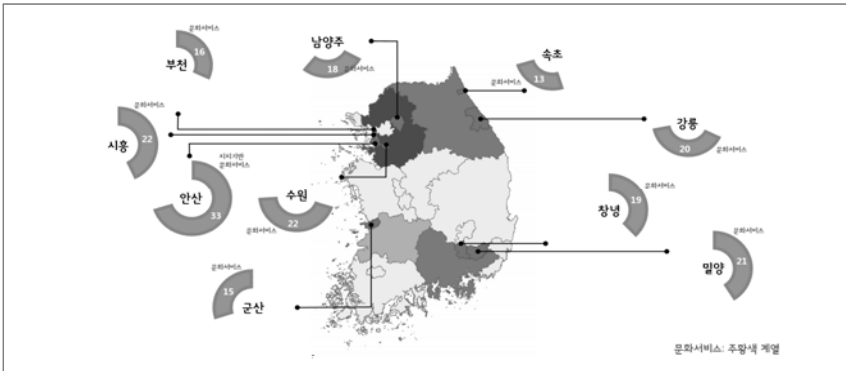
● 전국 시민참여 생태자산 평가 정리

도출된 전체 요인에 대한 생태자산 분포를 보면 유형에 따른 공통점과 생태계서비스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0지역 모두 문화서비스가 독립적인 요인으로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조절서비스 항목들도 상당수 도출되었다. 이는 지역 시민들이 문화서비스와 조절서비스 지표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명확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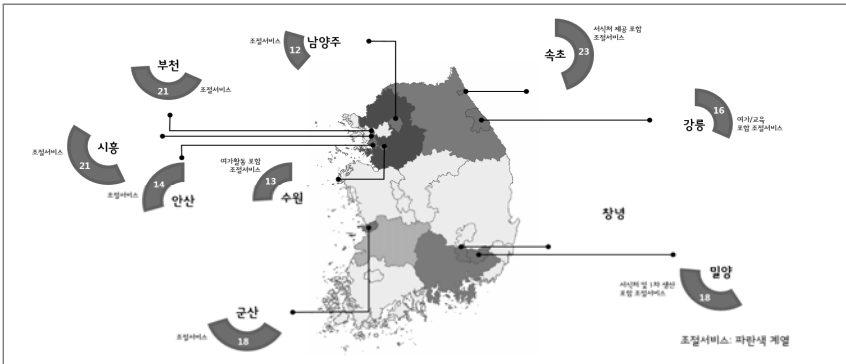
10개 지자체 생태자산 구성



10개 지자체 생태자산의 문화서비스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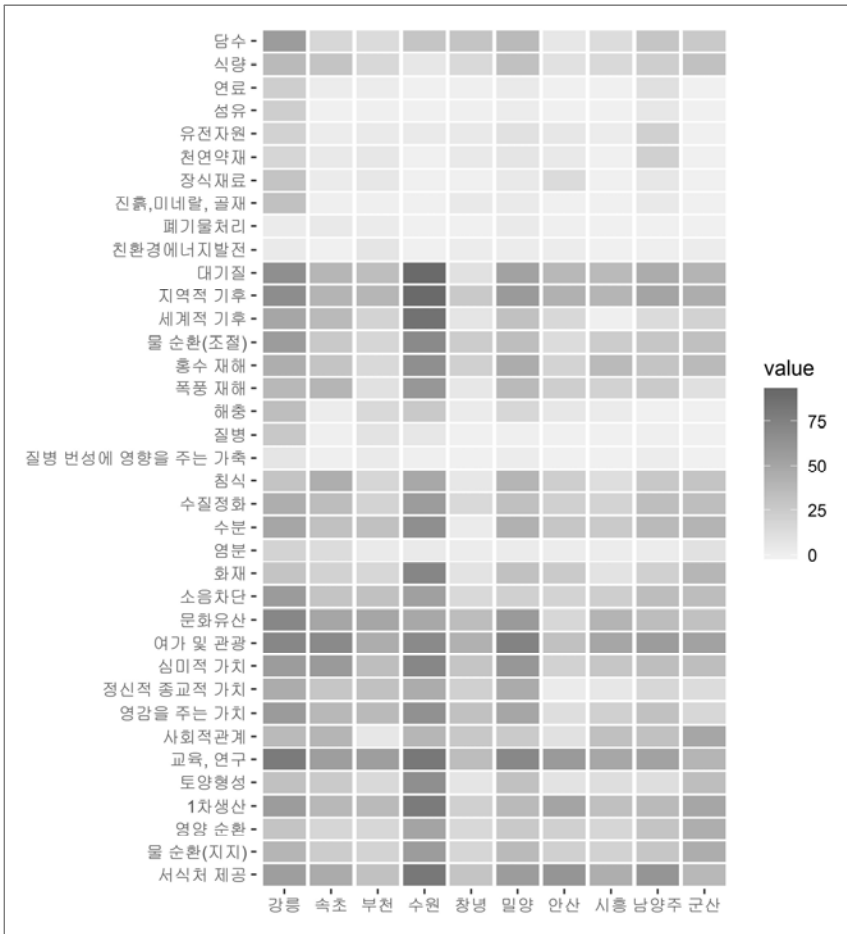


10개 지자체 생태자산의 조절서비스 분포



또한 지역별 생태계서비스 평가항목을 모두 비교해본 결과를 확인해 볼 때도 상대적으로 조절서비스(대기질, 지역적 기후, 세계적 기후, 물순환 등)와 문화서비스(문화유산, 여가 및 관광, 심미적 가치 등)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생태자산에 대한 간이기능평가는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를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heat map)



● 시민참여자들의 반응

실제로 시민참여 생태자산 평가결과는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지역활동가들은 지역의 생태자산에 배우는 기회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시민참여 생태자산 평가결과는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지역활동가들은 지역의 생태자산에 배우는 기회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지역의 생태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길 바랐었으며, 이 결과를 지자체 운영에도 사용하길 바라는 요청도 있었다. 또한 사후설문과정에서도 시민참여 생태자산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관심과 이해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선호, 반영의지, 만족도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민참여 생태자산 평가가 가져오는 생태교육적 측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a) 생태자산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 교육



■ (b) 지역활동가에 대한 이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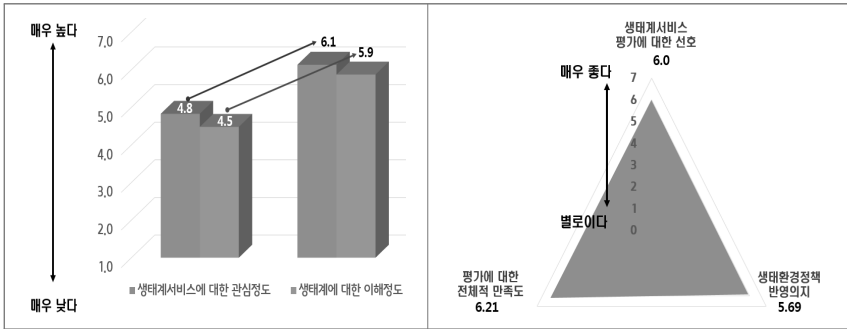
|(c) 지역활동가에 대한 현장교육(공동평가)



|(d) 평가 결과에 대한 워크숍



|(c) 시민참여 생태자산 평가 참여자에 대한 설문결과



전문가들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생태환경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과 함께, 생태교육 및 관광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강릉시는 비전 2030과 연계하여 [녹색푸른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제안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군산시 공무원은 생태관광을 위한 네트워크 자료로 활용하고 생태교육 및 관광 안내 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생태자산 조사는 단순히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에 대한 생태교육적 측면과 지역환경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경분야 시민참여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이 늘어나며 GPS기반 사진을 이용한 조사들도 수행되고 있다. 또한 Youtube 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시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자산 교육과 평가기능이 담긴 스마트폰 어플 등의 제작도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 자료와 참여도구 개발한다면 시민들이 손쉽게 생태자산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배우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19

건강보험, 시민과 함께 설계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시민과 함께 설계하다

추진배경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 시 국민, 의료계,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 보장성 확대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운영에 실질적 국민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기전을 마련
 - 과거 여론조사의 단순 선호 취합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적 참여방식의 정책제안·결정 플랫폼 운영

추진내용

- 국민참여위원회 제도 도입
 - 해외사례*, 관련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국민참여위원회 제도를 설계
 - * 영국 NICE 시민위원회, 캐나다 온타리오주 시민위원회 등
-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 공개모집으로 성·연령·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90명을 선발(임기 2년)
 - 민간·공공보험 종사자, 의료전문가, 병원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이해관계자 배제 후 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층화무작위추출을 통해 최종후보 선발
-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 매 회의 시 위원 인력풀(90명)에서 30명을 선정 후, 전문가의 정보제공 및 숙의·자유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 보장성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기준, 확대 필요분야, 보장범위 등에 대해 제안
 - (진행방식) 사전 설문조사 → 전문가 정보제공 → 중간 설문조사 → 전체토론 → 사후 설문조사
 - 설문조사 3회(사전, 중간, 사후) 실시로 논의 주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파악
 - (의제선정)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고,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보장성 정책을 의제로 선정해 적극적 참여동기를 부여

- (환류) 추진현황, 정책 결정 반영정도 등을 국민과 공유하여 '내가 직접 설계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인식을 각자에게 부여
- 국민참여위원회 정례회의 개최(3회)
 - 병·의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 관리방안(5.13)
 - (참여대상) 국민위원, 정보제공자(전문가, 정부)
 - (주요내용) 중증병원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 의원은 불필요 의견이 다수 → 병원급 2·3인실만 건강보험 적용 결론
 -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논의(7.22)
 - (참여대상) 국민위원, 정보제공자(정부)
 - (주요내용) 고가 중증질환 의약품 보장성 확대방안 논의
 - 한방(침약)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 논의(11.18)
 - (참여대상) 국민위원, 정보제공자(전문가)
 - (주요내용) 치료목적의 탕약(침약) 건강보험 적용방안 논의

추진성과

-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의사결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 참여형 의사결정으로 정책결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의 속의 결과를 수렴하여, 추가 재원조달이 필요한 보장성 정책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국민의견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영하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
 - 병·의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논의결과를 보장성강화 정책에 반영
 - (국민 의료비 부담 50% ↓) '19년 7월부터 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환자 부담 770억 감소 예상
 - 의료비 부담 대폭 감소에 따른 국민 만족도 향상(상급병실 적용 만족도 85.7%)
- 의료접근성 강화 기반을 마련
 - '고가 항암제 및 한방 침약' 건강보험 적용 논의 후 정부 건의
 - 향후 악제 보험정책 수립 및 침약 급여화 연구용역·검토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향후계획

-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병행 운영으로 국민위원과 상시 소통, 정보 공유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수요조사 실시로 논의주제 확대 발굴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로 보다 나은 건강보험 보장을 실현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보장성 강화는 공단의 숙원과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매우 높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학적 비급여의 지속적 증가로 꾸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를 유지, OECD 평균 8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다.

- 전체 비급여 규모 : 13조 5천 억 원('17년 기준)
 - 간병비 2조, 의과 비급여 7.3조, 치과·한방·약제 등 비급여 4.2조
-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 36.8%로 OECD 평균(20.3%) 대비 1.8배('15년 기준), 멕시코(41.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

국민이 병원비로 걱정하지 않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위해 2017년 8월 9일,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신포괄수가제 확대,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 등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토대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였고, 지속가능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 해소 및 이에 따른 의료계의 수익·손실 규모, 공단 부담금 등 데이터를 활용한 재정예측·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 설정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제도화·수혜 대상 확대 등 개인의 의료비부담 상한액을 적절히 관리하고 긴급한 의료비 위기상황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였다.

-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먼저 공급자인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확대 추진과정에서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였고,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먼저 의약단체 등 공급자와의 간담회 정례 운영을 통해 적정수가 및 적정보상을 위한 상호 소통 및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안정적 보험재정 유지를 위해 정부·국회와의 국고지원금 확보방안 논의, 불법의료기관 적발·단속공조로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으로 미래의 환경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에 기반한 보편타당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며 정책 수혜대상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

무엇보다도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며, 보장성 정책의 직접 수혜대상자인 국민은 획기적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공단은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대국민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더 나은 건강보험 실현의지를 대내외 적극 표명하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와 추가재원 지불용의에 대해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에 대한 직접제안·의사결정 플랫폼 구축을 최우선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과거 여론조사 등 단순 선호 취합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법원의 국민참여 재판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운영사례 등과 같이 다양한 집단·계층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의 정책제안·의사결정 플랫폼을 운영하여, 보험료 부담 주체인 일반국민이 심사숙고한 의견을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한 보장성 정책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국민의 실질 참여 보장

- 새로운 시도, 국민참여위원회 제도 도입

먼저 공단에서는 영국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시민위원회(Citizen Council) 등 해외 선진국의 시민참여 우수 사례와 관련 연구물을 적극 검토·벤치마킹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도입하였다.

▣ 해외 주요국의 시민참여 사례

국가	국민참여 방식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년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에서 시민위원회(30명 구성) 설립 •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전문가 대중으로만 구성된 최초 위원회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4월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시민위원회(25명 구성) 설립 • 주정부의 의약품 정책에 국민의 참여 보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년 오레곤주 의료서비스위원회에서 추진 • 우선순위 결정에 대중이 참여한 첫 사례이나 다수의 전문가와 소수의 대중으로 구성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년 우선순위 선정위원회 설립 • '07년부터 보건의료 전문가, Health trust, 환자 대표가 모두 참여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년 국가보건의료위원회에서 추진 • 지역사회 모임, 워크숍,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 파악

-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공단은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성·연령·지역 대표성에 기반한 일반국민 90명을 선발하고자 하였다. 국민위원 선정을 위해 주요 아침 생방송(KBS, SBS 등)에 모집안내 자막을 송출하였고, 언론사(중*, 동* 등) 등에도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특히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직접 제작한 홍보 콘텐츠를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매체로 적극 배포·공유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 국공립 대학교 방문설명회 실시 및 게시판을 활용한 포스터 홍보 및 전국에 분포된 현장 혁신조직(지역본부 및 지사 230여개소)에 기반한 방문고객 일대일 맞춤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한국 척수장애인단체, 한국호흡기장애인 단체, 희귀난치질환 장애인 단체 등을 직접 방문 홍보하였다.

맞춤형 홍보를 통해 총 2,095명이 국민위원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민간·공공보

험,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나머지 1,003명을 층화표본추출방식에 의거하여 무작위 추출을 하였으며, 직업·교육수준·장애여부·만성질환여부 비율에 대한 적합성 검증 실시 후 20대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3~40대 주부, 회사원, 미용사, 건설업계 종사자, 60대 이상 은퇴자, 경비 등 다양한 집단·계층의 국민위원 9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구성된 90명의 국민위원 중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참석인원 30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논의의 객관성과 국민위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단 직원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 발굴을 위해 공단에서는 내·외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안건 중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고,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보장성 정책을 의제로 선정하여 적극적 참여동기를 부여하였다.

〈회의 진행방식〉

- 사전 설문조사 → 전문가 정보제공 → 중간 설문조사 → 조별 분임토의 및 전체토론 → 최종 설문조사
- 설문조사 3회 실시로 논의 주제에 대한 국민위원의 입장 변화를 파악

선정된 30명의 국민위원을 대상으로 논의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정보제공 이후 국민위원 중 사회자를 선출하여 숙의·자유토론을 통해 보장성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기준, 확대 필요분야, 보장범위 등에 대한 국민위원의 최종 의견을 피력하게 된다.

토론 초반에는 어색함이 있기도 하지만 선출된 사회자가 국민위원 각자의 의견을 물어 보면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등 열린 토론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종종 예상보다 회의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또한 국민위원들간 토론시 공단 직원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위원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한다.

또한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도출된 최종의견의 정책결정 반영정도 및 추진현황 등을 국민위원과 상시 공유하여 ‘참여위원이 직접 설계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인식을 각자에게 부여함으로 ‘참여→만족→자발적 재참여’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였다.

• 국민참여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2018년 한해 동안 총 세 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급여확대 분야 중 국민부담이 크고 보장성 확대에 이견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병·의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하였고, 병원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 의원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및 의약품 허가초과제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3차 회의에서는 한방(침약)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하여 국민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회의를 통해 도출된 국민위원의 의견은 향후 보장성 정책 결정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위 논의주제 중 ‘병·의원 상급병실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후 병·의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게 되었다.

병·의원은 대형병원에 비해 입원 환자가 적고 병상 수가 여유 있으니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의 방지 및 병원별·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병원도 건강보험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장시간 토론 후 국민위원의 최종 숙의결과를 도출하였다.

▣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회의모습



● 국민의 속의결과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반영

- 상급병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병·의원 상급병실 보험 적용 논의 결과

- 병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찬성 82.2%, 반대 14.3%, 기타 3.5%
- 의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반대 67.9%, 찬성 28.6%, 기타 3.5%

국민의 최종속의 후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고, 의원은 보험적용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2019년 7월부터 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환자에 의료비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쟁점사항이 많았던 사안이었으나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속의결과를 수용하여 추가 재원조달이 필요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상급병실 급여화 이외 고가항암제 및 한방 치료의 급여화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하였으며, 도출된 국민의견은 향후 약제 보장성 정책 수립 및 협약 급여화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하였고, 향후 급여화 방안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2018년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잘한 일로 선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장 워크숍 혁신 우수사례 발표 및 공공기관 시민참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발전기반 마련

설문, 여론 등 단순선호도 조사로는 국민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토론으로 심사숙고한 국민의 의견도출이 가능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등 다소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확대 요구가 빈번하였으나, 충분한 속의를 통해 보장성 확대 필요성과 추가 필요재원, 부작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의견(예: 아동 입원치료의 보장성 확대하되, 최소한의 본인부담 필요)의 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여 국민의 주인의식을 제고

회의에 참여한 국민위원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반영된다는 상당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앞으로도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면 또 다시 국민위원으로 활동하길 바라는 위원이 대다수로 적극적참여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 앞으로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앞으로도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결정 시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집단·계층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건강보험 현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장성 정책 실행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위원 교육훈련 등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 및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 활성화로 국민위원과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논의주제를 확대 발굴하는 등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20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로
국민복지체감도 UPUP!

사회보장정보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로 국민복지체감도 UPUP!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시장의 양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정(12년)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품질평가 실시
 -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여 대국민 만족도 제고
- 품질평가의 실제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시민이 정작 품질평가의 과정에서 소외
 - 투명하고 공정한 품질평가를 위해 시민참여로 평가과정 공개 필요
 -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도록 평가과정에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내용

- (시민을 위한) 열린 품질 평가 기반마련
 - 품질평가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품질평가위원회」 시민위원 위촉
 -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를 현장평가 시민위원으로 선발
 - 평가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운영
-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지표 개발
 - 사회적 가치 실천지표 개발
 - * 취약계층 재직률, 시민의 안전, 인권 등
 - 품질평가 최초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열린 평가지표 공청회」 개최
 - 시민과 함께하는 지표 설명회 추진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품질평가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평가로 시민감시 강화와 투명한 평가운영
 - 폐쇄적이었던 품질관리 현장 공개로 품질관리 신뢰도 제고
 - 품질관리 현장참여 후 시민의 우수제안 반영
- (시민의 눈높이로) 품질평가 결과 공개
 -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평가결과 공개 채널 확대(복지로 등)
 - 용어설명, 아이콘 시각화 등 이용자 친화적인 평가결과 정보 제공

추진성과

- 평가자 중심의 평가운영체계를 탈피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품질평가 운영체계 마련
-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용자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 ① (신설지표) 취업취약계층 재직률
- ② (강화지표) 시민의 안전과 인권, 서비스에 대한 알권리, 합리적 고충(의견)처리, 제공인력 안전근로

- 이용자 참여 및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여 시민의견 차년도 평가계획 반영

〈시민제안 8대 과제〉

- ① 시민의 평가 참여를 위한 '19년 시니어 현장평가단 정식 운영
 - ② 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지표 반영
 - ③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계량지표 도입
 - ④ 서비스 중요지표의 관리를 위한 정성평가 도입
 - ⑤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서비스별 모니터링 설문지 개발
 - ⑥ 품질관리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기관 인센티브제 강화
 - ⑦ 미흡기관의 품질관리를 강제화하는 품질평가 패널티 도입 추진
 - ⑧ 평가결과와 이용자 맞춤형 활용을 위한 공유기능 개발
- 제공자 중심의 평가결과 공표에서 벗어나 시민의 선택권을 지원하는 시민 맞춤형 평가결과 공개

향후계획

-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19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추진('19. 1~)
- '19년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국민참여단 확대 운영('19. 4~)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와 시민참여가 만났을 때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서비스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아동·청소년·정서발달과 심리지원, 돌봄여행, 정신건강 토탈케어,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다.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제공 되어온지 10년이 되었고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었다.

사회서비스 시장의 양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은 커져갔고 품질평가는 서비스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었다. 1기~2기(2012~2015년, 2016~2018년)를 거쳐 현재까지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 및 품질향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초기 사회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품질관리 인식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품질평가체계에서 품질평가의 실제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이용자인 시민이 품질평가의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자성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흡수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이 만나, 평가자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시민 참여를 위한 열린 품질평가체계로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해당사자 중심의 지표개발에 시민의 의견을 담고, 폐쇄적이었던 현장평가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품질평가'라는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의 새로운 2막이 열린 것이다.

●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시민이 직접, 시민의 눈높이로!

- '시민을 위한' 열린 품질평가 기반을 마련하다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품질평가를 시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품질평가 운영을 위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품질평가위원회는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사업담당 과장, 학계, 현장중심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민위원을 신규로 구성하였고 심의·의결 기능에서 쟁점사항 및 발전방안 논의, 자문까지 역할을 확대하여 의사결정기구의 대표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제공기관과 만나 실제 품질평가를 수행하는 핵심인력인 현장평가위원에 시민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및 시민평가단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보기 위해 시니어(시민) 평가단을 시범운영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자격기준을 준수하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련 기관 퇴직자 기준을 개설하였다. 시범운영의 결과검증을 위해 추진된 평가 모니터링에서 4.5점(5점 척도)으로 우수수준의 점수를 획득하였고 2019년도에는 정식 도입을 통해 총 30명의 시니어(시민)위원이 활동하게 되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품질평가의 핵심 주축이 될 시민참여단의 구성도 필요하였다. 사회서비스의 수혜경험이 있는 이용자와 미래의 사회복지인력이 될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였으며, 서비스 고객 11명, 대학생 19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시민참여단은 평가운영에서 사후관리까지 품질관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다. 참여 후에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용자 입장에서의 의견 제안을 하였으며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함께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발표회를 실시하였다.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시민참여단 발대식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시민참여단 참여소감 인터뷰

 <p>조명현(시민)</p>	<p>“평가에 직접 참여해보면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고 제공기관이 품질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으로써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품질에 대한 신뢰가 생겨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p>
 <p>최수현(대학생)</p>	<p>“평가위원과 제공기관이 함께하는 품질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생으로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귀한 체험이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p>

-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위한 평가지표를 만들다!

품질평가의 근간이 되는 지표는 품질기준으로 활용되며 사회서비스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때문에 지표는 정책방향과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유기적으로 변화해왔다. 최근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인권, 안전, 일자리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용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가 마련되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

구분	지표	내용
일자리 창출 지원	C5.3. 취업취약계층 재직률	취업 취약계층 채용 등 정부 일자리 사업(직접 일자리 사업) 기여도에 대해 가점 부여
이용자 권리 보장	C1.2 서비스 정보 게시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민의 안전	A1.3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이용자와 제공인력 의 인권	B2.2 제공인력 고충처리	제공인력 불만과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C3.1 이용자 불만처리	이용자의 불만과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품질평가 지표를 확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데 시민과 함께하는 품질평가를 위해 2018년도에는 품질평가 운영 최초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열린 평가지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대전, 부산권역에서 총 384명이 참여하였으며, 지표안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현장과 이용자의 의견들은 지표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위해 또한 번 검토를 거치게 된다. 실증적 검증을 위한 모의평가, 자문회의, 품질평가위원회 라는 지표개발의 단계를 거쳐 확정된 지표는 평가 대상기관에게 최종 공표가 되는데 이것이 제공기관 품질평가 설명회이다. 시민참여로 인해 지표의 품질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제공기관과 그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수혜 받게 되는 이용자가 지표를 이해하고자 함께 하게 되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다듬어진 지표 설명을 들으며 시민 참여의 결실을 직접 체감하기도 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품질평가 그 첫발을 내딛다!

현장평가가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이것은 시민참여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평가라는 민감한 현장의 특성상 폐쇄적으로 추진되어오던 품질평가가 공개되면서 투명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평가의 신뢰도 및 국민 관심도도 높아졌다. 예상했던 대로 시민참여를 도입하는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시민참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현장평가단의 거부감이 있었고 시민높이에 맞는 소통이 필요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품질관리 현장에 참여하기 전 제공기관과 현장평가위원에게 시민참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리고 사전 동의로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정보원 담당자가 모든 체험에 직접 참여하여 적극 지원하였으며, 참여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현장교육과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현장평가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데 이 제공기관 컨설팅에도 시민이 함께 하였다. 제공기관 컨설팅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평가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류체계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내가 받는 사회서비스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구나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미흡기관과 함께 품질평가 A등급을 받는 우수기관 방문도 추진하였다.

이렇게 실제 현장평가, 사후관리의 현장에 참여 후 시민들은 생생한 시민의견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우수제안들은 시민제안 8대 과제로 선정되어 차기 평가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 시민제안 8대 과제와 차년도 평가반영 계획



- ‘시민의 눈높이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결과가 공개되다.

이용자가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기 위해 품질평가 결과 공개는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개선 유도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품질관리의 요소 중에 하나이다. 품질평가 결과 공개는 공개채널의 확대와 결과 정보의 상세화에 초점을 두어 개선되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품질평가 결과가 공개되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공개여부를 알고 있다 해도 그 결과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보원은 복지포털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8대 사회복지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고민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포털의 지도검색을 통해 우리동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용이해졌고 바우처 포털에서는 전국 등급별 맞춤형 검색이 가능해 우수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평가결과 페이지는 제공자 중심의 결과공시에서 벗어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이용자 친화적인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되었다. 어려운 평가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세부분야별 평가정보까지 제공하며 등급별 파악이 용이하도록 아이콘으로 시각화하였다.

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된 품질평가 결과화면



품질평가 전과정에 국민참여, 국민의 뜻 정책이 되다

시민과 함께하는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품질평가 정책반영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통해 복지서비스 품질과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과제였다. 품질평가의 실제 수혜자가 되어야 할 시민이 정작 품질평가의 과정에서 소외되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품질평가체계를 과감히

개편하였다. 투명·개방적 신뢰에 기반한 시민과의 관계 구축으로 품질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품질평가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참여 이전에는 이해당사자 중심의 단편적 의견수렴으로 시민참여 및 소통의 채널이 부재하였고 제공자 중심의 평가결과 공개로 이용자의 선택권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품질평가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며 시민참여 체계 구축으로 실제 수혜자인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안전,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평가지표도 개발되었다. 이용자 입장에서 시민에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평가결과가 제공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품질평가는 2019년도에는 정식사업으로 더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참여기회를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참여단 구성을 조기에 시행하고 기존의 품질평가에서 시설평가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표개발에서 현장평가까지 능동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할 것이다.

시민참여로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목적지는 국민행복이다. 시민의 뜻이 반영되고, 시민의 참여로 더욱 믿을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참된 품질평가가 시민참여로 실현된 것이다. 정보원은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 받을 맞추어 갈 것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21

시민, KOICA 민관협력사업 현장으로의 동행

한국국제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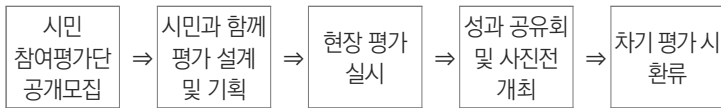
시민, KOICA 민관협력사업 현장으로의 동행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시민참여과제 제출, KOICA 과제로 선정
 -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 특성 상 우리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한계 극복
- 기획부터 평가까지 민간 파트너와 함께하는 민관협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시민 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사업 품질 제고 기대
 -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개도국 사업 현장을 방문,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세금의 효과적 집행 여부 점검 및 KOICA 민관협력사업의 책무성·투명성 제고 기대
-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를 위한 참여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
 - KOICA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국민 소통 확대 및 참여형 평가 프로세스 구축

추진내용

-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전 과정에 시민 참여제도 도입



- KOICA 민관협력사업 종료평가 추진 단계별 시민 참여
 - **(평가단 구성)**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이 높은 시민 중, 종료평가 참여단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참여단 5명, 외부 전문가 3명, KOICA 담당자 3명, 국제개발 협력센터(KIDC)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총 12명) 구성
 - **(사전교육 실시)** 개발협력사업과 평가에 대한 시민 참여단의 이해도 제고 및 평가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평가 실시 전 개발협력 전반 및 평가 방법론, 유사사업 성과 등에 대한 사전교육 8회 실시
 - **(평가계획 수립)** 평가단은 평가 대상사업(필리핀 2개 사업)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 프레임워크 등 평가 전반에 대한 계획을 공동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 **(현장 조사)** 평가단은 '18. 10. 6.~10. 14. 9일간 필리핀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수립된 평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현장실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

- (결과 보고) 평가단은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는 책자 및 사진전의 형태로 공개하여 시민 참여단에 국한되었던 공개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

추진성과

- 국민 참여형 원조사업 모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사업기획과 수행부터 평가까지 시민 및 시민사회가 참여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원조사업 모델로 발돋움
- 우리 국민의 시선과 눈높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책자와 사진전을 통한 대국민 결과 공유를 통해 △ 개발협력 및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개도국 현장에서 KOICA와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 평가 투명성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시민과의 소통 확대에 기여
- 대국민 결과 공유를 위해 개발협력사진 전문 예비사회적기업 '공감아이'와 협업으로 진행한 사진전은 약 5,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많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개발협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제고에 기여

향후계획

- 하반기 중 시민 참여단 2기 모집 및 평가 실시
 - 개도국 현장에서 진행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및 관심이 학생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바,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및 참여 시민의 대표성 확보,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관련 시민사회에도 참여 기회 확대 예정
-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대상사업을 민관협력사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별협력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 검토
 - 국별협력사업의 경우 수원국 정부와의 조율 등 현지 사전협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임에 따라 점진적 확대 운영 필요

● KOICA 민관협력사업, 국민에게 더 가까이

KOICA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KOICA 민관협력사업은 시민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민간주체(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학계, 사회적경제 조직 등)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개발협력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내 다양한 민간주체들과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사업이 갖는 해외원조사업 특성 상 일반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한계가 존재하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그간 전문가들의 영역에서만 간주되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실제 시민들은 세금이 사용되는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KOICA는 개발협력사업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개도국에서 실시한 민관협력사업을 우리 시민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시민과 함께 사업을 평가하는 시민참여평가단을 기획하였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개도국 사업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민에게 생생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사업의 성과와 세금의 효과적 집행여부를 평가함으로써,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감은 물론, 우리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해외 원조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시민참여평가단을 추진하게 되었다.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KOICA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실시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정기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와 종료평가를 실시해왔다. 평가결과는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에 공개하고, 도출된 교훈과 시사점은 유사사업에 환류되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실제 평가와 교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지만, NGO에 후원하는 일반시민이나 개발협력사업에 관심 있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실시되었는지 증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종료평가 시민참여 프로세스 도입

KOICA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종료평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적 평가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 특히, 시민참여평가단은 대국민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사업을 처음 접하는 일반시민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기획함으로써, 평가단 구성의 다양성·객관성을 확보하였다. 1기 시민참여평가단은 20대 대학생부터 40대 대안학교 교사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군으로 구성되어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시민참여평가단 임명식



-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

대국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평가단은 평가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전스터디를 통한 평가표 도출까지 평가기획 및 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선발된 시민참여평가단은 실제 종료평가 대상 사업목록 중 시민참여평가단이 현장 실사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별 보고서와 성과증빙자료, 관련 문헌자료 검토 등을 바탕으로 약 두 달여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를 준비했다. 현지조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스터디 기간에는 일반시민들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전문 강의들도 함께 제공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시민참여평가단은 평가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함께 설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평가는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시각이 평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었다.

■ 사전스터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평가단 모습



● 시민참여평가단과 현지 주민들과의 조우

시민참여평가단은 평가단으로 선발된 시민과 국제개발협력 평가 전문가, KOICA 담당자 그리고 향후 사진전 개최를 위해 개도국 주민들의 존엄성 사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문 사진작가로 구성되었다. 평가단은 약 2개월의 사전교육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인 필리핀 ‘타끌로반 바시아오’ 마을과 ‘산호세 델몬테 타워빌’ 마을로 향했다.

평가는 시민참여평가단이 약 두 달여의 시간을 통해 공동 도출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평가단은 사업지를 방문하여 수행기관인 우리 NGO ‘굿피플 인터내셔널’과 ‘캠프아시아’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현지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사업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장 조사는 개발된 평가 프레임워크에 맞춰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및 관리자는 물론, 현지 주민, 정부 관계자 등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또 현장 조사를 위해 평가단이 요청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준 NGO측 덕분에 현장에서의 인터뷰와 실사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평가사항은 OECD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성과가 있었는지, 그러한 성과는 남녀노소 차별 없이 고르게 분배되었는지, 또 사업을 통해 일어난 성과가 사업이 종료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인터뷰, 관련 보고서 및 자료 검토 등의 방법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단은 사업 현장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사업의 물리적,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 현지 주민들과 조우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을 위해 펼쳐가는 그들의 삶의 의지, 열정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마주하였다.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개인의 삶을 바꿔나가 보려는 의지, 바뀔 수 있다는 희망,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개도국에 대한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인간존엄성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 주민과의 인터뷰 모습



■ 인터뷰 후 캠프 사회적기업 '익팅'에 종사하시는 어머니들과 시민참여평가단



● 평가를 넘어 사람이 사람을 보다

- 필리핀 주민의 삶과 의지를 통한 우리의 발견

KOICA는 시민참여평가단을 통해 시민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개도국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소개하고 개도국 주민의 인권,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의 과정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민참여평가단과 현지 주민들과의 깊이 있는 교감의 시간이 이뤄지며, 비록 생활환경은 다를지라도 현지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공감하며, 평가단의 시선과 눈높이는 평가자, 피평가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맞춰지게 되었다. 이는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평가와 이번 시민참여평가단의 가장 큰 차이이자 의의라고 하겠다.

‘사람이 사람을 보다’는 시민참여평가단의 지향점인 동시에 성과공유의 형태로 진행된 사진전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고통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하위계층으로 인식되어 온 개도국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전환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평가단의 평가는 사업 활동의 성과를 살펴봄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삶의 형태를 존중하는 자세로 밀착하면서 인간 생명의 가치, 존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평가를 준비, 수행하였다.

태풍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타끌로반 바시아오마을 주민과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강제적으로 이주된 산호세 델몬테 타워빌마을의 주민은 평가단에게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다. 평가단은 우리 민관협력사업이 이들에게 집과 일터를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의지, 희망, 존엄을 키워나갔음을 볼 수 있었다. 현지 직원, 한국인 직원 할 것 없이 우리 NGO는 지역 정부 및 주민들과 깊은 신뢰를 쌓고 있었으며, 현지 주민들의 우리 NGO와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성과는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충분히 보여줄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평가단은 사업이 시작되고 종료되기 까지 한국과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주민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을 기획하고, 한국과 현지에서 각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현장에서, 또 주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남을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요소, 모든 관계자의 역할이 다 주요하겠으나 특히, 현장에서 실제 활동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역량과 사업에 대한 이해, 주민을 대하는 태도, 적극적인 자세 등은 사업성과의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개 평가 대상사업은 NGO 차원의 지원과 본부 직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상이했으나, 현지 담당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열정, 자립을 강조하는 태도 등이 유사했다. 이는 주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단은 평가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사업

현지 주민과 교감의 시간을 이루면서 얻은 소중한 결과보고서를 보다 많은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또한 현장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KOICA는 인간존엄성에 기반을 두어 활동하는 ‘공감아이’와 함께 사진전을 기획하였다. 사진작가 두 분이 평가단의 전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촬영한 사진을 2019년 3월 16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한 달여간 국민에게 공개하였으며 약 5,000명의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시민참여평가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해본다.

▣ 사진전 포스터(좌), 결과보고서 표지(우)



●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시민참여평가단은 '굿피플 인터내셔널'과 '캠프아시아' 2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현지 주민들과 깊이 있는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평가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사업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일반 시민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평가자로 서기 위해 수차례의 사전교육이 불가피하고, 현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빽빽하게 진행되는 평가 일정에 일부 평가단원은 부담과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 또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역할을 전문가와 동등한 평가자로 두기보다 참여, 참관의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은 학습의 효과가 크고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므로 실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사업 현장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성과를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하는 과정은 평가를 넘어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평가단 구성 및 참여자별 역할을 고려하여 역할과 업무 비중을 조정하고자 한다.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연령별, 주체별(시민, 시민사회 등) 선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이는 올해 모집될 평가단 2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맺음말로 등 보고서를 끝맺고자 한다.

“시민참여평가단은 필리핀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평가단이 만나고 온 것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사업이고 자신들이 변화의 주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시민참여평가단은 8월의 첫 만남부터 필리핀,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 의미와 역할을 끊임없이 물어왔다. 누구도 시킨 적 없고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 하나 하나 덧붙여 함께 만들어간 시간이었다. 지금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타워빌의 재봉틀, 타클로반 사람들이 열심히 가꾸고 있을 마당의 화분들, 그런 작은 것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한없이 마음이 따뜻해진다.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좋은 변화'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마다 가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과 관점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좋은 합의점을 찾고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평가단의 일원으로 5개월간의 시간을 현장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필리핀에서의 귀중한 배움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참여평가단의 활동이 현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되돌아보기도 해야 할 것 같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평가자로 현장 방문을 한다는 사실은 현지 활동가들에게도 또 다른 낯설음과 부담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 모두 진심으로 환대해주고, 적극적으로 평가에 협조해 준 것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22

2018마을미술프로젝트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마을미술프로젝트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추진배경

- 한국 전쟁 초기에 대전이 20여 일간 임시 수도가 되자 수많은 피난민이 피난을 왔고, 인구 10만 명이던 도시가 갑자기 100만 명으로 불어나며 지금의 대전역이 위치한 소재동 일원에 열악한 주거지 형성
- 대전역 인근 창조길, 역전길 마을주민들은 '60~'70년대 대전의 명동으로 불리던 영광의 시절을 추억하고 있으나, 현재 이 지역은 집창촌의 역사를 지닌 마을로 대전 시도 주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무엇 하나 변화가 쉽지 않은 마을
- 낙후된 이 지역의 마을에 관 주도의 변화와 개발보다는 예술을 통해 생기를 넣고, 주민간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의 연대, 예술을 통한 상처 치유, 회복을 도모함



〈마을미술프로젝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추진내용

- 대전역 인근 구도심의 낙후된 마을을 300명의 마을주민과 9명의 예술가가 함께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장기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 중
- 젊은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청년유입 및 소득원 변화 등 사회적 변화를 통한 지역민의 희망을 활짝 꽃 피우는 사업



〈대전역 인근의 낙후지역에 예술가와 주민이 이룬 변화〉

추진성과

- 문화중심 도시재생(Cultur-led Urban Regeneration)으로 주민의 삶에 활로를 제공
- 성매매촌 지역이 대전의 문화명소로 변신

향후계획

- 주민과 함께 정한 주제를 충분한 주민참여 기회 및 시간 확보를 위하여 3개년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 해 가는 중('17~'19)
- 1차년도 : 지역주민 커뮤니티 개설 및 워크숍 운영, 지역연구 중심 추진
- 2차년도 : 주민참여 작품 제작 및 설치
- 3차년도 :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컨설팅 및 문화해설사 교육

● 젊은 작가들과 주민들의 힘으로 활짝 피운 마을문화

대전역 인근 골목은 주민들의 반대로 어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CTV도 하나 찾아 볼 수 없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골목이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사)대전공공미술연구원 소속 작가들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 골목길에 공방을 꾸미고 공공미술장식품들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로 골목길 경관이 바뀌었고 차츰 외지인의 발길이 늘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 여기까지가 아니다. 작가들은 골목길에 상주하면서 집수리, 동네 단장, 공예품 제작 및 판매, 집안의 대소사까지 챙기는 등 주민들의 일부로 녹아들어가 이웃사촌이 되었다. 그 결과 골목길에 CCTV가 설치되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예술가들의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주민들의 자존감 회복

- 성매매촌 지역이 대전의 문화명소로 변신

대전역광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역전 길은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으로 소규모 여인숙과 낡은 건물이 마치 영화의 세트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 대전 시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도 방문하기 기피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빈집을 얻어 공방으로 꾸미고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음습하고 폐쇄적인 이 지역일대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전역 인근의 창조길보다 역전 길이 예술가들이 활동하기에 훨씬 제한적이었지만 예술가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친절한 태도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열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인해 폭력성과 배타성이 강했던 주민들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었다. 초기에 예술가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았던 냉대와 무관심은 이제는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바뀌었고 이 지역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곳을 방문해 문화재생의 성공사례로 소개가 되기도 하며 부각되는 대전의 문화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공공미술 마을미술 프로젝트 2년차 사업을 맞아 마을 미술 프로젝트의 전체 구성원들이 합심해 이룬 성과이자 지역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노력해준 결과이다.

- 작가성장의 동력이 된 마을미술프로젝트

2017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대전공공미술원과 개별작가 8명, 보조작가 9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활동은 공방과 작업실, 책방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주민들과 감성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작가들의 개성과 창의성, 열정의 온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매주뜨기’와 워크숍, 회의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비전과 방향성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가운데 각자의 예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과 작품 활동 대한 물리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했다. 그 결과 2018년 2년차 사업에는 작가들의 인지도와 입지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개인전을 통한 작품판매와 각종 특강 및 연계사업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작가들 중에는 전업 작가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을 가지고 있던 작가들도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에 눈을 뜨면서 예술가로서의 열정과 영감을 확실하게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제 작가들이 한 단계 성장해 역전길 공방을 통해 상업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주민과의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주민들이 작가들과의 작업을 통해 오랫동안 받아왔던 심리적 상처와 냉소, 사회적 차별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던 만큼 작가들도 주민들과의 작업을 통해 전문예술가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나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 ‘공공미술’과 ‘마을미술프로젝트’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대개 1967년경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졌다고 보고 있다. 공공미술은 도시의 공적인 장소에서 미술품을 제작하거나 전시, 설치하는 것으로 장소와 환경이 중요시 된다. 근래 들어 공공미술은 장소와 환경의 개념을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소통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이란 말은 1990년대에 언급되다가 2000년대 중반 무렵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기존 미술관 중심의 미술품이나 미술행위에서 벗어나 공공장소나 거리 등에 미술품을 그리거나 설치

하여 대중들과 공감하는 미술, 체험하는 미술, 도시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미술로 펼쳐졌다. 그 여파에 힘입어 이제는 전국 각 지역의 공공장소에서도 다양한 공공 미술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예를 보면 지역의 예술문화 거리, 건축물, 공원,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시골 마을에서도 공공 미술품이나 공공미술 행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공미술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미술관에서 외부로 옮겨놓는 것에서 벗어나 주변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면서 이루어진다. 특히 장소나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공공미술의 발전은 도시환경 뿐 아니라 지역의 마을환경에서도 미술과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공미술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동미술사업으로 2004년 계획과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본격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에서 초반부터 논의된 주요 논점은 “마을미술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작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예술작품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실행을 통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이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작의 장이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체험의 장은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미술문화 측면에서 보면 공공미술의 확대된 방법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생성되었고 그동안 펼쳐진 사업의 성과는 도시재생이나 환경개선을 하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역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마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커뮤니티의 일원인 주민이 함께하는 예술현장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주민들에게서 볼 수 있다. 창조길과 역전길 등 대전에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이자 냉대와 차별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거주해온 주민들이 이제는 조금씩 웃음과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는다. 어쩔 수 없는 가난과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성매매라는 생존방

법을 찾았었던 주민들, 사회의 낙오자로 인식되어 온갖 차별과 냉대 속에서 부유하듯 살아 온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찾아온 작가는 물론 시민, 외부 방문객들과 인사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감성의 숨결을 공유하면서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자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마을을 문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마을을 이뤄왔던 주민들의 삶을 예술을 통해 보듬는 것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창조길과 역전길, 대전에서 가장 깊은 아픔과 슬픔이 녹아 흐르는 지역이자, 대전에서 가장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이 희망의 등불을 발견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주민들의 뿌리 깊은 절망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예술이 벌어지는 이 현장은 단순히 마을미술프로젝트라는 사업현장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흐르는 예술치유의 현장이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주민들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비루한 욕망이 흐르는 지역이 이제는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대전의 관문이자 출발점인 이 지역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3년차 프로젝트가 추진 될 예정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따뜻한 소통으로 더욱 생기있는 문화마을의 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23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안전보건 MOOC*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 대규모 사용자 대상의 온라인 공개수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안전보건 MOOC*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 대규모 사용자 대상의 온라인 공개수업

추진배경

- 잇단 대형재해* 발생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증대되는 반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가 전무하여 국민의 요구에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 및 안전보건 가치 확산에 역부족
 - '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민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하는 등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수요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절차가 없어 실효성 있는 교육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우리 사회의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보건 개방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추진내용

- 국민제안 안전보건 MOOC 공모 실시
 - 안전보건 이러닝 콘텐츠 주제를 국민대상 제안 공모를 통해 접수함으로써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 파악
 - 다양한 접수 의견 중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제를 선정·개발하고 교육과정 제고를 위한 내부 검토 진행
 - 결과 : 165건 의견접수(타기관의 국민제안제도 평균 접수건수(136건)의 약 10% 상향)
- 국민제안 공모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국민 참여 확대
 - SNS, 전국 옥외전광판, 안전보건 월간지, 블로그 등 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대다수 국민 참여 유도
 - 유관기관 협업으로 지하철역사 광고 등을 실시하여 국민접점 확대
 - 안전보건강조주간 내 버스운영을 통한 안전보건 MOOC 적극 홍보

-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의사결정단계에서의 국민의견 수렴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제도 추진
 - 학생, 주부, 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 국민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주도적 참여 및 안전보건 MOOC 콘텐츠 개발을 위한 주제 선정·점검·환류 수행
-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국민 공감 안전·보건 이러닝 제공
 - 시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
 - 개발된 콘텐츠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환류 과정의 일환으로 내부 직원대상 콘텐츠 시연회 개최를 통한 콘텐츠 품질 강화 및 수강자 만족도 향상

추진성과

- 기존 안전보건 관련자 대상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제공방식에서 사회적(국민) 니즈를 적극 반영한 교육 제공으로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10% 확대
 - 클라우드 도입으로 이러닝 웹사이트 접속 폭주로 인한 시스템 트래픽을 해소하고 접속 환경을 개선하여 동시 사용자 대폭 확대(200명→3,200명)
- 국민의견 반영 이러닝 MOOC 콘텐츠(생활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53건 개발 및 23개 교육과정 운영
- 국민 안전의식 향상 조사 결과 응답자의 교육 만족 90.4%, 안전의식 향상 수준 88.5% 만족
- 국민 대상 안전보건 MOOC 이러닝 무상보급으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향후계획

- 국민 제안 공모 확대 운영 및 신규 콘텐츠 개발 활성화 추진
- 전 국민 대상 이러닝 콘텐츠 시연회 개최 및 의견 환류
- 교육생 수준별 체계화 된 교육과정 수립 및 제공으로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 국민 참여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및 국민이 안전한 나라 구현

●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 달라진 관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990년 1월 전부개정 이후 28년 만의 일이다. 아직도 이에 대한 찬반 양측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안전에 관한 국민과 사회의 관심 및 요구수준이 높아졌으며, 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을 선도하며 안전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공단을 찾도록 한다.”는 비전아래 다양한 안전보건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기획이 주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닝 방식의 특성상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이러닝을 개발·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국민은 어떤 안전·보건의 주제에 관심이 있고 궁금해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의 해답으로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안전보건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 공단은 국민 참여를 통한 개방형 안전보건 이러닝 제공을 위해 대국민 「안전보건 MOOC¹⁾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혁신 과제를 준비하였다.

●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며, 공감하는 안전보건 MOOC!

-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우선,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시행하였다. 국민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온라인상에는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 제안방’을 개설하고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 받았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우편, FAX 등의 방식으로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1)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규모 사용자 대상의 온라인 공개강좌로 안전보건 MOOC(무크)란 공단 이러닝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국민 대상 무료로 제공하는 안전보건 공개수업을 의미함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에게 직접 듣고 파악하기 위한 과정의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상 원활하지만은 않았다. 공모 초창기에는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고, 1분기 제안 건수는 불과 16건에 불과할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우리는 공모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5개의 SNS 채널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지하철 광고 실시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노출되는 접점을 확대하였으며, 7월 첫 주 안전보건강조주간의 코엑스 박람회 기간 동안 MOOC 홍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4분기까지 최종적으로 160건의 소중한 의견을 발굴할 수 있었다.

■ 안전보건 MOOC 홍보 내역

홈페이지 팝업 홍보	SNS	전광판	언론보도	이벤트	리플릿	월간지	지하철 광고	제안참여방 운영
	5개 채널	1백만회	7회	1회	1천부	3만부	25천 개소	

- 아이디어의 탄생부터 콘텐츠의 결실까지 국민과 함께!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한 아이디어가 국민을 위한 안전·보건 이러닝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국민의 힘이 필요했다. 가장 공감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어떤 아이디어를 교육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또한 어떠한 교육방식 및 내용구성이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는 국민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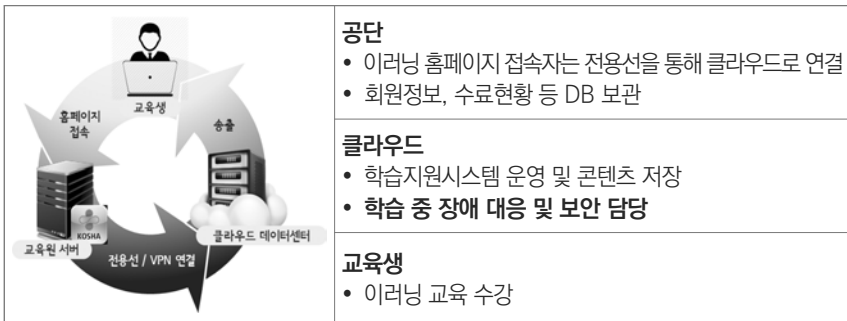
이에 구성된 'MOOC 시민참여단'은 학생, 주부와 같은 일반 국민 및 학계전문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 졌으며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시민참여단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이거나 공감되는 의견 선정 및 콘텐츠 개발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안전보건 MOOC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만들어가는 콘텐츠가 된 것이다.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불편을 감소시키다!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안전보건 MOOC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는 홈페이지 시스템 상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MOOC 운영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등의 제반시설이 부족하여 사업의 추진은 난항을 겪었고, 무엇보다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의 동시 접속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트래픽의 발생으로 서버 사용자의 불편함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였고 동시 접속자수를 200명에서 3,200명으로 16배 확대할 수 있었다. 많은 국민이 언제든지 접속하여 MOOC를 통해 안전·보건을 배우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서버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클라우드 구성 체계



국민의 참여로 이룬 것들

• 멀게만 느껴진 안전보건교육, 국민의 참여가 자연스러워지다!

안전보건 MOOC 이전까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라고 하면 으레 산업현장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만을 위해 만들어진 딱딱하고 어려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다듬고 콘텐츠로 만들기까지의 전 과정에 국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면서 안전보건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현재 또는 잠재적인 산업현장의 노동자라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MOOC에 참여한 결과였다.

새로운 안전보건교육은 국민들이 느끼던 부담과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실제로 전년 대비 10% 가량 교육인원이 확대되는 쾌거로 나타났다.

- 국민만족도 향상, 안심사회 구현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공단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안전한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안전보건 MOOC를 통해 우리는 안심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교육하게 되자 마침내 교육만족도는 90.4%, 안전의식 향상 응답은 88.5%(국민 안전의식 향상도 조사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어렵고 낯선 안전보건교육’에서 ‘공감하고 참여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변화하고 그 결과가 안심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지 알 수 있던 계기였다.

안전보건 MOOC 콘텐츠 주요내용

떨어짐 예방	부딪힘 예방	위험의 외주화	산업재해 트리우마
			
영화 · 신과함께 패러디	영화 · 설복홀즈 패러디	CF · 00콘텐상 패러디	TV · 인간극장 패러디

● 안전이 국민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 안전보건 MOOC, 아직도 모르시나요?

2018년이 안전보건 MOOC의 첫걸음을 떼는 한 해였다면 2019년은 더 많은 국민에게 안전보건 MOOC가 노출될 수 있도록 확대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제안 공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의견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시민단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콘텐츠 시연회를 확대하여 지역, 연령, 직업 등 다양한 계층의 많은 국민에게 개발된 콘텐츠의 수정의견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안전보건 MOOC가 국민 모두가 아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안전이 국민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보건 MOOC, 아직도 모르시나요?

- 기본부터 튼튼하고 체계적으로, 다시 도약하는 안전보건 MOOC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공하는 교육과정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체계적으로 확장해 가야 한다는 의견은 공단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단에서는 안전보건 이러닝 개발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대상과 수요를 분석하는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K-MOOC, 코세라(Coursera), 에덱스(EdX) 등 이미 MOOC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조사하며 배울 점을 찾아 나섰다.

우리는 수준·분야별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 체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전관리자를 주 교육대상으로 개발된 기존 콘텐츠와 교육과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MOOC의 수요자를 더욱 세분화하여 꼭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존 안전보건교육과 차별화되는 안전보건 MOOC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교육 체계의 뼈대부터 튼튼히 세워 안전·보건에 관한 알짜 정보를 알려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24

시민 참여 뉴스 제작 지원
- 뉴스 아이템 제안은 시민이,
취재·보도는 언론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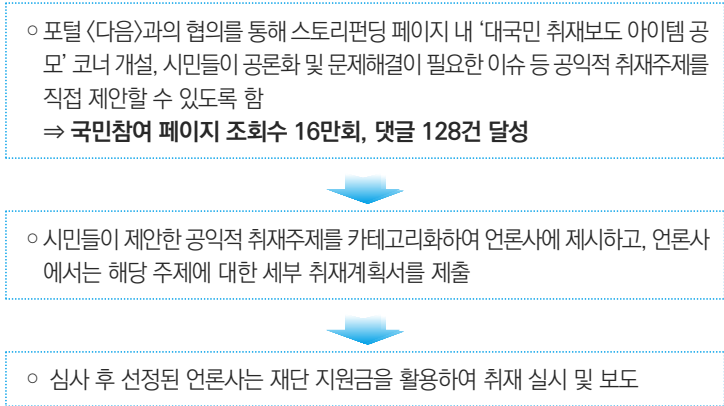
시민 참여 뉴스 제작 지원 - 뉴스 아이템 제안은 시민이, 취재·보도는 언론사가

추진배경

외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짜뉴스 범람 및 언론 신뢰 하락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정부 혁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실현, 국민 신뢰 회복 필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18. 6. 5.) 中)

과제 발굴
<p>“뉴스 아이템 제안은 시민이, 취재·보도는 언론사가”</p> <p>언론사의 심층취재 보도를 지원하는 '기획취재 지원사업'에 시민들이 공익적 지정 주제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뉴스 소비자 중심의 기사 제작</p>

추진내용



추진성과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 환기 및 해결방안 모색
- 뉴스 소비자인 시민이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참여 저널리즘 구현 및 언론 신뢰 회복
- 국민이 제안한 취재 주제에 대한 심층기사 76건 보도

순번	국민제안 주제	언론사명	취재 주제	보도 건수
1	미세먼지 현황, 원인, 해결방안 등	경향신문	미세먼지 문제의 답은 과학기술과 정책의지다	12
2	노인들이 당면한 사회 문제	아시아경제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인권이 있는 노년의 삶	10
3		한국일보	성년 노인들의 사회	20
4	직장 내 차별, 갑질	민중의소리	'직장지옥' 시리즈	9
5	기자들의 삶 (기자의 현실, 언론사 생활 등)	기자협회보	기자들의 삶- 세계 언론인과의 대화	9
6	연금 문제	동아일보	연금생활 시대, 현안과 대안	12
7	일과 삶의 균형	동아일보	워라밸을 찾아서	4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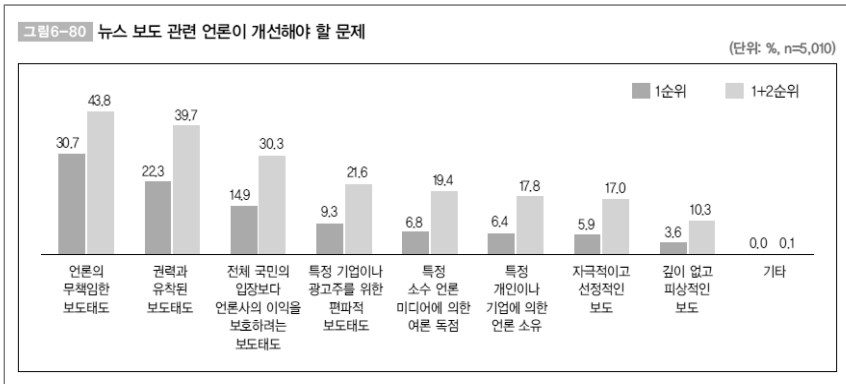
- 전용 페이지 구축을 통해 시민 참여 주제 상시 제안 활성화 및 심층기사 확산
- 시민 참여 주제를 언론사가 채택하여 심층기획취재를 하고자할 경우 공모·심사 과정 없이 일정 조건만 확인 후 취재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충 노력

추락하는 뉴스 신뢰도, 지탄받는 기자

2018년 초 뉴스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기자들은 비난 받고 있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모두를 놀라게 했던 기자와 쓰레기를 조합한 신조어인 ‘기레기’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로운 단어도 아니었다.

한국 언론의 문제가 무엇일까. 재단은 2017년 언론수용자의식조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국민들은 <한국 언론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무책임함, 권력과의 유착, 전체 국민의 입장이 아닌 언론사의 이익과 광고주가 우선인 태도, 깊이 없는 보도 등을 꼽고 있었다.

2017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중 ‘뉴스 보도 관련 언론이 개선해야 할 문제’ 조사 결과



국민이 꼽은 언론의 문제, 국민으로부터 해결방안의 열쇠를 찾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기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 언론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재단은 이미 ‘고품질 뉴스콘텐츠 생산과 뉴스 신뢰도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고 위에서 언급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었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 진단과 처벌] 등 각종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언론 신뢰도 꼴찌, 탈출할 길은 없나?] 등 포럼과 공청회도 진행했으며, 기자 대상 윤리 교육도 다수 운영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새로운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뉴스의 생산 과정, 그 첫

단계인 주제 선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주제로, 기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보도를 심층적으로 해준다면, 한국 언론이 지닌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 발상의 전환, 큰 변화의 시작

그래서, 재단이 기존에 시행하던 ‘기획취재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기획취재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언론사의 심층 취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취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뉴스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재단이 수행해온 대표 사업 중 하나다.

2017년까지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제(자유주제) 혹은 재단에서 지정한 주제(지정주제)에 대한 취재비를 지원해왔다.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간단했다. ‘지정주제를 재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기획취재 지원사업의 지정주제를 국민이 제안하는 것이다. 마침 기관 내부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 하나의 의견이라도 더 듣기 위한 노력

국민의 제안을 듣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창구가 필요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만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엔 무리였다.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보다 크고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포털인 <다음카카오>와 접촉, 협의를 진행하여 [스토리펀딩]이라는 서비스 내에 ‘대국민 취재보도 아이템 공모’ 코너를 개설했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단순히 취재 주제를 제안해달라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취재보도 아이টে를 제안 받는 이유와 제안된 주제가 어떻게 취재될 것인지에 대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자세히 소개했다. 더불어,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 삶, 집, 돈’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취재 주제를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개별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번 터지면 여론이 들끓거나 큰 주목을 받게 되는 사건의 경우 언론사에 제보하면 언론사에서 취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소하지만 국민들이 꼭 알고 싶어 하는 것, 큰 특종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등을 대체로 취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제안 주제’가 차별성이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16만 번의 관심과 128개 의견이 모여 실제 언론사의 취재 아이템이 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대국민 취재보도 아이템 공모’ 페이지는 약 1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28건의 제안 주제가 들어왔다. 재단은 국민들이 제안한 128건의 주제를 유사한 것끼리 묶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취재할 언론사를 모집했다.

언론사에서는 국민 제안 주제 중에서 각자 취재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취재 계획서를 제출했고,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언론사에서 재단 지원금을 활용하여 국민 제안 주제를 총 7건 취재했다.


대국민 취재보도 아이템 공모 페이지에 작성된 제안 댓글 일부




선민(수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도 비공무원도 아닌 사각지대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제도적 문제점과 심리적 문제점이 결합되어 있는 시선택 공무원을 취재해주세요.
 2018.03.24.20:47 | 신고



이민석
 취준생들 너무 힘이 듭니다.....지난번 국민청원에도 올라왔ㅇ긴한테 시험 응시료, 주말마다 전형 참석 위한 교통비 인적성 책값 등 비용이 만만찮아요 취업도 돈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리얼ㅠㅠㅠㅠ 취업준비기간동안 돈이 얼마나 드는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이런거 좀 다뤄주세요!!!!이런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게 맞는걸까요



생~~
 어린이집보육교사의 부당한근무시간과 부당한대우 원장들의 부정한운영실태에대해서~보육교사의 저우개선편비가 원장들의 이익추구수단으로이용되는것에대해취재부탁드려요 제보자료도있어요
 2018.03.19.00:25 | 신고



나래
 인생의 마지막 길을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연금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적자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몇 십년 후에 파산 지경에 이를지 이런 속설들에 관련하여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2018.03.26.18:02 | 신고

128건의 댓글을 카테고리화하여 언론사에 공지한 내용 중 일부

㉠ 일

- 살인적 근무환경 : 보육교사, 간호사, 방송 제작 현장, 직장인, 공무원 등
- 근로기준법 미준수 : 최저임금 미준수, 노동조합 미결성 업체 실태, 근로계약서 미작성 단속 및 규제
- 직장 내 차별, 언어폭력 : 근로자에 대한 언어폭력,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 갑질 :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불법파견, 위험의 외주화, 갑질 폭로 그 이후 피해자의 삶
- 임금 :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미지급 문제, 남녀 임금 격차
- 보조금 착취 : 채용 등으로 수령한 국가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
- 비리 : 친인척 채용 등 채용 비리, 사내 비리와 관련한 규제·처벌 현황
- 창업 : 해외 스타트업 사례, 국내외 창업 지원 환경

㉡ 삶

-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다양한 결혼 양상, 1인 가구 실태
- 삶의 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심층 취재 : 우리나라와 해외의 인식 비교 등
- 다양한 분야 종사자의 삶과 그 현실 : 특수직 종사자, 장애인 운동선수,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 대학원생 삶의 실태 및 현실
-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이야기 : 우리나라 산모들의 어려운 점, 사각지대에 놓인 산모들의 사례 등
- 기자들의 삶 : 기자들의 전문성 강화 노력, 기자의 현실, 직장 생활 모습 등
- 각종 연금에 대한 심층 취재

● 국민 제안 주제로 나온 보도 76건, 신문 1면을 장식하다

이를 통해,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한국일보, 민중의소리, 기자협회보, 동아일보에서 미세먼지 해결방안, 노인들이 당면한 사회문제, 직장내 갑질, 연금 문제 등의 주제로 총 76건의 보도를 완료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도는 지면 1면을 장식하는 등 그 심층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1 취재 주제별 보도 성과

순번	국민제안 주제	언론사명	취재 주제	보도 건수
1	미세먼지 현황, 원인, 해결방안 등	경향신문	미세먼지 문제의 답은 과학기술과 정책의지다	12
2	노인들이 당면한 사회 문제	아시아경제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인권이 있는 노년의 삶	10
3	노인들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한국일보	성난 노인들의 사회	20
4	직장 내 차별, 갑질	민중의소리	'직장지옥' 시리즈	9
5	기자들의 삶 (기자의 현실, 언론사 생활 등)	기자협회보	기자들의 삶-세계 언론인과의 대화	9
6	연금 문제	동아일보	연금생활 시대, 현안과 대안	12
7	일과 삶의 균형	동아일보	2020 행복원정대: 워라밸을 찾아서	4

신문 1면을 장식한 보도물 중 일부



● 보도 그 후, 언론계 전문가·시민·기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다

모든 보도가 끝난 후, 언론계 전문가 5인 그리고 재단의 시민참여혁신단 9인으로부터 보도물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받았다. 평가 기준은 총 4가지(①주제의 중요도 및 시의성, ②보도 내용의 전문성 및 심층성, ③공공이익에의 공헌 정도 및 사회적 활용 가치, ④취재방법의 적절성-취재기법의 전문성 및 보도윤리 준수 여부 포함) 였다. 언론계 전문가 5인의 평가 결과는 평균 91.3점, 시민참여혁신단 9인의 평가 결과는 평균 88.6점이었다. 언론계 전문가 5인의 평가 결과(91.3점)의 경우 언론사에서 자체 선정취재 주제에 대한 보도물에 대한 평가 결과(90.6점)에 비해 높았다.

실제 취재를 시행한 기자들로부터도 사업 관련 의견을 받았다. 특히 국민제안 주제를 취재한 기자들은 ‘국민 제안 주제를 취재한다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컸고, 그래서 이 취재는 달라야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심층 취재를 원하지만 언론사의 우선 순위에서는 조금 밀려있는 주제를 마음껏 취재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기자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다는 보람을 느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주제를 직접 제안해준 시민들께는 보도 내역과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의 작은 선물을 발송했다. 앞으로도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는 부탁의 의미기도 했다.

●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재단의 노력은 현재진행형

2018년 새롭게 도입한 사업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었다. 기관 자체 플랫폼이 아닌 포털의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니 정해진 시기에만 주제를 제안 받을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하게 해당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면서 보도 결과물까지 업로드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현재 기관 자체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1년 365일 수시로 취재 아이템 제안을 받아 국민제안 주제 취재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늘어난 제안 건수에 대한 취재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예산 확충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

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25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열린 국·공유재산 개발

한국자산관리공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열린 국·공유재산 개발

추진배경

- 국·공유재산 개발의 장애요인 존재
 - 지역주민 등 의사 반영을 위한 소통채널 부족
 - 기존의 Top-down(공사기획→주민이용) 개발방식에는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 부재
 -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은 후생(상업)시설 보다 사회적 필요시설 개발 희망
 - 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지역 상인들의 후생시설 도입 반대 민원 발생
 - 지자체의 사업 승인 지연 및 중단 발생
 - 주무부서간 사업목적 이견 또는 불일치로 의견 조율 필요
 - 민원 해결 및 생태면적 확보 요구 등으로 사업 승인 지연

추진내용

-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국·공유재산 개발 추진
 - 수익성 중심의 기존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 상생의 국·공유재산 개발 계획
 - 주민과 수요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이해상충 해결 및 수요 적극 반영
-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채널 확보
 - (사례1) 광고법조단지 공공보행통로 개발
 - 광고법조단지 개발사업을 “지역주민 참여사업”으로 선정
 - 수요기관(수원지방법원, 수원 고지검)과 매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11회)하여 ‘걷고싶은 거리’ 개발방향 설정
 - 캠프·지역주민 대표·수원시·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지원회(2회)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기존 상업시설 설계안을 폐기하고, 수요기관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걷고싶은 거리(공공보행통로)”로 사업계획 변경
 - (사례2) 창원시 복합공영 주차타워 개발
 - 진해구청과 협업하여 주민의견 청취 창구 마련

-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의료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1차) 반영하여 '복합 공영주차타워' 사업계획 승인 취득
- 추가 주민 의견청취를 통해 주차, 의료서비스 시설 외에 시니어카페, 다목적실 공간을 설계에 추가 반영(2차)

추진성과

-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 Win-Win(상생)의 국·공유지 개발
 - (사례1) 광고법조단지 공공보행통로 개발
 - 지역사회 주민 거주지역과 광고호수공원의 도보 접근성 대폭 개선
 - 공공보행통로 내 다양한 휴게시설 설치하여 주민 휴게공간 제공
 - 지역상권 보호 및 상생 실현
 - 지역사회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해 공공개발의 사회적 가치 강화
 - (사례2) 창원시 복합공영 주차타워 개발
 - 복합개발방식을 이용하여 舊주차장을 다목적 공공시설로 개발
 - 주차 공간 확대 및 건강생활지원 센터를 통한 지역주민 편의 제고
 - 시니어 카페 공간을 제공하여 노년층 일자리 창출 기여
 - 임대시설에 공익목적 우선 적용하여 국·공유재산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향후계획

-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개발 모범사례 전파 및 전수 적용
 -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발 확대
 - 캠프·지역사회·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정기적 개최
 - 사업 쏠단계 주민의견 청취 및 소통 노력 강화
 - 지역맞춤형 신규사업 발굴 활성화
 -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행정시설 공급 지속 확대
 - 청년창업·사회적 기업 공간 제공 등 상생 방안 수립

● 국·공유위탁개발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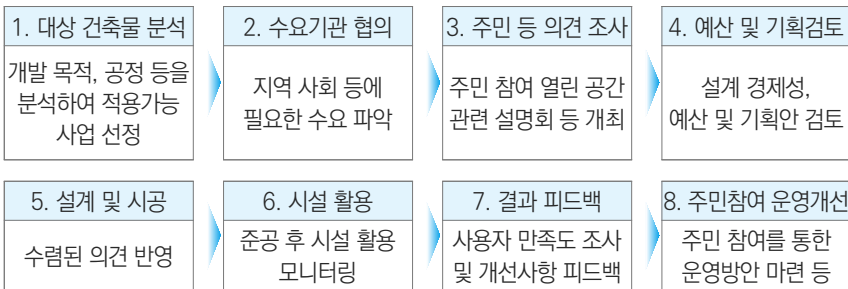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국가·지자체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자체적으로 비용조달 및 개발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 및 자체에 귀속되며, 위탁기간동안 시설 및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재정과 임대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9년 3월말 현재, 세종국책연구단지 등 29건의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총 34건의 개발사업을 진행 중으로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부문의 필요시설을 적기 공급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 주민편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유무형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시민의 목소리 반영으로 새로운 미래를 싹틔우다

캠코는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공공청사, 상업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지역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 요구 목소리가 있으나 사업추진 상 각종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캠코는 금번의 위탁개발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위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기존 개발방식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편익 극대화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설계 및 시공과정까지 지역주민이 참여하였고, 향후에는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으로 지속가능한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세부단계별 의견 반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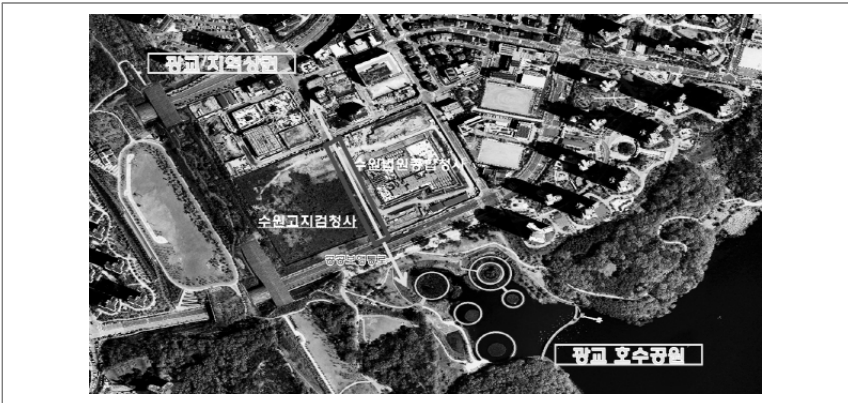
지역주민 의견반영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시행



- 시민의 길 조성으로 위탁개발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하다

수원법조단지를 개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지역상권과 광교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개발대상지 내에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간 물리적 거리가 단축되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거주지역과 공원과의 도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지역과 함께 하는 개방형 공공시설로 개발하여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참여확대와 소통채널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공보행통로에 다양한 벤치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개방감과 정부기관의 친근감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의견 반영은 인근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공개발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였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광교법조단지 공공보행통로 전경사진



또한, 캠프와 광고동 주민자치위원장, 수원시, 지역주민대표, 수요기관 등 27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하여 시민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계획을 변경 수정하여 쾌적한 공공보행도로로 개발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였다.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 우리가 만드는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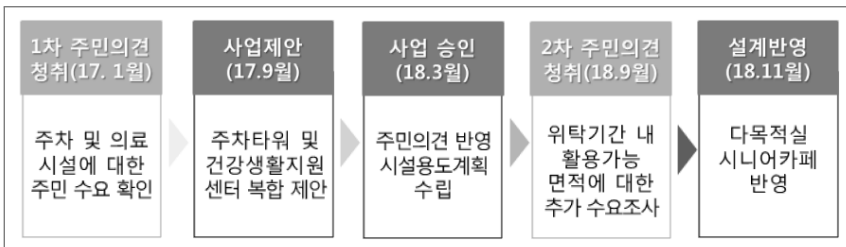
최초 창원시 소재 나대지에 공영주차장과 민간임대시설을 복합한 주차타워가 개발 될 예정이었다. 개발 예정 부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나대지를 인근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부지에 공영주차장과 민간임대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자 상가 상인들이 거센 민원을 제기하였고 차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사업진행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양방향적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1차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들이 주차 및 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주차타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복합한 시설을 개발사업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2차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민간임대시설 면적을 줄여 다목적실, 시니어카페 공간 등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공유공간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맞춤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주민의견 반영과정



● 다다익선 :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음

- 일석이조(복합개발을 통해 2개 부서 목표 달성)

주차타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복합개발하여 교통물류과와 보건행정과의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하나의 부지에 교통물류과와 보건행정과는 각자 부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서로 다른 개발사업을 계획 중이었다. 교통물류과는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고, 보건행정과는 개발 사업부지는 없었으나 확보한 국비를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나의 부지에 2개 부서의 의견이 달라 공영주차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개발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2개 부서에 두 가지 용도를 복합한 개발사업을 제안하여 부서의 필요를 모두 다 충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하여 친환경 정부 정책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개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가치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방재정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위탁개발에 있어 불가능이란 없다.

앞의 사례들과 같이 캠프코는 국·공유 위탁개발사업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초기부터 설계, 시공, 실제 준공까지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여 고객과의 점점 포인트를 구축하였다. 주민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이다.

캠프코는 앞으로도 열린 국·공유 재산개발 모범사례를 전사적으로 전파 및 전수하여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공유 개발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꾸준한 위탁개발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의 적기 공급’, ‘유류자산의 부가가치 창출 및 저활용재산 활용도 제고’라는 위탁개발사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키울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시민참여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열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인 쇄: 2019년 4월 30일

발 행: 2019년 5월 2일

발행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ISBN: 978-89-8191-969-6

인 쇄: 경성문화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